

UNIFICATION  
WHITE PAPER

통일백서 ● 2006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2006 통일백서』는 2005년도 1년간의 대북정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책에 나오는 통계의 기준시점과 본문내용의 서술시점은 2005년 12월 31일입니다.

『2006 통일백서』를 비롯하여 1991년부터 발간된 통일백서들은 통일부 홈페이지 [www.unikorea.go.kr](http://www.unikorea.go.kr) (자료실) 통일부 발간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발간사

---

지난 2005년은 광복 60년, 분단 60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컸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남북관계도 “제2의 6·15시대”라고 부를 만큼 여러 분야에서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남북간 왕래인원 9만명, 교역액 1조원, 금강산관광객 100만명, 이산가족 상봉인원 1만명, 남북회담 500회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간 경협방식이 일방적인 지원에서 남북간 상호호혜적인 방식으로 바뀌었고, 선전수단 제거 및 해군당국간 핫라인 구축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8·15민족대축전 당시에는 북한 대표단이 국립현충원과 국회를 방문함으로써 정치적 화해가 시작되는 등 남북관계는 질적으로도 일대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성과를 이룬 2005년이었지만 그 출발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2004년 7월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의 중단상황이 지속되던 가





운데, 북한이 2월 10일 핵보유를 주장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듯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돌파구를 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5월 남북차관급회담을 개최하여 남북 당국간 대화의 물꼬를 트고, 북핵문제도 정동영 대통령 특사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을 통해 ‘중대제안’을 제시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을 향한 전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대제안은 북한을 제4차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고, 북핵폐기에 관한 최초의 합의인 ‘9·19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15차에서 제17차까지 세 차례에 걸친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비핵화를 재확인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외연을 넓혀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합의함으로써 남북관계가 확대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비롯하여 한 해 동안 총 34회의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인 개성공단에는 전력과 전화가 연결되고 제품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열어 우리 기업들이 제3국에서가 아니라 개성에서 북한과 직접 경험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지역 같은 건물에서 북한 공무원과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은 남북 공동경제구역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평화특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5년은 이산가족의 아픔과 한을 달래기 위한 노력에서도 진전을 본 한 해였습니다. 이산가족 1세대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상봉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화상상봉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총 3차례의 화상상봉과 2차례의 대면상봉을 실시하였고, 상봉 정례화를 위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착공, 건설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연말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된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정부의 통일정책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동의 위에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확고해진 것입니다.

2005년이 분단과 동시에 추진되어온 60년간의 통일노력에 한 획을 긋는 해였다면, 2006년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 나가면서 평화를 제도화하는 해입니다. 특히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2006통일백서』에는 2005년을 중심으로 그간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가 기울여온 노력과 성과를 담았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대북정책에 관한 사실적인 기록물로서 국민들이 대북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06. 3

통일부장관 이종석

# 차 례

## 발간사

### 제1장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제1절 평화번영정책 추진환경	16
제2절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	21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21
2.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조성	25
3. 남북공동번영의 토대 마련	26
4.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29

### 제2장 남북대화의 진행

제1절 남북대화 추진현황	36
제2절 남북차관급회담	40
제3절 6·17 특사면담과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42
1.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42
2. 6·17 특사면담	43
3.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46
제4절 남북장관급회담	47
1.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47
2.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49
3.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52
제5절 군사분야 회담	56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56
제6절 경제분야 회담	59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위원급 접촉	59
2.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69
3.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72
4.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74
5.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및 남북해운협력협의회	76
6. 제1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	80

# CONTENTS

제7절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82
1.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82
2.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84
3. 조류인플루엔자 남북실무접촉	89
4. 8·15 남북통일촉구경기 실무접촉	91
5.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	93
6.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96
<b>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심화</b>	
제1절 상생·번영의 남북교류협력	102
1.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102
2. 평화조성에 기여하는 남북경협	103
3.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	104
제2절 남북교역	105
1. 남북간 물자교역	105
2. 위탁가공교역	109
제3절 남북경제협력사업	110
1. 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110
2. 남북관광협력사업	113
3. 대북식량차관 제공	115
4. 새로운 남북협력사업 추진	118
제4절 개성공단사업	122
1. 추진현황	122
2. 1단계 100만평 개발	125
3. 안정적인 사업 추진기반 구축	129
제5절 육·해·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	142
1. 육로	142
2. 해로 및 항공	146
제6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147
1. 남북공동행사	147
2. 지방자치단체 교류	150
3. 분야별 교류	152

##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제도화	164
1. 상봉방식의 다양화	164
2. 민간차원의 교류 지속	169
3.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노력	171
제2절 대북지원의 내실화 도모	173
1. 정부차원의 지원	174
2. 민간차원의 지원	177
3.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180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182
1. 국내입국 현황	182
2. 정착지원 내용	183
제4절 북한인권 개선 노력	188

## 제5장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제1절 추진경과	196
제2절 경수로사업 중단	199
1. 사업 중단 조치	199
2. 사업 중단기간 중 보존·관리활동 시행	200
제3절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	203

## 제6장 통일정책의 지지기반 확충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210
1. 정책과정상 폭 넓은 의견수렴	210
2. 국민참여의 활성화	211
3. 고객중심의 정책평가	213
4. 민간 통일단체 활동 지원	213

# CONTENTS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216
1.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의 다양화	216
2. 홍보매체의 다각화	220
3. 언론매체 활용 홍보	222
제3절 통일교육의 내실화	224
1. 통일교육 추진체계 확립	224
2. 통일교육의 다양화	226
3.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230
제4절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 강화	235
1. 주요국과의 정책협의	235
2. 통일주재관 운용	236
3. 국제 네트워크 강화	238
4. 해외 정책홍보 확대	238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개방 확대	242
1. 북한 정보자료 제공	242
2. 북한 정보자료 개방 확대	243
제6절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업무 혁신	247
1. 혁신비전과 전략	247
2. 통일업무 혁신성과	250

## 부 록

2005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259
------------------	-----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 I

##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제1절 평화번영정책 추진환경

제2절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

냉전해체 이후 근본적으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 있는 세계는 과거와는 달리 테러, 대량살상무기, 환경 문제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증대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투자와 교역확대 등 협력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 영토문제 등 경쟁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러한 불안정성의 핵심 요인이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

# I

---

## 평화번영정책 추진

---

냉전해체 이후 근본적으로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 있는 세계는 과거와는 달리 테러, 대량살상무기, 환경 문제 등 새로운 안보위협이 늘어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투자와 교역확대 등 협력적 요인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 영토문제 등 경쟁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이러한 불안정성의 핵심 요인이다.

참여정부는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출범하였다. 국제적 불안요소와 어려운 대내외 상황 속에서도 평화번영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당면 안보현안인 북핵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다. 불안정한 정전상태에서 벗어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남북 실질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키고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를 촉진하여 왔다. 이와 더불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다.

분단 60년, 광복 60년인 지난 2005년도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룩한 한해였다.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자 10,000명, 남북 교역액 10억달러,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남북회담 500회 등 양적인 성장과 함께 남북 해군당국간 핫라인 개설, 새로운 경협방식·경협협 의사무소 개설 등 질적인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함으로써 초당적인 협력 하에 대북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1절 평화번영정책 추진환경

냉전해체와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불안정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주체의 테러 위협,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비군사적 영역의 안보문제 등 새로운 요인들이 세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이 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등 새로운 국제안보체제 형성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2002년 이후 재부상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동북아 정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테러와 비확산 분야에서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미·일 대 중·러의 전략적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등 사안에 따라 실용적 협력과 대립이 교차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미·일간에는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일간에는 지역 주도권 경쟁을 벌이

분단 60년, 광복 60년인 지난 2005년도는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이룩한 한해였다.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자 10,000명, 남북 교역액 10억달러,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남북회담 500회 등 양적인 성장과 함께 남북 해군당국간 핫라인 개설, 새로운 경협방식·경협협 의사무소 개설 등 질적인 진전을 이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함으로써 초당적인 협력 하에 대북정책을 투명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제1절 평화번영정책 추진환경

냉전해체와 세계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불안정 요인이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주체의 테러 위협,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비군사적 영역의 안보문제 등 새로운 요인들이 세계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은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이 대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새로운 국제안보체제 형성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2002년 이후 재부상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동북아 정세는 미국을 중심으로 테러와 비확산 분야에서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간 전략적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미·일 대 중·러의 전략적 경쟁구도가 형성되는 등 사안에 따라 실용적 협력과 대립이 교차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미·일간에는 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중·일간에는 지역 주도권 경쟁을 벌이

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세계적 패권체제와 지역적 세력균형체제가 불안정하게 병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 상호간의 유동적인 불안정 구도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구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북핵문제는 2005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이 당면한 최대 불안요인이었다. 2005년 1월 미국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발언 이후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월 10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보유선언’과 ‘6자회담 무기한 참가중단’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어 5월에는 8,000개의 사용후 핵연료봉을 추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초강경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최대의 위기 요인으로 급부상하였다.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을 맞았던 북핵문제는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남북차관급 회담과 6월 17일 정동영 대통령특사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에서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였다. 6·17 면담시 대북 ‘중대제안’을 접한 김정일 위원장은 6자회담 참가용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한미 양국 대화와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통해 6자회담이 재개되었다. 9월에 재개된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을 이루어냄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위기국면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9·19 합의 직후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 후 NPT 복귀와 IAEA사찰수용을 주장하였다. 11월에 개최된 제5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경수로 문제를 재차 거론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6자 회담은 새로운 장애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문제를 중요 대외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2004년 10

월에는 「북한인권법」이 발효되고 2005년 8월에는 UN 대북 인권특사를 임명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UN에서도 11월에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움직임은 동북아지역에서는 일본의 대북제재 움직임과도 맞물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 핵문제, 인권 문제, 위폐 등 대북제재 문제 등이 핵심의제로 부상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7·1경제관리개선조치 3주년을 맞아 내각중심의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곡물 및 전력증산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이래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외 개방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선진경제 및 기술도입을 위해 기술 관료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아리랑공연에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반면에 개혁조치 이후 나타나는 물가상승, 빈부격차 확대,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에도 부심하고 있다. 주민에 대해 휴대폰과 국제전화의 사용을 통제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2005년 8월에는 대북지원을 위해 북한에 체류중인 NGO 기구 및 인원 축소를 요구하였으며, 10월부터는 쌀의 시장판매를 금지하고 곡물국가전매제를 시행하는 등 체제의 불안정 요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점진적이고 부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취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4년 하반기 이후 중단되었던 남북관계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7 면담이후 분야별 남북대화가 전면적으로 복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군간 핫라인 설치,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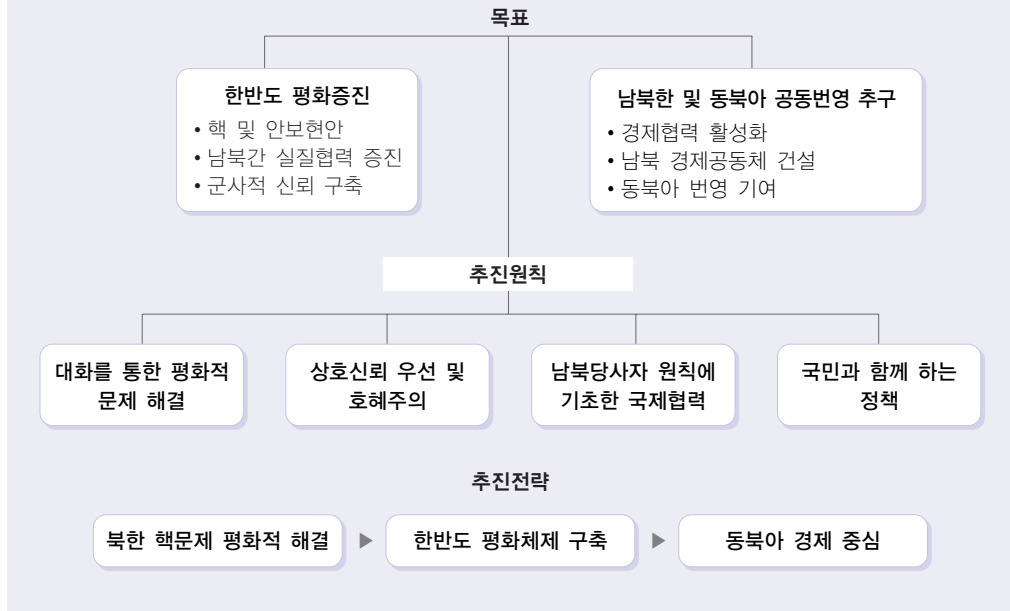
소 개소, 이산가족면회소 착공 등 남북관계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서  
는 등 남북관계는 명실 공히 '제2의 6·15시대' 를 맞이하고 있다. 남  
북관계는 이제 경제협력 차원을 넘어 평화문제에 대한 초보적 협의를  
개시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은 조심스럽기는 하나 점진적인 개혁·개방  
의지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  
계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북핵문제, 미국의 대북제재의 강화 등 외부  
적 요인에 의해 일시적인 소강국면을 맞을 수 있으나 남북간 대화와  
교류는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우  
리정부의 일관된 대북 평화변영정책 추진의 성과인 동시에 향후 정  
책 추진에 있어 유리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  
북아정세도 북한 핵문제, 미국·중국·일본 등 역내 강대국간 역학  
관계 변화에 따라 불안정성이 증가될 수 있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  
으나 장기적으로는 역내 국가간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 6자회담의  
성공적 추진으로 한반도의 '평화' 와 '번영' 의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평화번영정책의 체계

개념 :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를 동북아경제중심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참여정부의 포괄적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 제2절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

### 1.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2002년 10월 다시 대두된 북핵 문제는 우리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정부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보유해서는 안되며,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원적·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북핵 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확고한 3원칙 아래 북핵 문제의 조속하고도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왔다. 또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상호 해결을 촉진하는 관계에 있다는 전략적 인식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시키는 정책 기조하에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병행 전략에 입각하여 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력히 천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고히 하는 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한 설득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이라는 절충점을 도출함으로써 핵상황의 악화와 군사적 긴장을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2004년 하반기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 ASEAN+3 계기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등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해 북핵 불용,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의 전략적 결단 필요성 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다. 특히, 2005년 부산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불용, 평화·외교적 해결, 조속하고 검증가능한 핵프로그램 폐기 등 3원칙과 함께 9·19 공동성명을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공동성명상 상응조치 이행공

약을 재확인하였다.

우리 정부와 유관국들이 노력한 결과 2003년 4월 북경에서 미국, 중국, 북한이 참가한 3자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3년 8월 베이징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되어 다자적 해결 노력이 전개되었다. 이후 2년여 동안 2회의 6자회담(2004년 2월 제2차 6자회담, 2004년 6월 제3차 6자회담)과 2회의 실무그룹회의가 진행되었다. 3회에 걸친 6자회담을 통해 회담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포괄적·단계적 해결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북핵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서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북핵문제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 보유 주장 및 6자회담 무기한 참가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 성명으로 북핵상황이 더욱 악화되어가자 정부는 핵문제를 조기에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남북의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제4차 6자회담



차원에서 「중대제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중대제안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KEDO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우리가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3년 이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북한에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할겠다'는 것으로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전략적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5월 남북차관급회담을 통해 중대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그리고 한달 뒤 6·15 5주년 공동행사를 계기로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정동영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6·17 면담')을 통해 중대제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과 핵폐기에 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대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7월중이라도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궤도를 이탈하였던 북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우리 정부가 마련한 중대제안은 제3차 6자회담 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좀처럼 일정을 잡지 못했던 제4차 6자회담 개최에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대제안이 북핵문제의 한 축인 KEDO 경수로사업과 대북에너지 지원에 대한 해결의 열쇠역할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두차례로 나누어 진행된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폐기에 관한 최초의 합의인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임을 공약하고 유관국들은 경제협력, 에너지 지원, 관계정상화 등 상응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및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에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넘어서 한반도 및 동북아 냉전구조 해체 과정이 개시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9·19 공동성명」은 '94년 제네바 합의와 달리, 우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남북이 소통하여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더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처럼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구상을 제시함으로써 참여국간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논의와 의견 접근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적극 경주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해왔다. 특히 2002년 10월 북핵 문제 대두 이후 총 10차례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한측에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태도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남북대화를 통한 대북 설득은 6자회담에 북한이 호응해 나오는 데 기여하는 등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과거 북한은 북핵문제를 북·미간에 해결할 사안으로 보고 남한과는 협의를 기피하였으나 이제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등 유관국 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남북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의 유용한 채널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다.

「9·19 공동성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미국의 대북 금융조치 및 북한 위폐문제에 대한 북·미간 입장 대립으로 6자회담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우리정부는 핵문제 이외의 문제가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6자회담 과정이 지속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담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남북대화를 통해 6자회담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 2.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조성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불안정한 정전체제 하에서의 상호불신 및 남북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면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남북간 교류협력의 심화·확대 및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2005년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안정적 확대·발전이 군사안보 분야의 긴장완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실질적 여건 및 환경을 한층 성숙시킴으로써 경제와 평화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북핵문제 속에서도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개발 등 3대 경협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하였고, 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개최되어 수산협력을 통한 서해 평화정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의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지역의 선전수단 제거를 완료하고 서해 해군당국간 통신연락소를 개소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한편,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간 별도의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반이 갖추어졌다. 6자회담과는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간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9·19공동성명」은 시대적 과제인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대해 남북한이 보다 진지하게 협의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반세기 동안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체제를 변경하는 과정인 만큼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진전상황, 그리고 동북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우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평화증진을 가속화하고, 남북간 군사·비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성급 군사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등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미국 등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보장을 통해서야 실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기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남북 및 관련국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통해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 3. 남북공동번영의 토대 마련

해방이 된 지 60년이자 분단 60년을 맞이하는 해였던 2005년에 우리는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양적 발전과 제도화로의 진입이라는 질적 전환을 통해 「제2의 6·15 시대」를 열었다. 2004년 7월 이후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였던 남북대화는 남북차관급회담(2005년 5월 16일~19일)을 계기로 재개되었으며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6·17 면담」이후 분야별 다양한 대화채널이 정상화되었다.

2005년 한해 동안 남북대화는 34회 개최되었으며 대화의 분야도 다양해지고, 회담의 내용도 점차 구체화, 전문화되어 실질적인 대화가 정착되었다. 회담 장소도 개성, 문산, 금강산, 설악산 등으로 확대되었다. 남북간 인적왕래도 급증하여 2005년 1년간의 왕래인원이 분단이후 2004년까지 60년간의 왕래인원인 85,400명을 앞질러 88,384명에 이르렀다. 남북간 교역액도 급증하여 2005년 남북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51.5% 증가한 10억5,575만 달러에 이르러 연간 남북교역 10억불 시대에 진입하였다.

남북경제협력의 핵심 선도분야인 3대 경협사업도 본 궤도에 들어섰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경우, 도로는 2004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여 2004년 12월 1일부터 정상운행 중이며 철도는 마무리 공정이 진행 중이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30일 착공하여 2004년 6월 30일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가 완공되었으며, 2005년 9월 12일에는 본단지 1차 5만평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입주가 시작되었다. 2006년에는 100만평의 본단지 1단계 조성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금강산 관광도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실시된 후 관광객이 급증하여 2005년에는 298,247명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누적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2005년은 남북경제협력에서 법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질적인 전환이 일어난 해이다. 2005년 5월 3일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남북경협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철폐함으로써 남북경협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2005년 8월 1일에는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에 관한 합의서」 등 9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되어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개선·확충되었다. 북한 역시 2005년 7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여 남북경제협력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5년 10월 28일 개성에 개소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는 분단이후 최초로 북한지역에 상주하는 당국 사무소이다. 이 사무소는 남북경협을 위해 종래 중국 등 제3국에서 중개인을 통하던 간접거래에서 남북당사자간 직접 접촉을 통해 직거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로서 향후 안정적인 경협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2005년에는 3,151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여 이산가족 상봉자 수가 1만명을



돌과하여 13,151명에 이르렀으며, 6,955명이 생사를 확인하여 생사확인자 수도 3만명을 넘어서서 30,901명에 이르렀다. 또한 2005년에는 대면상봉 이외에 처음으로 화상상봉을 실시하여 1,323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등 보다 상봉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대면상봉도 정례화·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또한 그 동안 지연되었던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이 8월 31일 개최되어 이산가족의 염원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접근하게 되었다.

정부는 2005년에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35만톤, 식량 50만톤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민간단체들도 당국간 관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중에서도 농업용 비닐을 북한측 수요에 맞추어 시의성 있게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대북지원으로 남북간 신뢰 유지에 큰 역할을 하였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위와 같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에서는 경제·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물자 공급·유통 확대를 위해 시장기능을 강화하고 인센티브제 등이 도입·확산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는 주민들 사이에 실용주의적 가치관과 시장경제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는 당·정 간부간의 세대교체 추진 및 실무중심의 경제분야 인사 기용, 실리사회주의 개념 도입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

‘7·1 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재정적자 증가, 사상해이 등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중국·베트남의 경우에도 개혁·개방과정에서 물가상승 및 부정부패 확산 등 부작용으로 인해 개혁·개방이 일시 후퇴한 바 있으나 각각 남순강화(’92년, 중국), 도이모이(’86년, 베트남)를 통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사례를 고려해 볼 때

북한은 개혁·개방의 속도와 범위를 일시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은 있으나 변화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직접적으로는 체제생존을 위한 북한 스스로의 자구노력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일관된 ‘평화번영정책’ 추진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정부가 대북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취지에서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원칙 중 하나로 삼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선,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초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 왔다.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대북접촉 과정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법과 제도 그리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정책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노력해왔다. 아울러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국회 및 정당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제도화하여 초당적인 합의 형성에 힘써 왔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국민들이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민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장을 마련하여 국민의견을 반영한 정책추진에 힘써왔다.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공동체 운영을 통해 갈등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원활한 정책추진 여건을 조성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정착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고객마일리지」, 「통일서포터즈」 제도를 도입하여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전문가 및 국민 모니터링

단이 직접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 그 의견을 정책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정책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 내용과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통일교육 기반과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통일교육에 힘쓰는 한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홍보를 강화하였다. 2005년 12월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아래 대북정책을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은 무엇보다 의미 있는 성과였다.

국민적 합의를 위한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이념 논쟁과 남북 협력비용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냉전의식을 극복하고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제17차 남북장관

제주

2005. 12. 13 ~ 12. 16

MINISTRY OF UNIFICATION



## II

### 남북대화의 진행

제 1 절 남북대화 추진현황

제 2 절 남북차관급회담

제 3 절 6·17 특사면담과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제 4 절 남북장관급회담

제 5 절 군사분야 회담

제 6 절 경제분야 회담

제 7 절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광복 60주년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었다던 2005년도는 10개월간 중단상태에 있던 남북대화가 다시 정상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의 협력이 확대된 한 해였다. 한 해 동안 분야별 남북회담을 총 34회 개최하였고 6·17면담,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6자회담을 측면 지원하는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

# II

---

## 남북대화의 진행

---

광복 60주년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이었던 2005년도는 10개월간 중단상태에 있던 남북대화가 다시 정상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의 협력이 확대된 한 해였다. 한 해 동안 분야별 남북회담을 총 34회 개최하였고 6·17면담,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6자회담을 측면 지원하는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상호호혜적 경협을 추진하는 한편 경협의 범위를 농업·수산업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에도 합의하는 등 남북간 협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



## 제1절 남북대화 추진현황

대화 복원의 물꼬를 튼 것은 5월 개최된 남북차관급회담이었다. 대화가 일시 중단된 지 10개월여만에 차관급 당국회담이 개최된 것은 그간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원칙에 대해 북한이 호응했다는 의미도 있다.

남북차관급회담 합의에 따라 정부는 평양에서 진행된 6·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였다. 행사기간중 우리측 단장으로 방북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였다. 면담을 통해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6자회담 복귀 용의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에 합의하였다. 6·17 면담은 북핵문제 해결이 중대 국면으로 접어든 시기에 남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한 의미있는 자리였다. 이후 경색국면에 있던 6자회담이 재개되고 남북간에는 제15차 장관급회담, 8·15 남북공동행사 등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이러한 남북 화해협력 흐름속에서 2005년 한해 동안 남북회담은 정치분야 10회, 군사분야 3회, 경제분야 11회, 사회문화분야 10회 등 총 34회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남북관계 전반을 조율하고 분야별 회담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장관급회담이 세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한편,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제반 현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비롯한 경험 논의 범위 확대 등 여러 협력방안들에 합의,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보장을 위한 노력과 군사적 긴장완화 실천방안 모색에 합의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단초도 마련하였다.

군사분야에서는 3차례 실무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당국자간 서해통신연락소 운영 등 서해상의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합의·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 공동어로수역 설정 합의 등 수산분야 협력을 통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노력도 이어졌다.

경제분야 협력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기존 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일방적 지원에서 벗어나 상호 부족한 요소를 보완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에 합의하고, 농업·수산업 등으로 경험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또한 그동안 미발효 상태로 있던 경험 관련 합의서가 발효되고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도 개소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각 실무회담들이 개최되어 세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 등으로 회담분야가 확대되었다.

사회문화·인도 분야 회담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화상상봉이 이루어졌으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착공식도 진행되었다. 다만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이 국군포로·납북자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데 대해 북한이 소극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2005년에도 남북회담은 정례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남북간 현안에 대해 구체적,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 소모적인 상호비난과 논쟁을 넘어 실사구시적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실질협의 중심의 회담문화 창출노력도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2005년도 남북대화를 통해 얻어낸 가장 큰 성과는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공동번영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그 구체적 추진방안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협의했다는 데 있다.

### 남북회담 개최현황

구 분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 계		165	27	8	33	38	25	34
정치분야 (41)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1	1				
		남북특사접촉	4	4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	5	5				
		통신·보도 실무접촉	2	2				
		의전·경호 실무접촉	1	1				
	남북장관급회담	17	4	2	2	4	2	3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1			1			
	남북차관급회담	1						1
	특사파견	4	1		1	1		1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3						3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2						2
군사분야 (34)	남북국방장관회담	1	1					
	남북군사실무회담·수석대표접촉	10	3	2	3	2		
	남북군사실무접촉	10			6	4		
	군사통신실무자접촉	1			1			
	동해선통신선연결실무접촉	2				2		
	장성급 군사회담	2					2	
	장성급 실무대표회담·수석대표접촉	6					3	3
	장성급 군사통신실무접촉	2					2	
경제분야 (6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급접촉	14	1		2	4	2	5
	남북농업협력위원회	1						1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	2	2					
	금강산관광활성화당국회담	2		1	1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5			1	2	1	1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10			3	5	2	
	임남담 공동조사실무접촉	1			1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2			1		1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1			1			
	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		1	1		1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1		1				

구 분		합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제분야 (61)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5			2	1	1	1
	남북해운협력협의회	1						1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1						1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1						1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1		
	청산결제실무협의	3				1	2	
	청산결제거래 위한 은행접촉	2					2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4			1	3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1					1	
사회문화 인도분야 (29)	남북적십자회담	6	2	1	1	1		1
	남북적십자실무접촉	6			2	3	1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실무접촉	3						3
	면회소건설추진단회의	3				3		
	북측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실무접촉	1						1
	8·15 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2						2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1						1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 실무접촉	2						2
	용천재난구호회담	1					1	
	아시아경기대회참가실무접촉	2			2			
	U대회참가실무접촉	1				1		
	아테네올림픽공동입장실무접촉	1					1	

## 제2절 남북차관급회담

2004년 7월 이후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 2월 10일 북한의 핵 보유 선언 등으로 북핵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속적으로 북한측에 촉구하였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촉구에 대해 5월 14일 북한은 권호웅 남북장관급회담 북한 단장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통해 개성에서 차관급(부상급) 당국간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차관급회담은 당초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협의가 예정보다 이틀 연장되어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수석대표	이봉조(통일부 차관)	김만길(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대 표	김응희(통일부 부장) 한기범(통일부 국장)	전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박용일(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회담에서 남북은 핵문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등 상호 관심현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하며,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경우 우리 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정립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관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6·15공동선언발표 5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남북 당국대표들이 함께 참가할 것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의 진전에 관심을 나타내면서도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였다. 쌍방은 두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제15차 장관급회담 개최, 6·15 통일축전에 당국대표단 파견 등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하고 회담을 마무리 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1. 남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
2. 「6·15 통일대축전」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 진행
3. 제15차 장관급회담을 6. 21~24, 서울에서 개최
4.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5. 21부터 북한에 봄철비료 20만톤 제공

### 제3절 6·17 특사면담과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1. 6·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6·15 통일대축전(평양)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005년 5월 24일과 27일, 28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수석대표	김웅희(통일부 부장)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과장) 안진용(통일부 과장)	정금철 김성혜

쌍방은 당국대표단 구성 및 규모, 체류일정, 방북경로 등에 관한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한 끝에 9개 항목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합의서 요지

1. 쌍방은 각기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20명의 대표를 파견, 남측은 대표단에 자문단, 지원인원, 기자를 50명 더 포함
2. 체류기간은 2005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를 가짐.
3. 왕래수단은 남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해직항로로 왕래
4. 편의보장, 신변안전보장, 기자 취재활동, 기타 실무절차 문제 등

한편, 북한이 6월 1일 판문점을 통해 행사에 참가하는 대표단 규모 축소를 요청해 옴에 따라 방북인원은 당초 합의보다 30명이 적은 40명으로 조정되었다.

**2. 6·17 특사면담**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행사에 남북에서 각기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6·15 기념행사에 당국대표단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행사기간 중인 6월 17일 우리측 정동영 단장은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방문하여 2시간 30분 동안 단독 면담하였다.

정동영 단장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5월 차관급 회담에서 준비중임을 밝힌 중대제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과 핵폐기에 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중대



6·17 면담 당시 정동영 대통령 특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찬장면



제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하면서 7월중이라도 6자회담에 복귀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특사는 김정일 위원장과 남북관계 발전방향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8·15 광복 60주년 공동행사에 북한 당국대표단 파견,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및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에 관해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 6·17 특사면담 주요내용

### 1. 노무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 전달

- 정동영 장관은 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대한 신념과 철학,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노대통령 구두 메시지를 전달

### 2. 북핵 문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

- 정동영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 △대화를 통한 유익한 방향으로의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
-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 여전히 유효 △미국의 북한 인정 및 존중의사가 확고하다면 7월중이라도 6자회담 복귀 △핵문제 해결시 NPT 복귀, IAEA의 철저한 사찰 수용 용의표명 △핵물질 이전·핵실험 금지 용의 표명

### 3. 김정일 위원장, 장거리 미사일 폐기 용의 표명

-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국가가 된다면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 4.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협의

#### ① 8·15 남북공동행사에 북한 당국대표단 파견

- 정동영 장관은 6·15 행사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8·15 행사에 북한 당국대표단 파견을 요청
- 김정일 위원장은 비중있는 인사를 북한의 당국대표단으로 파견할 것임을 표명

#### ② 장성급군사회담 재개 및 수산당국회담 개최

- 정동영 장관은 장성급군사회담을 재개하여, 서해상에서의 불안정한 평화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 함께 어업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산당국회담을 제의
- 김정일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 이라고 원론적으로 답변
- ③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 및 화상상봉 실시
  - 정동영 장관은 8·15 계기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할 것을 제의
  - 김정일 위원장은 금강산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는데 동의
- ④ 남북간 철도 연결 문제
  - 정동영 장관은 남북간 철도 연결과 관련, 동해선 구간의 경우 우리 측 일부 구간(강릉-고성)에 철도가 부설되어 있지 않으며, 동해선 해안선 철도 건설의 난점을 설명
  - 이에 김정일 위원장은 기존의 동해선 우선 연결 제안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6·17 면담은 참여정부 이후 최초의 대통령 특사방북으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한측의 호응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6·17 면담을 계기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8·15 광복60주년 남북공동행사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서 남북 상호 신뢰증진과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에 큰 역할을 하게 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제 15차 남북장관급회담  
**3.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6. 21~24, 서울) 합의에  
 따라 8·15 민족대축전에 쌍방 당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한 실무접촉이 2005년 7월 22일과 8월 2일 개성에서 개최되  
 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수석대표	김용희(통일부 부장)	전중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대 표	김기웅(통일부 과장) 김진홍(통일부 과장)	정금철 김성혜

남북은 1차 실무접촉에서 당국대표단 규모, 체류기간, 이동경로 문  
 제 등을 협의하고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한 데 이어 추가로  
 2차 접촉을 진행, 행사 세부일정을 협의하였다.

#### 합의문 요지

1. 대표단의 구성과 규모는 각기 편리한대로 하고, 단장은 6·15 민족통일  
 대축전때와 같은 급으로 함.
2. 기간은 2005년 8월14일부터 17일까지 하며, 세부일정은 판문점을 통  
 해 협의·확정, 쌍방 당국대표단간에 공동행사 등을 가짐.
3. 왕래수단은 북한측 비행기를 이용하며, 서해직항로로 함.

## 제4절 남북장관급회담

1.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5차 장관급회담은 2005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수석대표	정동영(통일부 장관)	권호웅(내각 책임참사)
대 표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최영건(건설경제공업성 부상)
	배종신(문화관광부 차관)	김만길(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
	김천식(통일부 국장)	신병철(내각 참사)
	한기범(통일부 국장)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회담개최 1주일여 전 열린 6·15 공동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6·17 면담」시 협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제2의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였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이 한반도 냉전종식, 평화정착, 공동번영을 함께 추구해나가야 함을 강조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제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핵문제는 국제문제인 동시에 우리 민족문제임을 지적하고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남북이 이 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남북관계 현안과 관련해서는 「6·17 면담」 결과를 이행하는 문제를 중점 협의하였다. 또한 여러 가지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위해 남북

장관급회담을 분기별로 정례화해야 하며, 남북관계도 실용, 실리, 실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호혜주의와 실천 중시의 정신에 따라서 추진·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종목표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단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8·15민족공동행사에 북한의 비중있는 당국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밝히고, 8·15 광복절을 계기로 금강산 이산가족상봉행사와 화상상봉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민족공동번영을 도모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남북간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협력이 되도록 하자고 하였다.

남북은 두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차례의 대표접촉을 통해 상호의견을 조율, 「6·17 면담」시 합의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문제를 중심으로 12개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채택·발표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1.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7월 중 개성에서 진행
2.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분위기가 마련되는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
3.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을 8.26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중 완료
  - 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
4.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범 개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 10경 개성에서 개최

5. 을사 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
  -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 추진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6.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당국이 직접 협의·결정
7. 서해 평화정착 촉진을 위해 경추위 산하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중 개최,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 문제들을 협의·해결
8.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개최
9. 북한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
10.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에 식량 제공, 구체적 절차는 경추위 제10차회의에서 처리
11. 경추위 제10차 회의를 7.9~12 서울에서 개최
12. 제16차 장관급회담을 9.13~16 백두산에서 개최, 제17차 장관급회담을 12월중 남한지역에서 개최

제15차 장관급회담 이후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이 재개되는 등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8·15 공동행사의 성공적인 진행, 남북 군사 당국간 통신연락소 설치, 농업·수산업·경공업·광공업 등 남북경협의 확대·발전, 화상상봉 실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져,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이러한 여건에서 제16차 장관급회담이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 대표단은 제15차 때와 동일하였으나 북한은 김만길 대표가 맹경일 조평통 서기국 부장으로 교체되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데 중점을 두면서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등 장관급회담 본연의 임무를 충

실히 수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회담에 임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6·17 면담」을 계기로 핵문제에 대한 남북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을 평가하고 4차 6자회담 2단계회의에서도 이러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우리 정부의 송전제안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구상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제안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검토를 촉구하고, 제4차 6자회담이 성과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선적 과제로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군사당국자간 대화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였다. 또한 당면한 인도적 과제로서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이 우선 시범사업 대상으로 제기한 2천명의 인사들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사업이 조속히 실시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이미 합의한 사항들 중에서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였다. 특히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이 늦어지고, 북한이 임남댐 물방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조속히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밖에 항공분야 협력과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제15차 장관급회담 이후 쌍방이 서로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기간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된데 대해서 평가하면서, 6·15공동선언 발표 5돌과 광복 60년 기념행사는 온 겨레에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진행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제반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회담 기간중 정동영 통일부장은 북한 핵심관계자를 별도로 면담하여 남북간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미국·일본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1. 남북관계에서 일체 체면주의를 버리고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함.
  -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넓은 관념과 관행을 없애고 남북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협의, 실천
2.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적극 모색
  -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3.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촉진시키고 남북 경협을 실질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함.
  - ① 경제협력의 장애를 제거하고, 투자 및 유무상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 ②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임진강 수해방지와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 쌍방이 필요로 하는 협력사업들을 경추위 제11차 회의와 관련 실무접촉들을 통하여 협의·해결
4. 이산가족 문제해결 등 인도주의적 사업들을 적극 추진
  - ① 11월 초에 제12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올해안으로 2차례의 화상상봉 실시
  - ②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문제를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
5. 『겨레말큰사전』 공동 편찬사업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적극 지원
6. 제17차 장관급회담을 12. 13~16 제주도에서 개최



### 3.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제17차 장관급회담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은 제16차 장관급회담 대표단과 동일하였다. 우리 정부는 17차 회담이 광복 60주년, 6·15 5주년인 2005년도의 마지막 장관급회담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고, 2006년도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우리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16차례의 장관급회담을 통해서 경제협력사업, 이산가족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발전시켰으며, 특히 2005년에는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점 등을 평가하였다. 그러나 군사분야회담 등 일부 분야에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남북관계 발전방향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제시하였다.

한반도 평화문제에 있어서는 남북이 이를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국면에서 발생한 난관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9·19 공동성명의 틀을 살려나가는 것이 남북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였다.

다음으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문제 등 과거의 냉전으로 인한 상처를 조속히 치유함으로써 민족화해와 인도주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이산가족 서신교환 실시, 화상상봉,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제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문제의 가시적인 진전도 촉구하였다.

아울러 남북간 경제협력을 본격화하여 공동번영의 토대를 다져나가면서 남북경협을 심화·발전시켜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해나가자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북간에 공동번영과 민족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그리고 경의선·동해선철도의 조속한 이용, 개성역사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협력 등 실천방안도 제시하였다.

북한은 2005년 한해에 6·15공동선언 5주년, 광복 60주년 공동기념행사와 「6·17 면담」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었다면서 군사당국자회담, 선전수단철폐, 서해 함대간 직통전화개설 등 남북 사이에 무력충돌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화상상봉 실시, 경협협회사무소 개설, 개성시범관광, 북관대첩비 반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2006년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중지, 상대방을 방문하고 있는 자기측 주민들에 대한 방문지 제한 해제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해나갈 것과 모든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을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맞게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고 제의하였다. 아울러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상봉과 화상상봉을 실시하지는 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남북은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진행하여 향후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높게 발전시켜나가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핵문제, 군사적 긴장완화문제, 경협확대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현안문제를 협의하여 9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1.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대결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사상과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함.
2.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이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핵문제가 민족공동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적극 협력
3.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
4.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 민족경제의 균형적·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남북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확대발전
  - ① 남북 경제협력이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라는 원칙 아래 지역·업종·규모면에서 투자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 ②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

협운행 등의 조속한 추진에 인식을 같이하고, 경추위를 통해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함.

5. 새해 음력설을 계기로 인도주의사업들을 적극 추진

- ① 2월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문제들을  
협의·해결
- ② 2월말경 제4차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 및 3월말경 제13차 이산가  
족 상봉행사 금강산 진행

6. 태권도의 통일적 발전을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간  
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7. 개성지구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사업에 서로  
협력

8. 일본으로부터 되찾아온 북관대첩비를 빠른 시일 안으로 원소재지인  
북측지역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로 함.

9.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6.3.28~31 평양에서 개최

## 제5절 군사분야 회담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제3차 장성급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7월과 8월 관문점에서 두차례 실무대표회담을 개최하였다.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및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군사분계선 지역 선전수단 제거, 서해상 통신연락소 운영개시 등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냈으나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하였다. 남북은 제17차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1.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합의된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대표회담이 7월 20일 관문점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한	북한
수석대표	문성목(국방부 대령)	유영철(인민무력부 대좌)
대표	김진영(국방부 대령) 엄현성(국방부 대령)	박기용(인민무력부 상좌) 엄창남(인민무력부 상좌)

회담에서 쌍방은 제2차 장성급군사회담('04. 6. 3~4, 설악산)에서 합의한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선전수단제거가 2004년 8월 15일까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쌍방이 합의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 2단계 선전수단 제거가 완료된 것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2004년 7월 이후 중단되었던 3단계 선전수단 제거를 2005년 7월 25일부터 재개하여 8월 13일에 완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 설치에 대해 북한은 8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이를 위해 8월 10일 오전 9시에 통신선로를 연결하여 10시에 시험통화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우리측은 이를 수용하였다.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대해서는 남북이 조속한 시일내에 백두산에서 개최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구체적 일정은 삼지연 일대의 도로공사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남북한은 3단계 선전수단 제거결과 확인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실무대표회담을 8월 12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나.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 | 7월 20일 개최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3단계 선전수단 제거를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고 제4차 실무대표회담에서 그 결과를 확인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8월 12일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이 판문점 북한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군사분계선지역에서의 상대측을 향한 3단계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제3차 실무대표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검토한 결과, 서로 상대측 지역에서 이행된 3단계 선전수단 제거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쌍방은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합의한 이후, 3단계에 걸친 선전수단 제거 작업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선전수단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상대측을

향한 선전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하기로 하였다.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이 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쌍방은 구체적인 일정협의를 차후 회담에서 진행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 11월 3일 관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 접촉에서는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에 대해 협의하였다.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한다는 기본입장에는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소극적 자세로 구체적 일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제6절 경제분야 회담

경제분야에서는 제10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수산협력실무협의회,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남북해운협력협의회,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등 총 11차례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한은 기존 경협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함께 상호호혜적인 새로운 경협방식 추진과 농업·수산업 등 경협확대에 합의하였으며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소·운영, 9개 경협합의서 발효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했다. 또한 경추위 산하의 농업, 수산업, 해운, 철도, 경공업 등 분야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활발히 협의해 나갔다.

###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및 위원급 접촉

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 당초 2004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북한의 회담중단으로 일년 가까이 열리지 못하다가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위원 명단

구분	남한	북한
위원장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최영건(건설경제공업성 부상)
대표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심호진(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배국환(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진철(국가계획위원회 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종결회의



우리 정부는 남북간 경제협력은 합의된 사항들이 성실히 이행될 때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주요 경협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일정과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철도시험운행, 도로개통식 개최, 수산협력, 9개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와 후속조치, 개성공단 사업,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원산지 확인 및 청산결제 시행, 경제시찰단 상호방문과 경제연구소간 교류, 과학기술협력, 남북간 직선항공로(서울-평양) 이용 문제 등을 협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활성화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남과 북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경제협력사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자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공업 제품생산용 원자재 제공 및 아연·마그네사이트·린정광·석탄 부문의 협력 문제, 수산부문 협력 문제, 개성공업지구 건설 및 철도연결공사, 쌀제공 문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문제를 협의 의제로 제시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협의의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방적 지원 성격이 강했던 경협사업을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기술을 동원하여 상호 필요로 하는 것을 ‘주고 받는’ 협력의 형태로 전환시켜나가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기술을 동원하여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해주고 북한은 그 대가로 지하자원개발 협력을 보장해주는 ‘상호보완적’ 협력 구도를 제시하여 합의문에 반영하였고 8월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쌍방 모두 중요한 협의 의제로 제기한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수산협력 문제와 관련하여 9월중 개성에 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운영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또한 경추위 산하에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7월중 제1차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기합의 사항인 철도·도로 연결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개성공단 건설, 경제시찰단 방문 문제, 9개 경협 관련 합의서 발효 문제 등도 관련 세부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새로운 협력사업인 과학기술협력 문제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는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8·15 계기로 실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이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요청한 쌀 지원 문제는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하고 인도적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50만톤을 차관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배현장 방문장소를 20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전체회의와 3차례의 위원장 접촉, 5차례의 위원접촉을 거쳐 12개항으로 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문」을 채택하고 회담일정을 종료하였다.

## 합의문 요지

1.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
  - 남측은 '06년부터 의복류·신발·비누 등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를 북측에 제공, 북측은 아연·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
  - 남북은 앞으로 경제협력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연구·검토
  - 이와 관련 경제 실무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8월 중 평양에서 실무자간 협의 진행
2. 9월중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 협회사무소 개설을 위한 공동준비단을 9월초부터 구성, 개성공단으로 파견하여 실무적 문제처리
3.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구역 기반시설을 조속히 건설, 전력·통신·용수 등을 원만히 보장, 15개 시범공장 건설을 금년내 완료, 공업지구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될 수 있도록 통행절차 개선, 본단지 분양 등에 적극 협력
4. 국장급을 대표로 하는 3~4명 규모의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구성, 서해상 평화정착과 남북어민의 공동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공동어로·양식·수산물 가공 등 어업협력 문제들을 협의·해결
  - 이와 관련,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7.25~27 개성에서 진행
5.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공사를 빨리 끝내고, 군사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는데 따라 올해안 철도 개통식 진행
  - 8월중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 공동점검,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 실시
  - 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를 7.28~30 개성에서 개최
6.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오는 8·15 계기로 실현, 실무적 문제들은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을 8.8~10 문산에서 개최하여 협의

7. 빠른 시일내 임진강 수해방지 단독조사 상호교환,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8월 하순경 공동조사 진행
  - 당면한 올해 홍수철 피해대책을 위해 북측은 임진강과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남측에 통보
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등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9개 합의서를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초까지 발효
9. 남북은 쌍방의 경제시찰단을 경제협력대상들이 협의되는데 따라 11월중 상호교환
10. 과학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남북과학기술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11.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는 9.28~10.1 평양에서 개최
  - 제2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실무접촉, 제2차 경제협력제도실무접촉, 제2차 원산지확인실무접촉은 9~10월 중 개성에서 진행, 구체적 일정은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함.

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및 위원급 준비접촉 | 제10차 회의에서 남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2005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북한이 9월 2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식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는 점을 들어 10월 하순경 개성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하여 회의 개최 일정이 조정되었다.

이어서 북한은 10월 6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제11차 회의에 앞서 토의의제를 교환하고, 토의의제 협의를 위한 위원급 준비접촉을 개성에

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정된 협상기간 내에 다양하고 많은 의제를 소화해 내야 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상호 예측가능하고 실질적인 토의의 진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전 토의의제 교환과 위원급 준비접촉을 수용하였다. 이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실질협의 중심의 회담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정부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북 쌍방은 10월 17일 제11차 회의 토의의제를 교환하고, 2차례의 위원급 준비접촉(1차 : 10. 20~21, 2차 : 10. 25~26, 개성 자남산 여관)을 거쳐, 10월 28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 쌍방 위원 명단

#### ① 위원급 준비접촉

구분	남한	북한
대표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 ② 본회의

구분	남한	북한
위원장	박병원(재정경제부 차관)	최영건(건설건설공업성 부상)
대표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신동식(산자부 무역정책심의관) 전병성(건설교통부 수자원기획관) 배국환(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김춘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서기장) 주동찬(중앙특구 개발지도 총국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 (1) 토의의제 사전 교환

쌍방은 합의한 대로 10월 17일 판문점을 통해 「경추위」 제11차 회의에서 토의할 의제를 문서로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철도·도로 등 기존 합의 협력사업의 이행문제, 협의되었거나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 위원회 및 실무접촉 개최문제 등 총 17개 협의 의제를 제시하였으며, 북한측은 경공업 협력, 지하자원 투자 문제 등 총 4개의 협의 의제를 제시하였다.

### (2)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

우리 정부는 10월 17일 북한측에 전달한 토의의제에 대한 취지, 이행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기 합의사항 중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한 철도시험운행·도로개통식 개최와 수산협력, 임진강 수해 방지, 개성공단개발사업 관련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등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경추위 산하 실무접촉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경추위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관련 지원을 거듭 요청하면서 우리측이 제기한 철도·도로 등 기 진행중인 사업은 이미 논의되어왔던 사안인 만큼 실천만 하면 되는 문제로 향후 협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간 합의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와 관련하여 규모와 대가상환 방식의 협력 형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북한측의 이해를 도모하였다.

쌍방은 자기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좀더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2차 위원급 접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을 종료하였다.

### (3) 제2차 위원급 준비접촉

우리 정부는 제1차 위원급 준비접촉에서 표명한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2차 준비접촉에 임하였다. 특히 북한이 지원을 거듭 요청한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 관련 제공 가능 규모를 북한측에 전달하고, 「남북 경공업 원자재 제공 및 대가상환에 관한 합의서」를 제시하면서 대가상환 방식의 협력형태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지하자원개발 협력 문제는 우선 관련 정보 파악과 전문가 및 기업인이 현장을 실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북한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철도·도로연결 사업과 수산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건설 사업 등은 군사적 보장조치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군사당국간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촉구하였다.

북한은 제2차 위원급 준비접촉에서도 경공업 원자재 제공 문제 협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다. 또한 군사적 보장조치와 관련하여서는 경추위 소관 사항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군사회담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2차례에 걸친 위원급 준비접촉을 통해 자기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본회의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제11차 회의는 합의문 보다는 향후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 많은 만큼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공동보도문 형식으로 발표하자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본회의

2005년 10월 28일 개성공단내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식이 이어 경협협의 사무소 2층 회담장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제11차 회의 본회의는 위원장 접촉을

먼저 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차례 위원급 준비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공동보도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측은 위원장 접촉을 통해 앞서 위원급 준비접촉에서 이미 제기했던 경협사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전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열차시험운행·도로개통식과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 건설 등의 사안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사적 보장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은 상호 보완적 협력이며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따르는 대가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시키는 한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남북경제협력의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현대와 아태간의 갈등에 대해 남북 사업자간 합의가 준수되고,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당국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도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우리측 입장을 경청하는 한편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문제가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현안 위주로 필요하다면 위원장 접촉 또는 위원급 접촉 등을 개최하자고 하였다. 쌍방은 위원장 접촉에 이어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철도·도로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요지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인 일정을 종료하였다.

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 | 북한은 11월 10일 전



화통지문을 통해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주요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11월 하순 경 합의되는 날짜에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

우리 정부는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정신에 따라 북한의 제의를 수용하는 한편 철도·도로 연결, 수산협력, 개성공단 건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문제를 구체적인 협의의제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1월 23일부터 24일까지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대 표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오광세(국무총리실 심의관)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우리측은 전화통지문을 통해 밝힌 대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연장선상에서 기 합의사항 중 군사적 보장조치가 필요한 열차시험운행·도로개통식과 수산협력, 임진강 수해방지, 개성공단개발사업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적극 유도하였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제공 관련 문제의 논의에 역점을 두면서 철도·도로 등 진행중인 사업은 이미 논의되어왔던 사안으로 군사적 보장조치만 충족되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강조하는 한편, 경공업 원자재 제공 규모와 협력 방식에 대해서는 제11차 회의 위원급 준비접촉과 위원장 접촉을 통해

제시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한편 북한측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방북 초청장과 원산지 확인서 등은 기본적으로는 협회사무소를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경추위와 경제분야 실무회담은 가급적 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고자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제기한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 지원과 당국간 경제분야 회담 장소 제공 등은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대응하였다.

쌍방은 이틀간 당국간 경제협력관련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여 상호 확인된 입장을 바탕으로 연구·검토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경추위 위원급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2.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는  
2005년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개  
성에서 개최 되었다.

#### 쌍방 위원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위원장	이명수(농림부 차관)	문응조(농업성 부상)
위 원	박홍렬(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장태평(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정광수(산림청 산림자원국장) 김성대(국무총리실 심의관)	방강수(민족경제협력위원회 책임참사) 량기건(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국장) 류상봉(농업과학원 부원장)

우리 정부는 남북간 농업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협력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

요함을 강조하면서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남북 당국간 시범사업을 통해 농업협력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창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공동영농단지 조성, 산림녹화 협력사업, 농업 전문인력 및 기술교류, 남북 상호보완적 협력사업 공동연구 등의 협력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 회담이 농업분야에서 당국간 처음 진행되는 회담인 만큼 우선 농업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기본적 내용부터 협의·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종자 생산·가공·보관시설 현대화 및 육묘 공업화, 비료·농약·농기계 등 물자 및 시설 제공, 축산·과수·잠업 등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 정부가 남북공동 협력사업으로 제기한 남북공동영농단지 조성·운영 방안이 양측간 핵심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북한은 동사안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이 독립조항으로 요구한 '현대적인 종자생산 및 가공·처리·보관시설을 지원' 하는 것을 수용하되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적 협동농장 조성·운영' 과 '우리측의 전문가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지역을 방문할 것' 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간 진행된 회담에서 쌍방은 전체회의 2회를 비롯, 위원장 접촉 2회 및 위원접촉 4회 등 총 8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끝에 시범적 협동농장 운영,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7개항에 합의하고 이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합의문」으로 채택하였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는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개발지원에 역점을 두고 당국 차원의 협력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특히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 논의의 장이 최초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다. 특히 이 회담을 통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일

방적·단순구조성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의 자생적 농업기반 조성단계로 본격 돌입하는 계기는 물론 북한의 농업생산성 제고 및 식량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합의문 요지

1. 일정한 지역의 협동농장을 선정,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남측은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및 영농 기술 등을 2006년부터 지원
  - 이를 위해 북측은 남측 전문가와 기술자의 필요한 시기 해당 지역 방문을 보장
2. 현대적인 종자생산 및 가공·처리·보관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는데 적극 협력
3. 우량한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 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종합적 병해충 관리체계(IPM)형성, 남측 농업 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
4.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발전시켜 나감.
5.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과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 자원을 늘려 나가는데 서로 협력
  - 북측의 동·서부지역에 각각 1개씩의 양묘장을 조성, 구체적인 장소는 향후 결정
6. 상기 명시된 사업들의 체계적 추진 및 실무적 협의를 위해 필요한 시기 마다 각각의 실무접촉 개최
7.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2차 회의를 향후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날짜와 장소를 협의 확정하기로 함.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2005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에서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한	북한
수석대표	심호진(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조현주(민족경제협력위원회 실장)
대표	이재호(통일부 과장) 박규호(해양수산부 과장)	정용호(수산성 국장) 김명찬(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남북 쌍방은 회담에서 수산협력을 통해 서해상 긴장완화와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남북 어민들의 이익 보호와 수산분야 기술 교류 등을 위해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 제3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 문제, 수산분야 기술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하였다. 공동어로수역에 대해 우리측은 군사당국간에 합의가 될 것이며 대상 어장도 다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구체적인 어장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군사당국회담에서 빨리 합의를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산회담에서 기본적인 것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구체적 어장의 명칭을 합의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불법어로 활동방지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최대의 당면과제가 서해평화정착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3국어선의 위법조업 방지가 최우선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서는 남측은 남측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쪽에서 방지하면 되고, 그 틈새인 공동어로 구역에서만 차단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정부가 제기한 수산기술협력, 연구소간 기술교류, 수산자원 공동조사, 우량품종 공동연구 등은 남북이 우량품종을 공동개발하고 연구소간에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접근되었다. 또한 우량품종의 개발, 수산분야 기술교류, 제3국 어장진출 협력 등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견이 접근되었다.

결국 쌍방은 서해상의 공동어로 수역설정은 군사당국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수역을 결정하도록 하고 불법어로 활동방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서해에서 불법어선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북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접촉 5회, 종결회의 1회 등 총 7차례의 접촉을 가진 후 서해상 평화정착 및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 도모에 기여할 수 있는 6개항의「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 교환함으로써 공식회담 일정을 모두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1.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 설정 · 이용
  - 공동어로 수역 및 시작 시기는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합의되는데 따라 확정
  - 공동어로기간, 어선 수, 어구, 입어로 등은 쌍방이 합의 결정
2. 서해에서 불법어선들의 어로활동방지를 위해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에 협력
3.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진행, 이를 위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에서 협의
4. 수산물 생산향상을 위한 우량품종의 공동개발 추진, 이를 위한 수산분야 기술교류 추진
5. 제3국 어장진출에서 서로 협력
6. 남북수산협력실무접촉 날짜 및 장소는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 확정

**4.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남북철도 ·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를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출퇴근 방식으로 개성에서 개최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수석대표	구자명(건설교통부 남북교통과장)	박정성(철도성 대외철도협력국장)
대 표	최영준(통일부 과장) 유복환(재정경제부 팀장)	김 용(광복총회사 총사장) 김창식(철도성 책임부원)

남북 쌍방은 경의선 · 동해선 철도연결구간에서 공사를 빨리 끝내고 연내에 철도 개통식을 진행하기 위해 8월중 경의선 · 동해선 철도연결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 실시, 10월경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을 남북 공동행사로 동시에 개최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2000년 7월부터 추진된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가 연내에 완료되어 개통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합의한 대로 철도연결구간의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이 실시되어야 하고, 철도·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철도연결공사에 추가되는 자재장비와 역 주변 정리 및 인입도로 포장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협의하여 확정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경의선·동해선 철도종업원 살림집 건설과 철길 안전그물망 설치를 요구하고, 철도연결구간의 북한 구역 철도전철화공사대상 협의·확정 및 이에 대한 설계와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특히 쟁점이 됐던 문제는 북한이 요구한 추가 자재제공, 철도종업원 살림집 및 역사 부대시설·설비, 자재제공, 북한 지역 철도연결구간의 전철화 공사 등에 대한 보장과 관련된 문제였다. 우리측은 북한 지역 철도연결구간 전철화 문제에 대해 전철화가 되지 않아도 철도를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미 북한측에 충분히 인식시켰고, 또한 철도종업원 살림집 건설, 철도연변 가설울타리, 역 진입도로 포장 등은 남북철도 연결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다만, 철도연결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추가 자재·장비 제공은 보다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남북쌍방은 전체회의, 수석대표접촉 등 총 13차례의 접촉을 통해 상호 입장을 조율하고 총 6개항에 이르는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 합의서」에 가서명, 상호 교환함으로써 공식회담일정을 종료하였다.



## 합의서 요지

1.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연결구간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로 하며, 남측은 역사 건축에 필요한 추가 자재·장비들을 제공
2. 철도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경의선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선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하며,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 부록에 따름.
3. 경의선 및 동해선의 열차시험운행과 도로개통식을 군사적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남북 공동행사로 10월 하순경 동시에 개최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한 실무적 조치들은 계속 협의
4. 철도운영공동위원회와 도로운영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남북위원 명단을 빠른 시일내에 문서로 교환
5. 철도연결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기술지원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
6. 필요한 시기마다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수석대표 또는 대표 접촉을 가지며, 제11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은 개성에서 진행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 5.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및 남북해운협력협의회

가.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 당초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합의에 따라 2004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2004년 7월 9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음을 통보해 옴에 따라 접촉이 연기되었다. 2005년 회담이 재개된 이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이 2005년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문산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한	북한
수석대표	이재균(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표	윤미량(통일부 과장) 김병호(국무총리실 과장)	한명철

쌍방은 장거리 직접통신 보장,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연결, 제주 해협통과 항로대 설정 및 해사협의기구 명칭에 대해 서로 입장을 주고 받았다.

우리측은 통신문제와 관련해서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을 8월 25일 까지 연결하여 8월 29일부터 운용하고 북한 항만에서의 장거리 직접 통신도 8월 29일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은 8월 15일 제주해협 통과를 신청·허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8월 11일에 연결하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장거리 직접통신은 북한이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하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은 북한측의 주장을 우리측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장거리 직접통신은 연내에 보장하겠다는 선에서 최종합의를 이루었다.

우리측은 제주해협 통과 항로대 설정을 위한 해운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은 제주해협 통과는 이미 제15차 장관급회담과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합의한 사안인 만큼 수정·보충합의서 없이 항로대를 설정하는 문제만 실무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제주해협 통과 항로대는 해당 수역이 우리 해역인 만큼 우리 정부 안으로 설정하여 이를 반영한 「남북해운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였고, 해사협의기구 명칭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조정하여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결정하였다.

쌍방은 전체회의 이후 각 3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대표접촉을 통

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몇 차례의 공동보도문(안)을 교환하며 논의를 거듭하여 6개항의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도출하였다. 또한 남북은 제주해협통과 관련 항로대 설정을 위한 부속합의서 수정·보충합의서를 채택하고, 쌍방 장관급회담 수석대표의 서명 절차는 문서교환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발효('05년 8월 1일)에 따라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인 남북해운협력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제1차 회의 개최일자는 추후 문서 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1.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8.15 부터 개시  
-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
2.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직접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의 이용을 8.15부터 개시
3.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연결  
-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판문점 선로를 통하여 8.11 연결, 8.12부터 운용 개시
4. 정박중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통신을 금년중에 보장하도록 노력
5. 안정적인 선박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교환 실시  
- 문서교환 방식
6. 해운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의 명칭을 「남북해운협력협의회」로 명명  
- 제1차 회의 날짜와 장소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결정

나.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인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는 2005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수석대표	이재균(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차선모(육해운성 국장)
대 표	윤미량(통일부 과장) 김병호(국무총리실 과장) 윤관용(해양경찰청 과장)	한명철 정금철 최일선 허영준

쌍방은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등 그 동안 남북해운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이 출범한 남북해운협력협의회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남북해운협력협의회라는 새로운 명칭하에 첫 회의를 개최한 만큼 남북해운항만 관계자 상호 교환 방문, 남북 해난구조기관간 직통 연락망 구축 등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남북은 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운영합의서에 대해서는 큰 이견없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우리 정부는 해운항만 관계자 상호 교환 방문, 해난구조 기관간 직통 연락망 구축 등의 새로운 의제와 함께 장거리 직접통신의 조속한 보장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은 새로운 의제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며 계속 논의해나가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 항만에서 장거리 직접통신의 조속한 보장을 다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5차 해운협력실무접촉에서 연내 보장을 약속한 만큼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최근 남한 선박이 북한 해역에서 호출시 응답의무를 어기는

등 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위반 사례를 지적하면서 합의서의 철저한 이행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이 제기한 합의서 이행에 대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부적절한 합의서 위반 사례가 있을시 그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

남북은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해 향후 남북해운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남북해사당구간 유선통신망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서명·발효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공동보도문 없이 회의를 종료하였다.

**6. 제1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합의에 따라 제1차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를 2005년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한	북한
단장	김영탁(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리영호(민족경제협력위원회 참사)
대표	문대근(통일부 과장)	김병오(경공업성 국장)
	김경중(산업자원부 과장)	한명철(민화협 부원)
지하자원	박규식(통일부 과장)	리광후(신발연합소 사장)
	이재호(통일부 과장)	허성일(경공업성 일용품국장)
	윤상흠(산업자원부 팀장)	진철(국가계획위 국장)
		정금철(내각사무국 책임부원)

남북 쌍방은 전체회의, 단장접촉, 신발·섬유·비누·지하자원개발 등 부문별 토의 등 총 15차례의 접촉 갖고 경공업 생산공장 5곳을 방문하였다.

제1차 협의에서는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관련하여 원자재 품목, 용도, 규격, 생산공장의 공정, 설비, 생산능력 등을 확인하는 문제와 지하자원개발 협력문제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경공업 원자재 제공 규모와 지하자원개발 협력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쌍방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이나 공동보도문의 채택 없이 회의를 종료하였다. 동 회담은 남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자본·기술을 동원, 결합시킴으로써 민족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제7절 인도·사회문화분야 회담

2005년 인도·사회문화분야의 회담은 4월 조류인플루엔자 실무접촉을 비롯,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실무접촉 3회, 북한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실무접촉 1회,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2회,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1회,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1회 등 총 10회의 분야별 회담이 개최되었다.

인도분야에서는 면회소 착공, 화상상봉 등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다양화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본격 제기되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도 북관대첩비 반환, 8·15 통일축구경기 개최 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정부는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1.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 대로 2005년 8월 3일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금강산에서 적십자 총재(위원장)급으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8월 4일 회신 전화통지문에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적십자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회담으로 수정제의해 왔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수석대표	장석준(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 표	이종렬(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 위원장)	항철(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유종렬(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 위원)	리호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
	이교식(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협력 위원)	

동 회담에서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전쟁시기 및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과 이산가족 화상상봉의 지속 실시, 이산가족 서신교환 및 대면상봉의 정례화 등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남북한 양측은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주소 확인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였으나 대상범위 및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노출하였다. 우리 정부는 전쟁시기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불자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로 추진할 것을 제의한 데 반해, 북한은 전쟁시기 행불자만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기존 이산가족 문제로 일반화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확대 실시에 대해서도 기본방향과 상봉방식 등에는 의견이 접근되었으나 구체적 상봉규모, 횟수 등에 대해서는 남북한이 차이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9월중 시범적 화상상봉 후보자 중 미상봉자를 우선대상으로 한 후 10월중 매주 2회 각기 200가족씩 상봉하고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8·15 시범화상상봉을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은 일대사업”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연내 화상상봉은 2차례에 걸쳐 각기 40가족씩만을 실시하자는 데 머물렀다. 이밖에도 우리 정부는 서신교환 및 이산가족 대면상봉의 정례화(매분기별 1회 실시) 등을 제의하였고, 북한은 화상전송설비를 이용한 새로운 서신교환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쌍방은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을 하였으나 가장 핵심적인 의제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서를 도출하지 못한 채 간략한 공동보도문을 내는 것으로 제6차 적십자회담을 종료하였다.



## 2.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가. 제1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 2005년 6·15 남북공동행사에 우리 정부의 당국대표단장 겸 대통령 특사로 파견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면담에서 고령화된 이산가족들에게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 문제를 제기하였고, 김정일 위원장이 동의하였다.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장관급회담(6월 21일~24일)에서 남북한은 8. 15를 계기로 이산가족들의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월 10일경 개성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실무접촉일자와 관련하여, 북한은 7월 6일 전통문을 통하여 7월 12일과 13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7월 12일과 13일에 개성에서 남북이산가족화상상봉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이에 앞서 남북한은 화상상봉 실시의 기본 조건인 기술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6월 29일과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기술실무자접촉을 진행하였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수석대표	정승훈(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황 철(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대 표	남영숙(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최영운(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영희(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강철호(조선 체신성 관계자)

남북한은 이미 두 차례의 기술실무자 접촉을 거친 뒤라 화상상봉을 위한 기술적 절차 등에 대해서는 무난히 의견 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쌍방은 상봉규모, 상봉시간, 상봉방식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화상상봉의 일정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해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측이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

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기존의 '상봉자 대 가족' 개념을 고수하였다. 또한 화상상봉의 지속실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나타내 합의 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쌍방은 통해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종결하였다. 실무접촉 이후 남북한은 7월 15일, 18일, 19일에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 상봉순서, 화상상봉의 지속실시 등의 문제에 대해 판문 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7월 19일 「남북이산가족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서명하였다.

### 합의문 요지

1. 올해 8월 15일에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
2. 시범화상상봉의 규모는 남과 북 각기 20명씩으로 하며, 1명의 상봉자가 상대측 가족 5명정도를 만남.  
- 상봉후보자는 각기 100명씩 정하고, 후보자 명단은 7월 18일, 회보서는 7월 27일, 최종명단은 8월 2일에 교환
3. 시범화상상봉은 당일 오전 8시부터 한번에 10가족씩 오전 20가족, 오후 20가족이 상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상봉순서는 최종명단 교환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함.
4. 시범화상상봉의 원활한 진행과 기술적 보장을 위해 가족동의를 전제로 진행인원 1명이 상봉보조
5. 화상상봉의 시험과 행사보장을 위하여 서울과 평양의 화상상봉 장소에 서울-평양간 직통전화를 2대씩 설치 운영

## 6. 기술적 보장을 위한 일정

- 남측은 7월 18일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광케이블을 연결
- 남과 북은 7월 20일전까지 각기 10가족이 동시에 상봉할 수 있는 화상상봉설비를 갖추고, 7월 25일전으로 서울-평양간 SDH 전송로 총연장시험 진행
- 남과 북은 남북 SDH 전송로가 확인된 후 서울-평양간 이더넷망(IP망) 연결시험을 7월 30일전으로 진행
- 남과 북은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단말기 연결시험을 진행
- 총연결시험이 완료된 후 남과 북은 8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화상 단말기 운용방법 완성

## 7.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화상상봉의 확대문제를 협의

나. 제2차 및 제3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 | 8월 15일 이산가족들의 시범화상상봉이 성공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9.13~16, 평양)에서 남북한은 연내에 화상상봉을 두 차례 더 실시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9월 2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전통문을 통하여 10월 5일 개성에서 화상상봉 추진일정에 대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제2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한	북한
수석대표	정승훈(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황철(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대표	남영숙(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영희(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위원)
	최영운(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강철호(조선 체신성 관계자)
	우영관(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강철성(조선 컴퓨터 센터)
	* 3차 접촉시 남영수, 우영관 불참	* 3차 접촉시 강철성 불참

### (1) 제2차 실무접촉

당초 제6차 적십자회담(8.23~25, 금강산)에서 비록 합의는 안되었지만 상봉규모,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 제2·3차 상봉 후보자의 규모와 교환방식 등 상당한 부분에서 의견이 접근되었다. 우리측은 화상상봉의 규모를 매회당 2일씩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남과 북이 하루 각기 20가족씩으로 하여 이틀간 총 40가족씩 상봉하며, 상봉방식은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으로 하되 가족당 참가인원은 5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남북 쌍방간 큰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제2·3차 화상상봉 후보자의 규모(총 300명)와 그 명단 교환방식(300명을 한꺼번에 교환)에 대해서 북한은 제16차 장관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연내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 차례 더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논의된 규모와 방법대로 화상상봉을 실시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입장에서 북한은 제2차 화상상봉 대상을 시범화상상봉 때 생사가 확인되었지만 상봉에 참가하지 못한 대상으로 할 것과, 제3차 화상상봉후보자는 쌍방 각기 100명씩으로 하자고 제의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는 화상상봉한 가족들의 교류지속문제를 제기하면서 화상상봉을 하였거나 그 과정에서 생존이 확인된 이산가족들에 대해 화상상봉 설비를 이용한 서신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서신교환은 복잡성을 조장하는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대신에 화상상봉을 한 가족들 중 현금을 보내고자 희망하는 가족들에 대해 관문점을 통해서 현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남북한은 이날 3차례의 전체회의, 2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의견조율을 하여 화상상봉일자, 상봉방식,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후보자 규모, 경비보전 등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좁히지 못하여 10월 7일 다시 협의하기로 하고 이날 접촉을 종료하였다.

## (2) 제3차 실무접촉

10월 7일 남북한은 2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의 수석대표접촉을 통해 2차 실무접촉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였다. 화상상봉의 후보자 규모문제에 관하여 우리측은 제2차 화상상봉의 후보자는 북한측 안대로 하되, 제3차 상봉자의 후보자 규모를 150명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제의하였다. 북한측 안대로 100명으로 할 경우 실제로 화상상봉이 가능한 대상자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제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몇 차례의 실무접촉 끝에 120명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서신교환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화상상봉한 가족들의 지속교류를 위해 서신교환을 거듭 강조하였지만 북한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대신에 화상상봉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관리운영프로그램을 통한 사진교환을 하는 것으로 절충되었다. 화상상봉을 위한 경비 보전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이 화상상봉 준비와 실시 및 설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남북한은 양일간 전체회의 5회, 수석대표접촉을 6회, 기술실무접촉을 1회 진행하여 제1차 화상상봉은 11월 24일과 25일에, 제2차 화상상봉을 12월 8일부터 9일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서명하였다.

## 합의서 요지

1. 올해 2회 추가 화상상봉 실시  
- 1차 11.24~25, 2차 12.8~9 각각 양일간 실시
2. 매회 남북 각기 40가족(1일 남북 각기 20가족씩 상봉, 4일간 남북 총 160가족)  
- 가족 대 가족 상봉 방식으로 가족당 2~5명씩 참여
3. 1차 화상상봉은 시범화상상봉시 생사확인지증 미상봉자 대상 실시  
- 2차 화상상봉은 쌍방 각기 120명 후보자명단을 교환하여 선정
4. 1차 최종명단 교환은 11.16, 2차 상봉후보자명단은 10.21, 회보서는 11.14, 최종명단은 11.16 교환
5. 화상상봉 참가 대상자의 사진을 관리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환
6. 상봉 시작일 7일전에 남북간 전송로 및 화상단말기 운용시험을 진행
7. 기타 화상상봉 진행에 따른 실무적 절차와 관리운영 방법에 따르는 기술적 보장 문제는 시범화상상봉시 전례 준용
8. 남측은 북측이 화상상봉 준비와 실시 및 설비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

2005년 3월 15일 우리 정부는 북한  
**3. 조류인플루엔자 남북실무접촉**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당시 북한 언론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보도가 몇 차례 있었던 점에 유의하면서 2004년 가금육 반입 위생조건 제정시 쌍방 관계 당국이 양해한 점에 기초하여 북한 지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 및 그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3월 17일 전

화 통지문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실을 일체 부정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여부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한 의혹을 가지거나 다른 억측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평양시 하당 닭 공장을 비롯한 2~3개 닭 공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북한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05년 3월 29일 북한 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약품·장비·기술인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할 의사가 있음을 재차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4월 8일 국가수의방역위원회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실을 시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퇴치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희망해 왔다.

우리 정부는 4월 9일 북한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기술협의 없이도 제공 가능한 방역약품 및 장비는 긴급 제공할 수 있으나 격리실험실, 바이러스 유전자 장비세트 등은 기술협의 후 전달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북한이 4월 11일 우리 정부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관련 실무협의 개최를 요구해 옴에 따라 쌍방은 2005년 4월 22일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실무접촉을 개성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수석대표	김창섭(농림부 가축방역과장)	리경군(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서기장)
대 표	이재호(통일부 과장)	권정혁(국가수의비상방역위원회 상무위원)
	김재홍(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연구부장)	성기철(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개선총회사 사장)
		김동철(내각사무국 부원)

남북한은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오전 1차례와 오후 4차례 등 총 다

첫 차례 접촉을 갖고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한 지원 문제를 협의하였다. 우리측은 북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관련 바이러스 유형, 인체감염 여부 등 추가 정보를 요청하였고, 북한은 4월 8일자 우리 정부에 통보한 수준의 발생 경위 등을 언급하면서 인체 감염사례는 없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2003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퇴치 경험 전수 및 효과적인 방역과 퇴치를 위해 전문가 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서는 국제기구(WHO, FAO)에서 이미 현장을 방문하여 분리된 바이러스를 검사한 만큼 그 결과를 보면 된다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쌍방간 이견이 컸던 분야는 북한에 제공할 품목으로 우리측은 북한의 요구 품목중 제공가능 품목과 별도 추가 제공 품목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검토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그들이 제시한 품목 확정에 최대한 목표를 두고 방역보다는 예방약 생산 시설 확보에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북한은 예방약 제조시설 지원과 나머지 품목을 연계시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전문가 현장 답사도 거부함으로써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실무접촉 이후에도 쌍방은 몇차례 전화통지문을 통해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필요한 약품과 장비를 남포항을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4. 8.15 남북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2005년 7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북면담시 8. 15를 계기로 남북 축구경기를 개최하자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제의를 김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남북축구경기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은 7월 26일과 28일 개성에서 두차례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한	북한
수석대표	조중연(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리히연(축구협회 서기장 대리)
대표	김동대(대한축구협회 사무총장)	김창규(민족화해협의회 참사)
	임병철(통일부 과장)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대외사업국 책임부원)

경기의 명칭, 선수단의 명칭, 선수단 규모, 왕래경로, 선수단복, 입장 시 단일기 사용, 심판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한 데다 이미 남북간에 합의된 전례가 있었던 만큼 합의가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남녀경기의 일자와 장소를 8·15 민족대축전의 개막식·폐막식 행사와 연계하여 정하는 문제와 통일축구경기의 향후 정례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쌍방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남북통일축구경기의 정례화(매년 1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였으나 북한은 이번 실무접촉이 8·15 통일축구경기의 실무적 절차를 정하기 위한 자리라며 논의를 이에 국한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은 8·15민족대축전의 개막식(8월 14일) 행사와 남자경기를 연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폐막식(8월 16



남북통일축구경기

일)에는 행사장과 경기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자경기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북한은 여자경기도 폐막식 당일에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7월 28일 개최된 2차 접촉에서도 북한이 8·15민족대축전 폐막식 당일 여자경기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여 합의서를 채택하고 접촉을 마무리 지었다. 이로써 2002년 남북통일축구경기 이후 3년만에 남북간의 친선 축구경기가 열리게 되었다.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 합의에 따라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개성에서 2차례 진행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 분	남 한	북 한
수석대표	최완근(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전종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대 표	임병철(통일부 과장)	김창규(민족화해협의회 참사)
	이창민(통일부 과장)	위강남(조선역사학회 연구원)
	* 2차접촉 : 김영란(통일부 과장)	

가. 1차 실무접촉 | 회담에서 남북은 사업의 성격과 의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의견 접근을 하였으나, 전문가회의 개최 장소, 운영방식 등 일부사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우리측은 전문가회의의 개최 장소를 참석인원 규모,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로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현지에서 발굴작업과 함께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향후 사업의 추진순서에서도 우리측이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확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 비해 북

한은 바로 공동발굴단을 발족하지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합의서 문안조정이 대체적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일단 실무접촉이 종료되었다. 이후 남북 양측은 실무접촉에서의 공감대를 토대로 관문점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이견을 조정, 9월 15일에 최종합의서에 서명하였다.

### 합의서 요지

1. 남과 북은 일제의 을사5조약 날조 100년, 안중근의사 순국 95년이 되는 올해에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을 적극 추진함.
2.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관련자료 조사 및 확인사업에 적극 협력함.
3.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를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현지에서 전문가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하며,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안중근의사유해발굴단”을 구성하여 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함.
4.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공동발굴 및 확인, 봉환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중근의사를 기념하는 사업을 지원함.

나. 2차 실무접촉 | 우리 정부는 안중근의사 유해위치 관련 자료를 10월 21일 북한에 관문점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발굴 및 연구자료와 함께 우리측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향후 공동추진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해 가급적 11월 중에 2차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북한은 11월 3일 전통문을 보내와 ‘안중근유해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유해위치를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이 그와

관련한 연구사업을 보다 깊이 있게 추진하면서 필요한 의견교환도 진행해야 할 것' 이라고 하면서 11월 17일에 2차 실무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 날이 '순국선열의 날' 임을 감안, 11월 22일로 일자를 변경하자고 수정제의하였다. 11월 14일 북한은 우리 정부의 수정제의에 동의를 하면서 1986년 여름 중국 여순에 파견하였던 유해발굴조사단의 사업결과를 요약·정리하여 보내왔다.

2차 실무접촉은 예정대로 11월 22일에 열렸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유해위치가 북한에서 이전에 조사했던 곳과 일치하여 발굴의 의미가 없으므로 동절기 동안 일본측으로부터 좀 더 새로운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위치가 확정 되는대로 내년 봄에 발굴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우리측은 우리가 제기하는 위치가 북한이 이전에 답사했던 위치와 다를 수 있음을 설득하면서 최선의 대안으로서 추가 자료수집을 하기 보다는 현지답사를 겸한 전문가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현지답사와 전문가회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실무접촉은 양측 자료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는 것을 성과로 삼고 앞으로 연구를 계속 해나가는 정도에서 마무리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양측은 이번 실무접촉의 의의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2차 실무접촉을 마무리 하였다.

## 공동보도문 요지

1.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위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양측이 연구한 결과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고, 유해공동발굴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2.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위치확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3. 남과 북은 현지답사 이전까지는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조사 및 연구의 결과자료를 교환하기로 하였음.
4. 남과 북은 안중근의사의 순국기념일인 내년 3월 26일을 계기로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5.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판문점을 통하여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하였음.

**6.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북한은 10월 21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와 제4회 동아시아경기대회('05년 10월 29일~11월 6일, 마카오) 기간 중 양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하여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진행하자고 제의해왔다. 우리 정부는 10월 24일 전통문을 보내 5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는 것과 실무접촉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안에 효율적으로 진행해나가는 안을 북한에 전달하였다.

11월 1일 마카오에서 이루어진 접촉에서 남북 양측은 12월 7일 개성에서 단일팀의 선수선발과 구성 및 훈련 등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회담을 개최하고, 양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

로 적정수의 대표들로 구성한다는 보도문을 작성하였다. 북한은 11월 17일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보내와 12월 7일 개성에서 열리는 체육회담에 대한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우리 정부는 11월 18일 이에 호응하는 전통문을 전달하였으며, 대표의 수는 남북 양측 각기 5명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남한	북한
수석대표	박성인(대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리동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
대표	김상우(대한올림픽위원회 명예총무)	손광호(조선올림픽위원회 부서기장)
	안민석(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정혜남(조선올림픽위원회)
	임병철(통일부 과장)	박일남(체육지도위원회 대외사업국 책임부원)
	오영우(문화관광부 과장)	김영철(조선올림픽위원회/아태 참사)

12월 7일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담은 기초발언을 통해 단일팀 구성의 의의와 함께 기본입장을 밝히고, 오후에 이루어진 4회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단일팀 명칭, 단기, 단가, 선수선발 원칙 및 임원구성, 훈련 등에 대해 각자의 대안과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일단 논의를 마무리하고, 각자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단일팀 구성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경제협력업

MINISTRY OF UNIFICATION





# III

## 남북교류협력의 심화

제1절 상생·번영의 남북교류협력

제2절 남북교역

제3절 남북경제협력사업

제4절 개성공단사업

제5절 육·해·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

제6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간 교류협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05년 남북간 교류협력은 남북 교역액 1조원 시대 개막, 남북간 왕래인원 9만명 시대 진입 등의 상징적 통계를 기록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

# III

---

## 남북교류협력의 심화

---

남북간 교류협력은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 사이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05년 남북간 교류협력은 남북 교역액 1조원 시대 개막, 남북간 왕래인원 9만 명 시대 진입 등의 상징적 통계를 기록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3대 경협사업은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금강산관광사업은 2005년 6월 관광객 100만명 돌파, 연간 30만명 관광 등 안정적 성장단계에 진입하였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도로는 이미 차량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도도 공사가 완료되어 개통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2만 8천평의 시범단지가 완전 가동되고 있으며, 본단지 1단계(100만평) 1차 5만평 입주 가동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6·15 통일대축전과 8·15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새로운 교류모델을 창출하였다. 특히 8·15행사 기간중 북한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는 남북간 냉전청산

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독도문제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고구려 유물 전시 및 북관대첩비 반환 추진,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등과 같은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의미있는 사업들이 남북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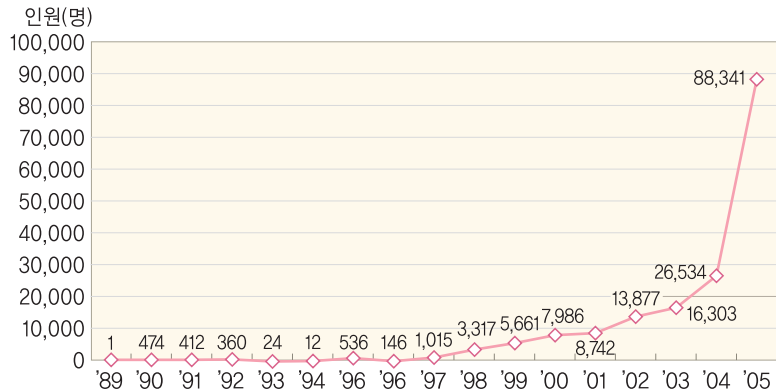
이제 남북간 교류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3대 경협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경협과 SOC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문화교류는 일회성 사업을 넘어서 제도화 단계로의 진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제1절 상생·번영의 남북교류협력

### 1.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2005년 남북 왕래인원은 88,341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분단이후 총 왕래인원 85,400명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04년 왕래인원 26,534명보다 229%가 증가한 것으로 남북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남북왕래인원 변화추이



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간차원에서는 독도문제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고구려 유물 전시 및 북관대첩비 반환 추진,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등과 같은 민족의 역사와 관련된 의미있는 사업들이 남북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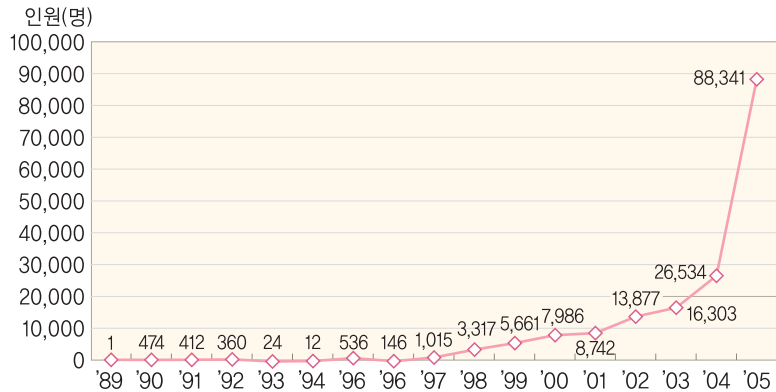
이제 남북간 교류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고 있다. 남북경협은 3대 경협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경협과 SOC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문화교류는 일회성 사업을 넘어서 제도화 단계로의 진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제1절 상생·번영의 남북교류협력

### 1.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한 2005년 남북 왕래인원은 88,341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분단이후 총 왕래인원 85,400명을 넘어서는 수치이다. 2004년 왕래인원 26,534명보다 229%가 증가한 것으로 남북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도별 남북왕래인원 변화추이



금강산 관광객은 2005년 6월을 기점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2005년 한해 298,247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시작된 이후 안정적 성장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2005년 남북 교역액은 10억5천만 달러로서 교역액 1조원 시대를 개막하였다.

민간의 대북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경수로와 개성공단 등 당국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도 민간 부문 대북투자 총액은 2억5,757만불에 이른다. 2005년에 투자된 금액은 4,456만불이다. 같은 해 남북경협사업 승인 건수는 82건, 협력사업자 승인 건수는 110건이다.

## 2. 평화조성에 기여하는 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은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자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정치적인 이유로 소강상태에 있을 때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관계의 추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쌀·비료지원은 2005년도 상반기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타개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만kW 송전' 제안은 난관에 부딪힌 6자회담을 타개하고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데 공헌하였다. 남북경제협력은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DMZ 개방과 군사 당국간 회담을 이끌어 냈고, 서해 공동어로에 대한 남북간 협의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남북경협이 질적·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장애요소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경협사업을 위한 북한의 내부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 북한은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만큼 국제경제 및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외 개방정책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전력·통신·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경협확대에 어

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전략물자통제제도 및 원산지 문제로 인한 물자 반출 및 수출에 대한 제약 등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2005년 7월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남북경협협약사무소) 개설 및 운영 합의서가 채택되고, 10월에는 남북경협협약사무소를 개성에 개소하여 남북간 직교역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남북경협사무소는 교역, 투자 알선, 면담 지원 및 관련 정보·자료 제공 등 남북간 교역상당 및 거래를 지원할 뿐 아니라 남북 당국간 상시 협의사무소 역할도 하고 있다. 남북경협협약사무소는 분단 이후 최초로 북한 지역에 당국 차원의 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며, 남북경협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 평가할 수 있다.

아직 남북경협은 남북간 내부 정세는 물론 대내외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남북경협협약사무소와 같은 경협의 제도화·법제화는 앞으로의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개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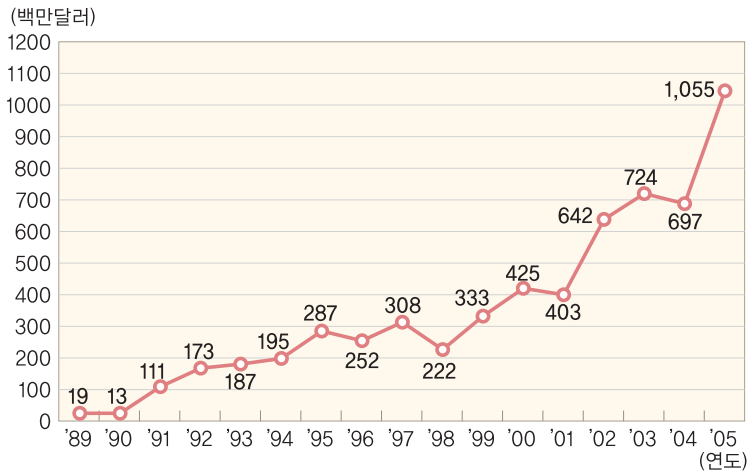


## 제2절 남북교역

### 1. 남북간 물자교역

가. 교역규모 | 2005년 남북교역은 2004년의 소폭 감소세에서 벗어나 51.5%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었다. 1989년 남북교역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개성공단 본격 건설 등에 따라 상업적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반입은 3억4,028만달러로 전년대비 31.8% 증가했고 반출 역시 개성공단 본격 건설, 금강산 관광시설 확충, 대북지원 등에 따라 7억1,547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62.9% 증가했다.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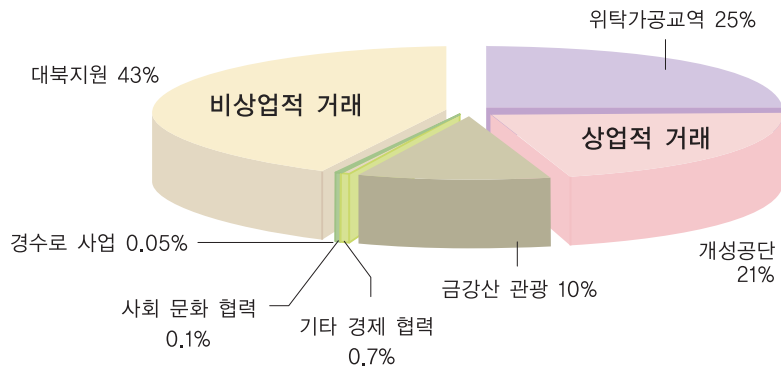
나. 유형별 남북교역 | 2005년도 상업적 거래는 6억8,954만달러로 전년대비 58% 증가, 전체 교역액의 65.3%를 차지하였다. 이중 반입은 3억4,002만달러로 전년대비 31.7% 증가하였고, 반출도 3억4,953만달

러로 전년대비 95.8% 증가하였다.

상업적 거래 중 일반교역은 2억978만달러로 전년대비 22.4% 증가하였고 위탁가공교역도 2억973만달러로 전년대비 19.2% 증가하였다. 그 밖에 개성공단 1억7,674만달러, 금강산관광 8,707만달러, 기타 경제협력 623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324%, 108.4%, 8.4% 증가함으로써 남북교역 10억달러 시대 진입에 일조하였다.

한편 비상업적 거래는 3억6,621만달러로 전년대비 40.6%가 증가하여 전체 교역액의 34.7%를 차지하였다. 비상업적 거래 중 사회문화협력은 78만달러, 경수로사업은 39만달러로 전년대비 각각 53.9%, 13.6% 감소하였으나 비료 및 식량 등의 대북지원은 3억6,504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대비 41.3% 증가하였다.

2005년 남북교역 거래유형



다. 남북간 교역수지 | 남북간 교역 수지는 명목상으로는 남한이 흑자이나 경협사업, 대북지원 등을 제외한 실질교역 수지는 적자이다. 1989년부터 2005년까지 누적 명목수지는 남한이 1억4,018만달러 흑자이나 누적 실질수지는 20억6,205만달러 적자이다. 이러한 교역수지 구조는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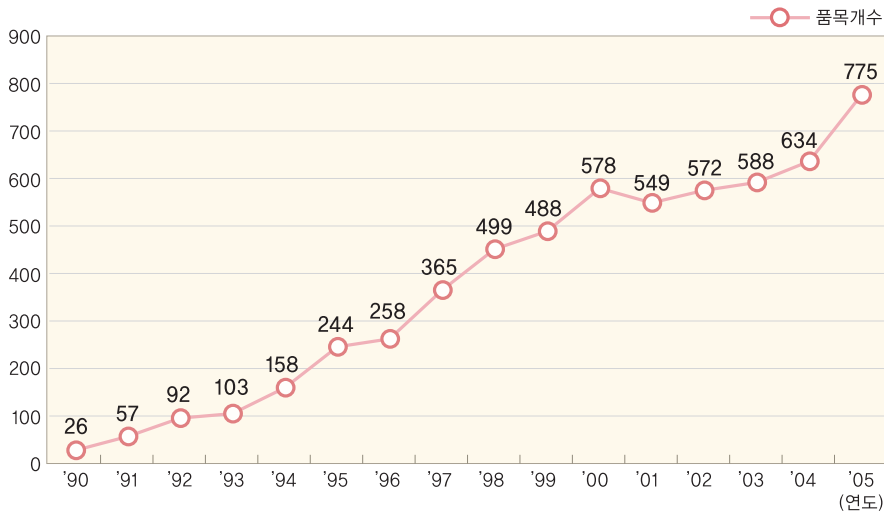


따른 물자반출의 증가, 대북 지원 물품의 증가 때문이다. 실질 교역수지의 불균형은 주로 북한의 구매력 부족 때문으로 북한의 외환사정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남북한 교역구조 | 남북교역은 초기에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한약재, 농산물, 위탁 가공교역의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남북교역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직접교역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통행, 통신 제약과 거래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개교역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5년 10월 남북교역 기업에게 투자 알선 및 면담 지원, 관련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성에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개소하여 2005년 12월말 현재 총43건의 기업간 면담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업무가 보다 활성화되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가동, 남북간 직접결제제도 마련 등의 직교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북간 직교역의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교역품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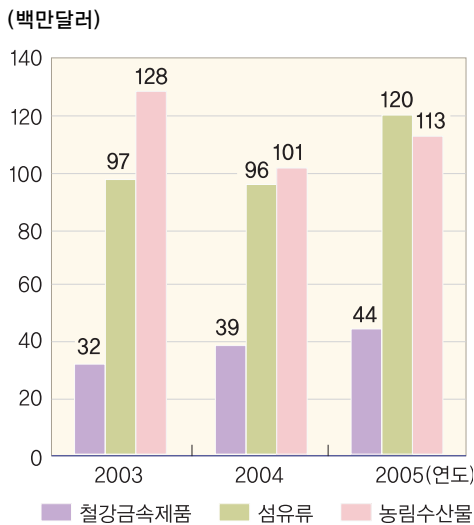


남북간 교역품목의 수는 1989년에는 25개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 572개, 2003년 588개, 2004년 634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05년의 경우 반입 품목은 전년보다 179개, 반출 품목은 137개가 추가되어 총 755개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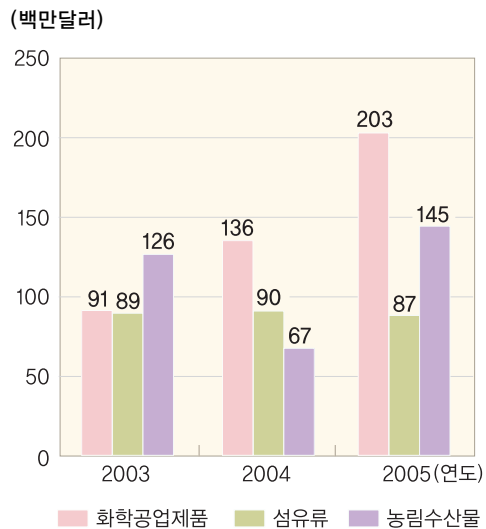
반입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류, 농림수산물, 철강금속제품, 광산물 순이다. 섬유제품은 19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그 비중이 높아져 지난해에 반입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인 35.4%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 농림수산물 반입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된 3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개류·건조수산물·수산가공품 등 수산물이 주종을 이룬다. 철강·금속제품의 반입 비중은 13%이며 아연이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초기에는 농업용 비닐자재 등 화학제품이 많았으나 위탁가공교역의 시작과 함께 섬유류의 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식량·비료 등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화학공업제품과 농림수산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최근 3년간 주요 반입품목 현황



최근 3년간 주요 반출품목 현황



주요 반출품목의 비중은 화학공업제품(28.3%), 농림수산물(20.2%), 기계류(16.1%), 섬유류(12.2%), 철강금속제품(9.5%) 등의 순이다.

**2. 위탁가공교역** 위탁가공 교역은 남한에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후 국내에 가공 제품을 재반입하고 북한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가공임을 지급하는 교역 형태이다. 2005년도 위탁가공교역액은 2억973만달러로 전년 대비 19.2% 증가하였다. 이 중 섬유류 위탁가공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TV·전화기 등 전기·전자제품과 가스라이터 등 일부 생활용품도 위탁가공으로 생산되어 반입되고 있다.

연도별 위탁가공교역 현황

(단위 : 백만달러)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교역액	0.8	7	26	46	74	79	71	100	129	125	171	185	176	210

연도별 위탁가공 참여업체 및 품목 현황

(단위 : 수)

연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품목수	9	35	63	83	118	108	157	216	257	284	311	217	215	243
업체수	4	12	11	24	70	64	66	131	157	147	108	109	117	136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는 2000년 157개에서 2002년 108개로 급격한 감소경향을 보였다. 이는 2000년 6·15공동선언 등으로 인한 남북 교역에 대한 관심증대로 많은 업체들이 위탁교역에 참여하였지만 그 후 반출입 교역액 5만달러 이하의 영세업체들은 사업성 확보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참여업체가 다시 확대되어 2005년 위탁가공 교역 참여업체수는 136개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점차 안정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제3절 남북경제협력사업

#### 1. 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2004년 7월 이후 남북당국간 관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북한이 남한 경제인들의 평양방문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남북경제협력사업이 한동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5년 5월 남북차관급회담을 계기로 남북당국간 대화가 재개되고 남한기업인들의 평양 방문도 가능해짐에 따라 2005년 하반기부터는 경제협력사업이 다시 활발히 추진되었다.

하반기 들어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함께 남북경협협회사무소 개소 등 경제협력 환경의 호전으로 2005년도에는 12건의 경제협력사업이 승인되어 1995년 첫 경제협력사업 승인 이후 가장 많은 승인실적을 기록하였다. 2005년도에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9건(개성공단 개발 관련 제외)으로 1992년 이후 2005년까지 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은 총 71건, 경제협력사업 승인은 총 42건에 이르게 되었다. 2005년 승인된 경제협력사업 12건 중 8건이 하반기에 집중됨으로써 새로운 사업들은 대부분 현재 투자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기존의 투자사업은 뚜렷한 실적은 없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녹십자는 2001년 7월 최초로 혈전증 치료제인 유로키나제 반제품을 반입한 이래 2005년까지 48만 5,000달러 상당의 반제품을 반입해 왔으며, 앞으로는 반제품이 아닌 유로키나제 원액으로 전환하여 반입하는 문제를 북한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평화자동차는 2002년 4월 남포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설립, '휘파람' 115대 조립생산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657대를 생산하였으며 그 중 642대를 북한 내수용으로 판매하였다.

금강산생물 사업을 추진해온 태창은 설봉호 운항중단으로 해상을

통한 반입이 중단됨에 따라 한동안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5년 3월 25일 홍보용 샘플 15.7톤을 시작으로 3회에 걸쳐 총 63톤을 동해선 육로를 통해 반입하고, 금강산 현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월 25톤 정도의 샘플을 판매하는 등 사업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평인터내셔널은 평양에서 생산된 포기 배추김치 시제품 14톤을 남포-인천간 해로를 통해 반입하였다. 한편 안동대마방직은 삼베 제조공장 건립용 설비·자재를 2005년 4월과 8월 2회에 걸쳐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반출한 후 10월 1일 평양에서 합영기업 창업식을 개최하였다. 대동무역도 강서청산수 생산에 필요한 설비·자재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반출하였다.

삼성전자는 11개 신규 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나비즈닷컴은 2001년 북한과 합영으로 중국 단동에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 프로그램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춘흑연광산 개발사업은 2005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2005년말 현재 전기공사와 조경공사 등 막바지 공정이 진행중이며, 2006년 1/4분기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협력사업(자) 승인 현황  
(개성공단 제외)

사업자	사업상대자	사업상대자	지역	금액 (승인기준)	사업자승인일 (사업승인일)
(주)KH인터내셔널	새별총회사	섬유제품 제조 및 판매	평양	—	'05.4.15
▲에스피메디텍 (용역개발)	조선컴퓨터센터 (KCC)	북한 특허기술 이용 의료기기 생산(뇌혈관지표측정기 개발)	서울	—	'04.9.17 ( '05.5.26)
▲(주)스튜디오토 모로우	코스타	애니메이션 제작 용역 (Hello Kitty)	평양	3.8만불	'05.6.1 ( '05.6.1)
▲아이니무역	개선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반 입 · 판매	원산	15만불	'05.6.15 ( '05.6.15)
▲현대아산(주)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개성관광사업 1회당 500명씩 시범관광 실시	개성	19.5만불	'03.3.18 (시범 '05.8.25)
▲(주)알티즌하이 텍(합작)	광명성총회사	CPT 개발 및 생산 · 판매	평양	10만불	'05.9.21 ( '05.9.21)
▲(주)쓰리엔 테크놀러지(합작)	삼천리총회사	기계제품 생산 · 판매	평양	35억원	'05.10.14 ( '05.12.27)
▲(주)대동무역	개선총회사	강서청산수 생산 및 판매	남포시 강서구	250만불	'05.11.10 ( '05.11.10)
▲(주)태림산업	개선총회사	석재 가공 및 판매	남포 (룡강석산), 해주 (수양석산)	295만불	'05.12.1 ( '05.12.1)
▲(주)에머슨퍼시픽	금강산국제관광 총회사	금강산 골프 · 스파 리조트 건설 · 운영	금강산 관광지구	700억원	'05.12.9 (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황북 봉산 황남 언덕	26만불	'05.12.30 (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만경대	164만불	'05.12.30 ( '05.12.30)
▲제일유통	개선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평양	30만불	'05.12.30 ( '05.12.30)

주)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임.

## 2. 남북관광협력사업

남북관광협력은 금강산 관광과 함께 2003년 평양관광 실시, 2005년 개성·백두산 관광 합의 및 개성시범관광 실시 등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남북간 인적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은 “보다 많은 접촉과 협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탕이 되었다. 1998년 4월 30일 정부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가 발표되고, 그해 6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에 합의하였다. 이어 11월 18일에 관광선 금강호가 이산가족 등 826명을 태우고 동해항을 첫 출항함으로써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다. 2000년에 2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2002년에 이르러 심각한 중단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초기의 무리한 투자로 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게 되고, 통제된 ‘제한관광’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공동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 원을 대출하고, 2002년 4월부터는 학생, 교사, 이산가족 등에 대해 관광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책을 내놓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육로관광을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02년 12월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공사를 완료하고, 2003년 1월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를 타결하는 한편, 남북 당국간 회담 등을 통해 육로관광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2003년 9월부터 육로관광을 성사시키게 되었다.

한편 금강산관광사업자인 현대아산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여러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정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당일관광, 1박2일관광 등 관광상품을 다양화하였다. 현대아산은 또한 금강산호텔·골프장·옥류관 등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금강-설악 학생단체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강산-설악산 연계관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금강산 관광객의 증가로 나타났다. 2005년 6월 총 관광객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2005년 한해 동안 관광객이 30만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도 98년 관광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문제가 새롭게 부각되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여 온정각-구룡연 구간 등의 도로를 포장하고 온정각-금강산호텔에 이르는 도로를 보수하였다.

금강산 지역을 남북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되었다. 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4년과 2005년에 두 차례 학생 2만여명과 교사 1만6,500여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 약 90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2005년도에는 금강산관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남북관광 협력이 개성·백두산·평양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7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은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와 백두산관광을 위한 사전답사와 시범관광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백두산 관광을 위한 현지 시설들을 점검하고, 남북협력기금으로 관광에 필요한 도로 포장용 자재 등을 북측에 지원하는 등 백두산 관광 실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갔다.



2005년 8월에는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가 개성시범관광에 합의하고, 1,600여명에 이르는 우리 관광객이 고려성군관, 선죽교, 박연폭포 등 개성지역을 둘러보았다. 또한 그동안 북한의 내부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평양관광도 재개되었다. 평화항공여행사는 2005년 10월에 1박2일의 평양관광을 실시하여 9회 총 1,280명의 관광객이 평양을 다녀오게 되었다.

2005년 한해 남북관광사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현대아산의 내부 인사문제가 계기가 되어 현대-아태간 갈등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북한이 9월부터 금강산 관광객 수를 1일 600명으로 제한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힘입어 금강산관광 7주년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다시 정상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금강산 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과제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우선 금강산 관광지구내에 현지 관리법인을 설립하여 금강산 관광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금강산 현지의 소방·치안 등 안전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금강산 특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오폐수 처리시설 등 인프라건설 지원문제도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광을 개성·백두산·평양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3. 대북식량차관 제공

정부는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위해 1995년 쌀 15만톤을 지원한 이래 동포에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2005년에도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쌀 50만톤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외국산 10만톤을 포함하

여 쌀 5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7월 19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1억5,500만달러 범위이내의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하였다.

### 2005년 쌀 차관 합의서 주요내용

- 제공 규모 : 쌀 50만톤(국내산 40만톤, 외국산 10만톤)
- 차관단가 및 금액 : 톤당 미화 300달러, 1억5천5백만달러 범위내
- 차관 조건 : 10년거치 20년상환, 이자율 연1.0%
- 차관계약자 : (남) 한국수출입은행 (북) 조선무역은행
- 수송 방법 및 일정
  - 육로수송 10만톤(국내산), 해로수송 40만톤(국내산 30만톤, 외국산 10만톤)
  - 육로는 합의서 서명 이후 2주 이내, 해로는 7월중 첫 항차 출항
- 분배투명성 보장
  - 제공자 표기 : 포장에 '쌀', '40kg' '대한민국' 표기
  - 분배내역 통보 : 북측은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톤 단위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
  - 분배현장확인 : 매 10만톤 수송완료 시점에서 동·서해안 각각 2곳(총 20곳) 현장확인(분배상황 확인, 사진 및 녹화촬영)

2005년 7월 25일 남한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간 차관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어 남한측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북한측은 청길무역회사가 양측의 인도·인수회사로 각각 선정되었다.

50만톤의 쌀 수송은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동·서해 육로를 통해 국내산 쌀 10만톤은 7월 26일부터 개성·고성지역으로 각각 7만5천톤과 2만5천톤을 수송하였다. 약 3개월이 소요된 육로수송 기간동안 4,500여명의 인원과 4,000여대의 트럭이 동·서 육로를 왕래하였다.



식량공급소에서 분배구를 통해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 북한주민들

해로를 통해서도 국내산 30만톤과 외국산 10만톤이 수송되었다. 7월30일 1항차 출항을 시작으로 하여 2006년 1월 7일 마지막 항차가 귀환할 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북측의 남포, 해주, 원산, 홍남, 청진 총 5개항이 수송항구로 이용되었다. 2005년 쌀 수송에는 북한 선박이 이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95년 쌀지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북한 선박에 의해 국내산 쌀 2만톤이 수송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가 지원하는 쌀이 북한주민에게 골고루 분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지원된 쌀의 구체적인 분배내역을 통보받고, 남한측 인원이 쌀 분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분배과정을 확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매 10만톤 단위로 지역별 구체적인 분배내역을 통보해왔으며, 2005년 9월 14일 개성과 고성지역에 대한 1차 분배현장확인을 시작으로 5차에 걸쳐 분배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특히 개성·고성, 동서해안 등 총 20곳에 대한 분배현장을 확인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투명성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2000년 대북식량차관 제공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 4명이 쌀 분배현장을 직접 참관하기

도 하였다.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지원이 큰 힘이 된다고 감사 표시하였고 쌀의 품질과 맛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국내산 10만톤을 육로로 수송함으로써 인도지원 물자, 교역 물자 등의 육로수송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많은 북한주민들이 수송차량 행렬을 목격함에 따라 남한에서 쌀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민간 단체 관계자, 통일교육위원, 통일정책 모니터링단 등 민간인 63명이 인도인원으로 참여하여 북한실상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4. 새로운 남북협력사업 추진** 2005년 7월 12일 제10차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호혜와 상생」의 원칙에 입각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대북 지원성 협력에 치우쳐 있던 남북경협에서 탈피하여 남북의 자원과 자본·기술을 결합시켜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남북한은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을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쌍방은 “남측은 2006년부터 북측에 긴요한 의복류, 신발, 비누 등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각의 원자재를 제공하며, 북측은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정광, 석탄 등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남측에 보장하고 생산물을 제공”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비롯 실무급 위원접촉 등을 통해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2005년 12월말 현재 관련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경공업 원자재 대가 상환방식과 지하자원 개발의 구체적 협력방식 등에 대해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앞으로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가 체결되면 2006년부터 의복·신발·비누 원자재를 남한이 상업적 거래형태로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개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남한에 부족한 철, 아연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특히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최고의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하게 되면 국내 원자재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며 남북경협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다.

**나. 농업·임업협력** | 남북간 농업협력은 그동안 주로 민간차원의 일회성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농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되었다. 남한의 통일농수산사업단은 삼일포협동농장의 공동영농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였다. 남한이 농자재 및 기술 등을 지원하고, 북한은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북한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는 시험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당국차원에서는 농업협력을 위한 협의창구 개설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2005년 6월 24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합의하고, 8월 19일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남북한은 농업분야에서 시범농장의 조성 및 운영, 종자정선시설 지원 협력, 농업과학기술분야 협력, 특용작물 분야 협력 등의 추진과 임업분야에서는 양묘장 조성 등 산림녹화 협력사업의 추진에 합의하였다.

정부는 북한 농업의 자생력 회복이라는 목표하에 당국간 시범사업

의 안정적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접근성이 용이한 북한의 협동농장을 시범농장으로 선정하여 영농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종자의 품질 개선을 위한 현대적 종자 정선시설을 지원하고, 종합병해충 관리체계·농작물 생육예보체계 구축 등 우수 기술 교류를 통한 북한 농업의 과학화를 도모하며, 특용작물 분야 시범재배를 통한 상업적 계약재배의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

임업분야에서는 한반도 산림자원의 확보 및 생태환경 보전을 목표로 북한의 동·서부 양 지역에 각각 한 개씩의 양묘장을 조성하고,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 등 당국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임업 협력사업은 시범사업의 추진성과 및 남북관계 진전 등을 보아가며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수산업협력** | 우리 민족은 3면이 바다에 자리잡은 천혜의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분단으로 인해 그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특히 서해상에서는 2차례에 걸친 무력 충돌로 인해 남북한간 긴장이 그 어느 지역보다 고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해상에서의 남북한간 긴장이 지속되는 동안, 제3국 불법 어로활동이 증가하면서 우리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생겨났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간 수산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남북은 2005년 7월 27일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몇가지 협력사업들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서해에서 남북공동어로 수역의 설정 및 이용, 서해에서 제3국 불법어선의 출입통제 협력,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우량품종의 공동개발·수산분야 기술교류 및 제3국 어장 공동진출 등이다

정부는 이미 합의한 남북공동어로, 제3국 불법어선 출입통제 등 서

해상 군사적 긴장완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남북간 수산협력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산협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동해에서의 공동어로 사업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남북간 수산협력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양식장, 냉동냉장시설·활어집하장 등 부족한 생산·가공·유통시설을 갖출 수 있고, 남한 입장에서는 어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등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제4절 개성공단사업

2005년 들어 본격화된 시범단지 개발을 계기로 남한의  
**1. 추진현황** 인원과 차량들이 비무장지대(DMZ)를 넘나드는 일은 이제 일상의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였던 개성지역을 개방, 공단을 조성하고 단절되었던 도로를 열리게 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에 기여하는 평화사업으로도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시범단지의 생산가동이 본격화에 오른 것 이외에도 남북간 단절되었던 전력이 다시 연결되고 전화가 개통된 것은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개성공단 개발을 통한 남북간 경제협력 증진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증진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에는 많은 북한 근로자들과 우리측 기업인들이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며 접촉과 소통

### 단계별 개발계획

총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 적 : 총 2,000만평(65.7km<sup>2</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li> </ul> </li> <li>• 단계별 개발계획 : 3차에 걸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100만평 규모의 노동집약적 중소기업 공단</li> <li>– 2단계 :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li> <li>– 3단계 : 중화학공업과 산업설비분야의 유망업종을 유치, 복합 공업단지로 조성</li> </ul> </li> </ul>
1단계(100만평) 개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li> <li>•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li> <li>• 사업비 : 2,205억원</li> <li>• 시행자 : 현대아산·토지공사</li> <li>•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li> </ul>



을 확대해 나가는 작은 통일의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북한이 안정적으로 변화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얻은 경험은 북한의 실용주의적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시범단지에는 11개 기업이 생산 단계에 들어가는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 2005년에 1단계 1차 5만평을 분양받은 24개 기업·기관들이 입주하게 되는 2006년에는 공업단지로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 분야별 추진일지

구분	추진 내용	일 자
사업자 조치	○ 시범단지 전력공급 개시	2005. 3.16
	○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공고	2005. 8. 1
	○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2005.12.28
북한측조치	○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제정·공포	2005. 7.15
	○ 「회계검증규정」 제정·공포	2005.10.28
	○ 관리위 북측 협력부 근무 시작	2005.11.22
	○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소 개소식	2005. 12.22
남북당국간 합의	○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	2005. 3.24
	○ 개성공업지구및금강산지구의를출입및체류에관한합의서 발효	2005. 8. 1
	○ 개성공업지구통관·통신·검역 합의서 발효	2005. 8. 1
대내조치 및 주요동향	○ 시범단지 협력사업 승인 완료	2005. 1.26
	○ KT 협력사업 승인	2005. 4.13
	○ 리빙아트 멕시코 컷 수출 행사	2005. 4.30
	○ 신원 준공식 행사 및 패션쇼 개최	2005. 5.26
	○ 외국인 바이어 방문 시작	2005. 6. 3
	○ 로만손 협동화공장 준공식	2005. 8.11
	○ 대화연료펌프 공장 준공식	2005. 9. 6
	○ 주한 EU 상공회의소 개성 방문	2005.11. 2
	○ 본단지 1차 입주기업 협력사업 승인 시작	2005.11. 8
	○ 개성공단 통신장비 반출관련 미 상무부 허가 획득	2005.11.16
	○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2005.12. 5

## | 개성공단 개발 과정 |



1단계 부지 조성 전



1단계 부지 조성(2005년 11월 현재)



시험단지 조성 전



시험단지 조성 (1)



시험단지 조성 (2)



시험단지 조성 완료

## 2. 1단계 100만평 개발

가. 시범단지 조성 및 가동 | 2004년에는 시범단지에 (주)리빙아트 등 2개 기업이 공장을 준공하였고, 2005년에는 (주)신원, (주)로만손 등 9개 기업이 준공식을 가졌다. 이로써 시범단지 분양을 받은 15개 기업중 2005년 12월말까지 생산 가동중인 기업은 총 11개 기업이고, 2개 기업은 공장가동 준비를, 2개 기업은 공장건축중에 있다.

입주기업들의 생산체계가 가동됨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리빙아트는 개성공단 제품을 처음으로 해외수출을 하였고, (주)신원은 5월 26일 준공식과 함께 개성공장에서 남측 연예인이 출연하는 패션쇼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주)로만손은 8월 11일 첫 협동화공장의 준공식을 가졌다. 생산가동중인 시범단지 입주기업의 2005년 생산총액은 1,490만달러이며, 업종별로는 섬유 624만달러(45%), 금속기계 520만달러(35%), 화학 177만달러(12%) 등이다. 이중 해외수출은 중국, 호주,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87만달러이다.

### 나. 본단지 사업 추진

#### (1) 1차단지 5만평 분양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는 2005년 1월 관계부처 협의 및 분양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 기준과 방법 등 70여만평(공공용지 제외)에 대한 분양계획을 확정하였다. 그중 1차로 5만평을 입주수요가 가장 많은 섬유·봉제·의복 및 가죽·가방·신발업종에 우선 분양하기 위하여 일반공장용지(3만 9,000평), 협동화단지(8,000평), 아파트형공장용지(4,000평)로 구분하여 2005년 8월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93개 업체가 신청하였다. 이중 일반공장용지 17개 업체, 협동화단지 6개 업체, 아파트형공장용지 1개 기관(한국산업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현황

(단위 : 평, 억원)

업체명(대표)	업종	분양면적 (건축면적)	투자금액	승인일	준공일
부천공업(주)	전기공급, 제어장치	2,439 (850)	45	2004. 9. 8	2005. 7. 30
(주)매직마이크로	전자부품, 영상장비	1,222 (590)	30		2005. 6. 30
(주)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1,221 (611)	50.8		2005. 6. 30
삼덕통상(주)	신발제조	2,439 (2,900)	49.6		2005. 7. 15
(주)태성산업	플라스틱 제품제조	2,439 (1,273)	60		2005. 8. 30
문창기업(주)	봉제의복	1,627 (761)	38		2005. 8. 10
용인전자(주)	전자부품	2,439 (1,134)	40		—
(주)리빙아트	기타 금속제품	999 (590)	45	2004. 9. 20	2004. 12. 15
(주)SJ테크	플라스틱 제품	1,626 (783)	40		2004. 12. 28
(주)신원	봉제의복	2,439 (693)	37.9		2005. 2. 28
(주)호산에이스	일반기계 제조	999 (583)	26		—
(주)로만손	시계 및 부품제조	2,621 (1,417)	155.8	2004. 10. 19	2005. 8. 30
(주)TS정밀	반도체, 전자부품제조	1,627 (654)	28		2005. 11. 10
(주)제시콕	통신, 방송장비 제조	1,778 (606)	43	2005. 1. 26	—
재영솔루텍(주)	기타 기계 제조	2,439 (821)	50		—

지공단) 등 24개의 입주 업체·기관이 선정되어 2005년 9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가격은 시범단지와 동일하게 평당 14만 9,000원으로 책정되었다. 본단지 추가 분양은 2006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 (2)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개발사업은 2004년 4월 13일 개발사업자가 복측과 토지임차료 및 지장물 철거비 등으로 미화 1,600만달러를 지불하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월 23일 정부의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부지조성에 착수한 이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5년말 현재 9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에 공사를 조기 완료할 계획이다

### (3) 내부 기반시설 공사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은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단지내시설(도로, 상·하수도, 조경, 특수시설물) 등 내부 기반시설과 외부 기반시설인 전력·통신으로 정부는 입주업체가 우리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국내 공단 수준에 맞춰 지원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2006년말까지는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내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외부 기반시설인 전력·통신 사업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장기저리대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용수시설은 공단 북쪽 약 17km 떨어진 월고저수지에서 하루 6만톤(개성시 공급분 1만 5,000톤 포함)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측이 시공하는 댐축조와 도배수관로는 2005년 11월에, 남한측이 시공하는 정배수장은 12월 착공하였으며, 이들 시설은 모두 2006년말까지 모

두 완료할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폐수처리시설은 1단계지역 8천평 부지에 하루 3만톤 처리규모로 설치되며, 그중 하루 처리규모 1만 5,000톤의 1단계사업은 2005년 4월 착공하여 2005년말 현재 21%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1단계지역내 1만 5,000평 부지에 매립시설 20만 4,000톤, 소각시설 하루 40톤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다. 북한측과의 설치 위치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어 착공이 늦어졌으나 1단계사업(매립 시설 6만 1,000톤)을 2005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2006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단지내 시설중 도로, 상·하수도는 2004년 8월 착공하여 2005년말 현재 38%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교량 등 특수시설물은 2005년 10월에, 근린공원·체육공원 등 조경시설은 2005년 12월 착공하여 2006년말까지는 모든 단지내시설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시범단지 및 1차단지 5만평은 본단지 기반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하수 개발, 임시폐수처리장 설치, 폐기물 북측 위탁처리, 진입도로 우선 건설 등을 통하여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4) 전력·통신 공급

2004년 12월 남북간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합의서」가 체결됨에 따라 2005년 1월 배전시설(1만 5,000kW) 공사에 착수하여 2005년 3월 시범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을 개시하였다. 금번 전력 공급은 1948년 5월 14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단전 조치 이후 57년 만에 끊어진 전기가 휴전선을 넘어 다시 남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아울러 본단지에 대한 송변전시설(10만kW) 공사도 추진하여 2005년 4월 송전경과지 노선을 확정하고, 2005년 7월 관계부처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다. 2006년초 사업에 본격 착수하여 본단지 가동에 맞춰 2006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개성공단 통신공급은 2004년 12월 KT와 북한측의 조선체신회사간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추진되었다. 이후 양측은 요금, 정산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여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요금은 1분당 미화 40센트로 종전 보다 2달러 30센트 인하한 수준에서 결정하였다. 동 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에 합의하여 2005년 3월 24일 「개성공업지구 통신공급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통신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KT에서는 공단과 군사분계선 인근 통신망 공사를 추진하여 2005년 7월 18일 남북간 민간차원의 최초 광케이블 접속을 하였으며, 2005년 11월 17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에 의한 재수출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11~12월중 공단내 KT 통신실에 교환, 전송장비 및 개성전화국에 전송장비를 설치하여 12월 28일 228회선을 개통하였다. 개성공단 통신망 개통은 기존의 금강산 관광통신과 같은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과 달리 남북간을 직접 연결하는 광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상용통신망을 분단이후 처음 이용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개성공단 통신망 개통은 저렴하고,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북 IT협력사업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미국의 EAR 등 국제규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남북 IT협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개성공단의 통신환경을 국내와 동등한 수준으로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전용회선 등의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3. 안정적인 사업 추진기반 구축

가. 법·제도 정비 | 북한은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한 이후 2005년 말까지 총 14개의 하위 규정을 제정하였다. 2005

년에는 「세금규정」, 「노동규정」, 「회계검증규정」 등을 제정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의 위임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2005년말까지 부동산 등록준칙 등 공단 관리와 운영을 위한 30여개의 사업준칙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남북 당국은 2002년 12월 8일 체결한 「개성공업지구 통관·통신·검역 합의서」와 2004년 1월 29일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2005년 8월 1일 발효시켰다.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 및 해석·적용, 개성공단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 법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 설치한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는 관·검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2005년에는 총11회의 자문회의를 열어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세부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자문, 개성공단 관련 우리측 합의서(안) 및 북한측과의 협상대책에 대한 자문, 개성공단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의 처리방향에 대한 자문을 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개성공단 법제구축은 입주기업의 투자안정성 보장을 위해 기업친화적인 법제도 정비에 초점을 두어 왔다. 향후에는 이러한 기업경영관련 법제의 확충과 함께 남북주민의 공동생활에 따라 발생가능한 법적문제를 규율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교류 관련 법제를 정비해 나감과 동시에 남북한 법제통합을 위한 중·장기적 차원의 법제 구축 작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 나. 지원 체계 강화

### (1) 개성공단 관리체계

2004년 10월 20일 개성공단에서 개소식을 갖고 출범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2005년 12월말 현재 위원장 1명, 상근이사 1명, 기획



조정부, 사업지원부, 공단관리부, 출입사업부, 협력부, 서울사무소 등의 부서가 있으며, 총44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협력부는 5명의 북한 인원들로 구성되어 2005년 11월 22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2005년 시범단지의 생산가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는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영업허가, 건설허가와 준공검사, 토지이용권 및 건물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기반시설 관리, 출입증명서 발급, 환경보호, 소방대책 등 개성공단의 종합적인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해 왔다. 관리위원회 사무실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인근에 부속건물을 포함 1,150평 규모의 임시건물로 건축되었으며, 1단계 100만평 개발이 완료되는 2007년경에는 개성공단 중심부에 본 건물을 건축, 완전한 면모를 갖출 예정이다.

관리위원회에 대한 업무 지원의 효율화를 위해 2004년 11월 설립된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2005년에도 지원단과 관리위원회간의 제반 행정적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관리위원회의 사업수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하였다.

2004년 10월 통일부의 조직으로 출범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통일부·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노동부·건설교통부 등 8개 정부부처 인원들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로 개성공단 개발사업 지원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며, 노무관리·통행·통관절차 등 각종 제도수립, 입주기업 지원, 투자유치, 기반시설 건설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5년에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우리은행 개성지점



(2) 공단지원시설 설치·운영

개성공단에는 입주기업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은행, 의료시설, 식당, 편의점 등이 입주해 있다. 2004년 12월 1일 관리위원회 임시청사 내에 지점을 개점한 우리은행 개성지점은 2005년부터 업무를 본격 개시하여 송금 및 환전, 예금 및 대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남한측 인원 2명, 북한측 인원 3명 총 5명이 근무중이다.

의료시설로는 사단법인 YMCA의 의료봉사단체인 그린닥터스가

그린닥터스 개성병원



2005년 1월 10일 개성병원을 개설하였다. 의사 1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이 상주하여 의료봉사를 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말 현재 남측 인원 6,800여명, 북측 인원 1,200여명 등 총 8,000여명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밖에 식당

과 편의점을 통해 식사를 제공하고, 각종 생필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편 관리위원회는 2005년 2월 소방대를 창설하여 소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방대는 우리측 인원 2명과 북측 소방대원 11명으로 구성되어 24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10t급 물탱크 소방차 1대, 5t급 화학펌프차 1대와 소방복, 공기호흡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화재예방 및 화재진화 활동을 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위원회는 1단계 본단지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할 것을 대비하여 직업훈련센터, 종합지원센터 등 공공지원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준비에 착수하였다. 종합지원센터는 연건평 9천평 규모로의 건립될 예정으로 개성공단 투자유치 및 경영지원, 전시·판매·컨벤션 및 홍보, 각종 편의시설, 이산가족면회소, 사회문화교류센터 등 복합적인 공공지원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006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9년경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3) 사업지원체계 정립·운영

개성공단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함에 따라 통일부는 개성공단 관련 개발사업자와 입주기업, 전문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전방위적 정책공동체를 형성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성공단 포럼,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개성공단사업협의회, 입주기업대표자간담회 등이 개성공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공동체이다.

우선 개성공단포럼은 개성공단 개발·운영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개성공단 사업관련 「총괄」, 「인프라」, 「분양 전략」, 「인력·문화」 등 4개 하위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개발사업자, 지원기관 등 33명이 참여하고 있다.

2005년 한해 동안 전체회의 4회, 공개세미나 1회 등 총15회의 회의 및 세미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통일부에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유관기관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는 통일부, 산자부, 재정부, 중기청 등 관련 정부기관 4개 부처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협회, 산업은행, 산업단지관리공단, KOTRA, 대한상의 등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12개 민간 유관기관 등 총16개 기관으로 구성되었다. 2005년에는 총3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입주기업 지원수요조사 결과 나타난 공정전문가 지원,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 지원, 연구개발 전문가 지원,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

개성공단사업협의회는 관리위원회와 지원단, 그리고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개성공단 사업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종 현안을 협의·해결함으로써 개성공단 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이다. 2005년도에는 총1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현안을 협의·해결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입주기업대표자 간담회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시범단지 입주기업들과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채널이다. 입주기업대표자 간담회는 입주기업들이 공장건축, 제품생산 등 개성공단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정부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 다. 지원대책 추진

### (1) 노무관리 지원

#### (가) 인력공급 및 채용

2005년 12월말 기준 개성공단 내에 근무하는 북한측 근로자는 6,011명으로 남한측 근로자 507명을 포함한 전체 근무인원은 6,518명이다.

(단위 : 명)

합계	소계	리빙	신원	SJ	삼덕	문창	대화	로만손	호산	부천	태성	재영	제시콤	티에피
	4,211	376	330	143	1,056	567	152	552	40	350	454	116	70	5
6,011	소계	관리위원회			지원기관		한국토지공사 · 현대아산(건축 · 토목 · 정비 포함)							
	1,800	54			20		1,726							

입주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하 지도총국)에 요청하고 지도총국은 개성시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인력을 공급받고 있다. 기업은 지도총국에 근로자 1인의 알선에 대하여 노력알선료로 미화 17달러를 지급한다.

#### (나) 직무교육

입주기업이 지도총국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으면 통상 2~3개월간 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북측 근로자들은 목표의식을 갖고 근무에 임하고 학습능력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은 특히 수작업을 요하는 봉제직종에서 두드러져 일부 기업은 남한의 80~85%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사용 경험이 없는 기계 직종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사전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각 기업별 공통 요구사항인 직장예절, 생산관리, 품질관리, 산업안전 등 7개 과목의 기초직무교육 편성과 교과 편성, 교재준비,

개성공단 내의  
남북의 근로자들



강사선정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시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북한측과 협의중에 있다. 2005년 10월에는 일부 북한측 사무 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초교육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직업교육으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직업훈련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직업훈련센터는 부지 7,000평, 연건평 3,000평의 3층 건물로서 연간 2~3만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5년에 부지매입, 설계착수를 했고, 2007년 3월 완공 예정이다.

#### (다) 근로관계 기준정립 및 제도 정착 지원

북한측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준칙(안)을 마련하여 2005년 7월 북한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관리위원회와 북한측이 협의하여 만든 노력알선계약서(안) 및 노력채용계약서(안)에 기 전달한 노동준칙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으며 이 노력알선계약서 및 노력채용계약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노력알선 및 채용과 관련한 표준적인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내 북한 근로자들은 통근버스(관리위원회 18대, 현대아산 5대, 지에스 1대 운영) 혹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오전 7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하고,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퇴근을 하고 있으며 주 48시간 내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있다. 물량증가 등 필요한 경우에는 북측 직장장과 협의하여 연장·휴일근무 등을 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은 연장·휴일근무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로써 연장·휴일 근무시에는 기업이 북측에 가급금을 지급한다.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노동규정에서 정한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에 관한 세부시행방안을 상호협의 중에 있다.

#### (라) 산재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2005년 12월말 현재까지 개성공단 산재사건은 전체 20건으로 남측 7건, 북측 13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북한 근로자들의 사고는 기계 조작 실수, 경험미숙 및 호기심에 의한 임의 조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별로 산업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는 노동안전세칙을 마련하여 북한측에 전달, 협의 중에 있다.

#### (2) 전략물자 반출 문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설비·자재 반출과 관련,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기업이 최종사용,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다자간 국제협약인 핵공급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협약(WA) 등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이행,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국내기업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2005년에도 한국무역협회 산하의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와 협력하여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 통제체제를 운영하고,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자에 대해서도 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컴퓨터 등 주요 반출물자에 대한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비치, 관리실태 보고체계 운영 등 다양한 사후통제·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정부는 미국과 EAR상의 수출통제품목 반출문제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EAR 규정 준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5년 11월 KT는 개성공단 전화 개설을 위한 통신장비에 대해 EAR 규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음으로써 본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전략물자 반출에 대해서도 미국측의 긍정적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지금까지 형성된 한·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인식을 공유하고 개성공단 물자 반출과 관련, 양국 실무자간 수차례의 실무협의회 개최, 국제회의 참석, 통일부장관의 방미 등을 통해 한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 (3) 원산지 및 판로확보 문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생산체제가 완비될 경우 생산 제품의 판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수출제한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2004년 11월 타결되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선례로 활용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하여도 한국산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한-싱가포르 선례를 바탕으로 2005년 7월에 타결된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FTA 및 2005년 12월 각국 정상들이 기본협정에 서명한 한-ASEAN FTA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영되었다. 본단지 조성이후 제품생산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한-미, 한-일 등 20여개의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특혜관세를 받도록 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외관로 확대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각국의 원산지 제도를 파악하고 국가별로 북한산 제품에 대한 진입규제, 쿼타규제, 관세율, 일반특혜관세(GSP)세율 등을 조사하여 입주기업 및 입주 희망기업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혁신박람회’, ‘기술혁신대전’ 등을 통하여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홍보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중국, 유럽 등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홍보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4) 금융지원

개성공단 시범사업은 2005년도에 11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보다 높은 물류비 및 공장 건축비 등은 입주기업들에게 추가 부담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금사정이 열악한 입주기업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경협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대출기로 하였다.

2004년 남북협력기금대출 승인액이 259억원이고 집행액은 181억원이다. 2005년에는 기금대출승인액은 184억원이고, 집행액은 203억

원이다. 2005년까지 13개 입주기업에 대해 총 443억원의 기금대출승인이 이루어졌고 이중 384억원이 집행되어 입주기업의 투자재원 마련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편 2005년 9월 분양이 완료된 본단지 5만평 입주예정 기업에 대하여도 2006년부터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 (5) 남북간 통행절차 간소화

정부는 개성공단이 국제 경쟁력을 갖는 공단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통행절차 간소화가 선결과제라고 보고 많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5년에는 무선인식(RFID)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통행·통관 및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지원받아 2005년 RFID 선도사업과제로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방문증명서와 관리위원회의 출입증을 하나의 RFID전자증명서로 일원화하고, 통일부의 차량운행승인서와 관세청의 통행차량증명서 및 관리위원회의 차량통행증을 하나의 RFID카드로 대체하여 인원 출입 및 차량통관 심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전략물자 및 미국의 EAR 승인대상 품목 등 주요물자에 대해서는 반출입시 물품관리 태그를 부착토록 하여 반출입 및 사후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들어 1단계 시범단지 입주와 공장 생산가동이 확대되고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이 이루어지는 등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인원과 차량 통행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행량의 증가에 따라 남북관리구역의 통행방법도 종전에는 오전 출경, 오후 입경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오전과 오후 구분없이 통행이 가능해지고 입출경을 합하여 1일 통행 횟수도 17회내외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력사업용 물자의 반출입신고 생략, 차량

승인유효기간 연장 및 승인처리기간 단축, 원산지 신고제도 개선, 반입물품의 선별검사 시행 등 많은 제도 개선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북한측은 남북관리구역 통과시 군부가 시행하던 출입인원에 대한 검색을 폐지함으로써 통행불편이 크게 개선되었다. 관리위원회는 북측의 출입관리 시설의 확충을 위해 개성공단 진입 도로변에 출입관리 시설을 신축하여 12월에 완공하였다. 검사 장비 등이 완전히 구비되면 수작업에 의존하던 출입심사 및 통관검사가 현대적 전자식 검사 장비에 의해 보다 신속히 처리될 것이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본단지 본격 입주 및 개성관광 등 통행수요에 대비하여 남북군사당국간 협의중에 있는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조기에 체결하여 연중무휴·자유통행이 신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5절 육·해·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

### 1. 육로

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 2005년에 이르러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도로는 이미 사람과 물자가 오가고 있으며, 철도는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어 개통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합의된 남북경협 의 상징적 사업이다.

2003년 10월 경의선이 연결되고, 2004년 11월 동해선 마지막 연결 공사가 완료되었다. 2005년 들어서 차량과 인원의 일일평균 이용량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철도의 경우, 우리측 구간 경의선은 2002년 12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동해선은 2005년 본선 궤도 부설 등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 시설공사가 완료되었다. 북측 구간도 경의선·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역사공사 및 각종 운영설비 설치공사 등 마무리 공사중이다.

한편, 남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및 남북철도·도로 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 2005년 10월중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을 개최하고, 2005년 연내에 철도를 개통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8월 18일부터 25일에 남북한의 토목·건축·신호·통신·전력 등 분야별 철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남북 연결구간에 대한 공사 실태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열차·차량운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합의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차시험운행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예정되었던 열차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 철도개통이 모두 2006년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한편 열차·차량 운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2003년 1월과 2004년 8월에 각각 가서명한 「남북사이의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2005년 8월에 발효시킴으로써 남북간에 정상적인 열차·차량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앞으로 남북간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본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남북간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남북간 평화정착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남북 육로출입절차 개선** | 2005년 한해가 남북교역액 1조원, 남북 왕래 인원 9만명, 금강산 관광객 30만명 시대로 상징되듯, 경의선·동해선 도로가 연결되면서 수많은 인원과 물자들이 남북을 오가게 되었다. 육로를 이용한 금강산관광,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자재·장비 수송이 대표적 사례이며, 그 외에도 각종 남북회담,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 교류협력, 인도적 사업 등을 위해 인원과 차량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3년 2월부터 남북간 육로통행 출입업무를 관할하는 임시 출입사무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11월 20일 통일부 소속기관으로 남북출입사무소를 신설하여 남북출입업무를 제도화하였다. 남북출입사무소는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를 통한 남북사이의 인원 왕래, 물자의 반출입 및 수송장비 운행시 세관 검사(Customs Inspection), 출입심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등 고유한 출입심사(CIQ) 업무와 함께 남북 철도·도로의 운영, 남북 차량 운행과 관련된 북한과의 협의 및 연락, 남북 출입에 따른 긴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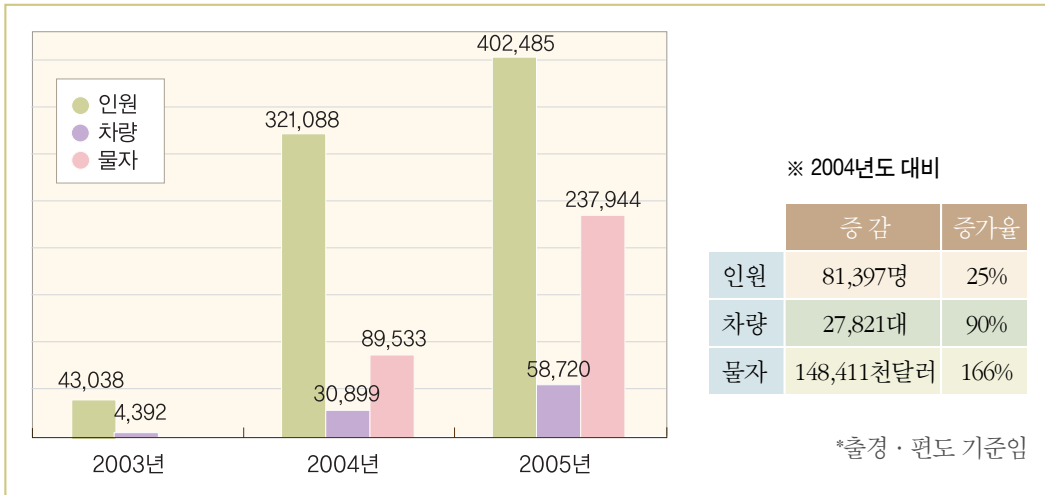
황의 처리, 남북출입계획 작성·조정 등의 남북 출입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11월 경의선·동해선 도로 개통 이후 남북간 육로를 이용한 인원 및 차량 통행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절감 및 남북출입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방북증명서 현장 재발급, 수시방북자 신고·연장 확인, 경의선 지역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 경의선 남북관리 구역 통행절차 간소화 등 남북 육로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북출입계획 전산시스템 구축('05. 5. 16), 관세청과의 자동차운행관련 민원처리시스템 통합('05. 7. 4),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시스템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연계('05. 12월) 등 출·입경 자동관리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육로출입운영시스템과 관계부처와의 육로출입시스템 통합하는 등 국민 입장에서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다. 남북 육로출입 현황 | 2005년 육로출입 인원은 금강산관광객 29만8,247명을 포함하여 40만2,485명으로 2004년도 32만1,088명보다 약 25%가 증가하였다. 육로방북은 금강산관광 74.3%, 개성공단사업 13.1%, 모래반입, 식량차관 등 경협사업이 8.9%, 철도·도로연결사업 1.6% 순으로 이루어졌다.

경의선 도로를 통한 육로방북은 개성공단사업, 대북지원 및 경협협회의 등 개성지역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짐에 따라 2004년 대비 176%가 증가한 6만6,772명이었으며, 동해선은 금강산관광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한 33만5,713명이 출입하였다. 2005년도 육로출입 차량은 경의선 3만8,720대, 동해선 1만9,852대 등 총 5만8,720대로 2004년도 3만899대보다 약 92%가 증가하였다. 차량은 개성공단사업 35%, 모래반입, 식량차관 등 경협사업 34.9%, 금강산관광 19%, 철도·도로연결사업 6.5% 순의 분포를 나타낸다.

### 남북 육로출입 현황



라. 남북출입시설 신축 | 본격적인 남북간 육로통행시대에 대비하여 경의선·동해선 남북출입시설 신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남북출입시설 건설은 남북간 물류 확대 및 수송비 절감과 더불어 한반도가 동북아 교통·물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인 효과와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남북출입시설 신축사업은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총사업비 2,803억원(경의선 1,587억원, 동해선 1,216억원)을 의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남북출입시설은 시설 이용의 효율성과 고객편의 중심의 공간배치 및 환경오염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2004년 9월 23일 경의선 지역 본출입시설 건물 착공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라산 지역에 약 13만평, 동해선 저진 지역에 약 12만평의 철도·도로 출입시설단지가 형성될 예정이다. 도로 본출입시설은 2005년 12월 완공하였고 철도 출입시설은 2006년 4월 완공 예정이며, 기타 부대시설 및 공용야드는 200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해당 공사를 추진 중이다.

## 2. 해로 및 항공

남북간 안정적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고 해운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4년 5월에 채택된 「남북 해운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2005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와 북한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간에 해상항로가 개설되었으며 지금까지 제3국 국적선이 운항하던 남북간 항로에 남북한의 국적선이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남북한은 해운합의서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2005년 8월에는 남북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 등 2회선의 유선통신망을 가설하였으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절차 및 방법과 관련한 자료를 상호 교환하였다. 또한, 2005년 9월에는 남북해사당국간 협의기구로서 남북해운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5년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총 4,497회로 전년대비 112% 증가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운항은 2,228회로 전년대비 134%가 증가하였고,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운항은 2,269회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이는 대부분 인천-해주간 모래운반선의 운항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북한선박은 45회 남북간 항로를 운항하였으며 이중 39회는 북한 항구에서 북한항구로의 운항이다. 현재 남북간에는 남북교역물자 등의 운송을 위해 인천~남포, 부산~나진간의 2개 항로에 2척의 정기선이 각각 주 1회 운항중이다.

한편, 남북간 항공기 운항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최초로 서해상의 남북 직항로로 인천-평양 사이를 운항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남북간 항공기 운항횟수는 편도기준 2000년 43회, 2001년 19회, 2002년 67회, 2003년 111회, 2004년 28회 운항하였으며 2005년에는 남북간 항공기 운항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8회 운항하였다. 이중 남한에서 북한으로 운항은 103회, 북한에서 남한으로 운항은 105회이다.



## 제6절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

2005년은 6·15, 8·15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비롯하여 체육·종교·문화예술·학술·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접촉과 왕래의 확산에 따른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한 해였다. 2005년 사회문화교류를 위해 남북을 왕래한 인원은 2004년 3,557명의 3배인 10,77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건수도 47건으로 전년도의 16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9월과 10월에는 7,300여명의 남한주민이 평양문화유적답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한편 광복60주년을 맞이하여 북관대첩비 반환사업, 안중근의사유해발굴·봉환사업 등 남북간에 민족사적 의미가 큰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남북당국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듯 민간단체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문화교류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양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남북한 주민들이 이질감을 해소하고 상호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1. 남북공동행사

가. 6·15통일대축전 | 2005년은 6·15공동선언 5주년, 광복 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시민사회단체는 6·15통일대축전 행사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2004년 하반기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남·북·해외 3지는 3월 3일에서 5일까지 금강산에서 ‘6·15공동선언실천을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6·15공동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백낙청(남한)·안경호(북한)·문동환·곽동의(해외)씨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 통일대축전 개막식



6·15공동위원회는 6·15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6·15통일대축전」(6월 14일~17일)을 평양에서 개최하였다. 이를 위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당국대표단 40명과 백낙청 6·15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민간대표단 295명이 서해 직항로를 이용하여 평양을 방문하였다. 특히 이 행사에는 남북당국이 처음으로 참여하여 당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였다. 6·15공동위원회는 6월 15일 개최된 민족통일대회에서 '6·15 공동선언발표 기념일' 제정과 동족 사이의 공조 강화, 핵전쟁의 위험 제거, 6·15 공동위원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족통일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밖의 주요 행사로 개·폐막식, 노동·농민·교육·종교·여성·청년학생 등 부문별 상봉행사, 체육유희경기 등을 개최하였다. 문화예술공연으로는 남한측은 가극 '금강'을 공연하였으며, 북한측은 '춘향전'을 공연하였다.

한편, 행사기간 중 남한 정동영 단장은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방문하여 6월 17일 2시간 30분간 단독 면담하였다. 정동영 단장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하고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6자회담 복귀 용의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제반 실질적 조치들도 협의하였다. 남북관계가 10개월여만에 정상화되고, 북핵문제 해결이 중대 국면에 놓여있는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과의 6·17 면담은 남북 상호 신뢰증진과 남북관계 도약의 발판 마련에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된 의미있는 자리였다

나. 8.15민족대축전 | 「6·15통일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한 6·15공동위원회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8·15민족대축전」(8월 14일~17일)을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도 「6·15통일대축전」 행사와 마찬가지로 남·북·해외의 민간뿐만 아니라 남북당국도 참여하였다. 북한은 김기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당국대표 17명, 안경호 6·15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민간대표 100명, 남녀축구선수단 65명이 참여하였다.

8월 15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8·15민족대회에서 남·북·해외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민족대회

참가자들은 “온 겨레의 힘과 뜻을 모아 6·15선언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사의 대장정을 중단 없이 이어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통일과 분단시대의 낡은 제도와 관념 개혁, 전쟁 위협과 군사적 대결 종식·항구적 평화실현,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향한 다방면적인 협력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서대문형무소 참관, 개·폐막식, 부문별 상봉행사, 문화예술공연 관람(무애지무)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6·15공동위원회는 「8·15 민족대축전」 개·폐막식에 8·15남북통일축구경기를 개최하는 등 보다 많은 일반시민들을 행사에 참여시킴으로써 민족전체의 축제로 승화시키는데 노력하였다.

행사기간 중 북한 대표단은 분단이후 최초로 국립현충원 현충탑에 참배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의미있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 대표단은 입원 치료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문안, 김정일 위원장의 평양 방문 초청의사를 전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6·15 5주년을 계기로 정상화된 남북관계 흐름은 8·15 광복 60주년 남북공동행사 이후 한 단계 심화·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지방자치단체 교류** 지방자치단체의 대북교류는 교류사업 추진 중에 다양한 남북 지방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인천시 대표단은 평양을 방문(5.30~6.2)하여 인천시의 대북교류사업을 협의하였으며, 인천에서 개최된 제16회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9.1~4)에 북한선수단 20여명과 응원단 124명을 초청하기도 하였다. 특히 응원단은 경기장 응원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을 펼쳐 인천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강원도는 금강산 병해충 방제사업, 연어 부화장 지원사업 등 기존의 협력사업을 심화·발전시켜 추진하는 한편, 인적왕래 및 문화분야

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금강산에서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9. 27~29)을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는 북한 민족화해협의 회측과 공동으로 평양시 용성구역에 3ha 규모의 시범농장을 건설하였다. 경기도가 영농기술과 농기구를 제공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합친 시범농장은 14.8톤의 쌀을 수확하는 등 남북간 기술협력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경상남도는 평양시 강남군과의 농업협력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2006년부터는 농자재 지원, 농업기술 지원 등 본격적인 대북교류사업에 나설 예정이며, 전라북도는 황남 신천군 농기계지원 및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 지원사업을 2004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제주도는 1998년부터 매년 추진하여 왔던 감귤 등 농산물 보내기 사업을 2005년에도 실시하여 감귤 3,000톤, 당근 7,000톤 등 제주산 농산물 10,000톤을 북한주민에게 전달하였다.

그 밖에 서울시는 경평축구 부활사업,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 상영, 울산시는 전국체전시 북한 지역선수단 참가, 경상북도는 농업협력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중에는 충북 제천시와 북고성군 과수원 조성사업을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대북교류 현황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내용	진행상황
서울시	○ 서울-평양 축구대회	실무협의중
부산시	○ 부산국제영화제('05.10) 북측 참가	성사 안됨
인천시	○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05.9) 북측 참가	완료
울산시	○ 전국체전('05.10) 북측 지역대표단 참가	성사 안됨
강원도	○ 금강산 병해충 방제작업	사업시행중
	○ 원산농업기술소 개보수작업	사업시행중
	○ 연어 부화장 사업	사업시행중
	○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05.9)	완료
경기도	○ 남북합작 벼농사 시범농장 사업	완료
전라북도	○ 황남 신천군 농기계지원 및 농기계 수리공장 건설 지원사업	사업시행중
경상남도	○ 평양시 강남군과의 농업협력사업	사업시행중
경상북도	○ 농업협력사업	성사 안됨
제주도	○ 감귤보내기 및 제주도민 북한방문사업	사업시행중
제천시	○ 북고성군 과수원 조성사업	사업시행중
옥천군	○ 묘목지원 사업	완료
포항시	○ 동해안 연안시와의 교류	성사 안됨
경주시	○ 세계역사도시회의('05.10) 개성시 참여	성사 안됨
청주시	○ 직지심경 관련 학술 및 문화교류	실무협의중

### 3. 분야별 교류

가. 체육교류 | 2005년에는 남북 체육교류가 축구, 권투, 육상, 마라톤, 골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북한 선수단이 남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축구대회, 8·15통일축구대회, 인천아시아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활발한 남북한 체육교류가 이루어진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독일월드컵 동반 진출이 기대되던 축구는 북한의 탈락으로 아쉬움을 남겼으나 지방 3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된 동아시아 축구대회(7.29~8.7)에 북한의 남녀팀이 출전하고 이어서 8·15 남북공동행사 기간 중에 개최된 남북 통일축구대회에 또한 남녀팀이 동반 참가하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다.

2004년 10월 중국 심양대회부터 시작된 남북간의 권투교류협력은 한국권투위원회의 주관으로 3월(중국 심양), 6월(평양 1차), 10월(평양 2차) 대회가 연이어 개최됨으로써 매분기마다 정례화되고 있다. 특히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평양대회에는 각각 1만이 넘는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미국 선수가 참가하여 최초로 미국 기가 게양되었고 한국권투위원회의 지원과 경기주선에 힘입어 북한의 여자선수 3명이 세계여자권투평의회(WBCF) 챔피언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8월말에는 평양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대회가 개최되었고 분단 이래 최초로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공동 마라톤대회는 남북선수가 함께 달리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다. 9월 8일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참가시, 남북 올림픽위원장간의 접촉에서 2006 도하아시아경기대회와 2008 북경올림픽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남북 공동입장이 이루어진 동아시아대회(10. 29~11. 6, 마카오) 기간 중에는 남북대표단간 단일팀 실무 접촉이 이루어져 차기회담 개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12월 초 개성에서 남북단일팀 체육회담을 개최하였다.

**나. 종교교류** | 2005년의 남북종교교류는 지난 6·15이후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해로 평가된다. 불교계교류는 천태종이 지난 2003년 8월 북한 영통사복원위원회와 개성 영통사 복원을 남북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 한후, 2년여에 걸쳐 복원에 필요한 기와, 단청안료 등 자재를 20여차례에 걸쳐 지원을 하면서 300여명의 스님과 불자들이 방북, 남북간 인적교류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5년 10월 31일에는 영통사 낙성식 및 천태학술회의를 남북의 불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하여 남북이 협력하여 종교시설을 건립한 최초의

기록을 남겼다.

조계종에서도 2004년부터 추진해온 금강산 신계사 2단계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4년 대웅전 낙성식에 이어, 만세루, 요사채, 산신각, 3층석탑 등을 복원하였다. 신계사 복원사업은 2007년까지 12개동의 사찰을 복원할 계획이다. 한일불교복지협회에서는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방치된 임진왜란시 의병장 정문부 장군의 승전기록이 담긴 북관대첩비 반환사업을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 함께 추진, 2005년 10월 20일 일본으로부터 반환받았다. 북한측과 합의한 대로 2006년에 비의 원소재지인 함북 길주에 복원할 계획이다.

기독교 교류는 장로교 측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평양 대동강 구역에 온실과 관리사무소 건축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하고 관리동 2층에 평양제일교회를 설립, 지역 교인들의 예배처소로 활용토록 하였다. 동북아복지선교회에서는 평양 봉수빵공장에 냉동설비를 지원·설치토록 하여 북한 교인들에게 제공될 빵 생산량을 늘려 식량지원을 통한 대북선교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민족남북한선교회에서는 봉수농장에 왜성 사과과수원을 조성해 주기위해 사과묘목, 지주, 울타리시설 자재 등을 지원하면서 남북선교협력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장 통합 남선교회원으로 구성된 (사)기쁜소식에서는 낙후된 평양 봉수교회를 전면적으로 재건축하기 위해 기존건물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합의, 소요 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말 준공예배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기독교 선교단체인 조국통일기도동지회에서는 2005년 10월 평양 칠골교회에서 남북의 교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기도회를 개최하였다. 평양에서의 남북기독교인이 대규모 기도회를 가진 것은 처음으로 기독교 교류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감리교 서부연회에서는 2001년 이래 추진해온 평양신학원 운영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기적인 방북 등으로 남북기독교인의 인적교류를 확대시키면서 남북기독교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독교장로회에서는 2005년 5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우리측 200여명과 북측 10여명이 참석한 남북공동기도회와 성가제를 개최하였다. 천주교, 원불교 및 기타 종단에서도 대북 인도적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각 종단차원의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 문화예술교류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남측 및 북측 위원회는 공동으로 「고구려유물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 북측 소장 유물에 대해 서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북한소재 고구려유물 전시는 200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남북간 문화교류 아이템으로 진행되어 왔다. (사)민족문학작가회의는 2005년 7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를 평양·백두산·묘향산 등지에서 개최하였다. 분단 이후 남북 문학인들의 첫 만남이었던 「민족작가대회」에는 남측 113명, 북측 100여명의 문인들이 참석하였으며, 6·15 민족문학인협회 결성 및 6·15통일문학상 제정, 남북공동 문학지 발간 등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5년에는 평양방문 공연과 관련한 남북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6·15통일대축전」 문화행사로 가극 「금강」 평양공연과 가수 조용필 평양공연(8월 23일) 및 뉴서울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광개토호태왕」 평양공연(9월 7일)이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평양에서 개최된 「제24회 평양 윤이상음악제」(10월 25일~29일)에 우리측 관계자가 참가하는 교류도 진행되어 2004년도에 부진했던 공연분야 남북교류가 원활히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초로 북한의 무용수가 남한의 모델과 함께 TV광고 모델로 출연하여 대중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존에 남북교류가 추진되었던 분야와 달

리 새로운 형태의 교류사업이 성사되는 성과가 있었다.

라. 학술교류 | 2005년도 남북간 학술 교류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 고구려 문화유적 발굴·보존 관련 학술회의가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일본의 군국주의 정책을 규탄하는 전시회 등도 의미있게 진행되었다. 아울러 학술용어집 공동개발사업 등 남북이 공동으로 하는 학술협력사업도 일정 부분 진전을 이루었다.

2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서 남·북·러 학자들이 3국 공동학술회의를 개최, 그간의 고구려·발해역사에 대한 연구성과를 발표하는데 이어 7월에는 고구려 유적 평양공동답사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또한 남북한은 을사조약 100주년을 맞아 일본의 군국주의를 규탄하는 사진전시회를 2005년 11월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최하고 강점기 일본에 의한 우리민족 수탈사를 폭로하였다.

한편,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안중근의사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양측은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하였다. 9월 7일 1차 실무접촉에서는 안중근의사 유해위치가 확정된 이후 각기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발굴단을 구성하고 유해위치 관련자료의 조사 및 교환 등 유해위치 확인사업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국 여순에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당국 차원의 유해발굴 및 봉환사업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기념사업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남북 양측은 9월 14일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사업에 대한 남북합의서를 판문점을 통해 교환하였다. 11월 20일 2차 실무접촉에서는 안중근의사 유해위치에 대한 추가자료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나가면서 필요시 현지답사를 통해 안중근의사 순국기념일인 2006년 3월 26일을 계기로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 출판·언론교류 | 남북한 출판교류는 남북한 공동편찬, 저작권 교류 및 북한 저작물의 국내 출판, 남북 문인들의 만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북한 과학백과사전 출판사와 공동편찬한 『조선향토대백과』 20권을 2005년 4월 완간하였다. 『조선향토대백과』는 북한의 자연·인문·지리정보를 기초행정 단위별로 집대성, 북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사)통일맞이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은 2005년 2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공동편찬위원회 결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남북은 7월 평양, 8월 서울, 11월 개성에서 편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사전편찬요강을 합의하였으며, 「8·15민족대축전」시 백범기념관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2005년 3월 북한으로부터 북한 도서 3종과 노래 2종의 저작권 침해 보상 합의와 관리에 대한 위임을 받고 관련 활동을 진행하여 남한에서 출판된 월북작가 홍명희의 대하소설 『임격정』에 대한 저작권료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12월에는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대리업 관련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 저작권자의 위임을 받아 온 소설 및 동화 47편이 국내 출판사를 통해 출판될 예정이다.

도서출판 보리는 북한 사회과학원 학자들이 우리 고전을 국역한 『조선고전문학선집』을 『겨레고전문학선집』으로 편집하여 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비롯하여 총 11권이 출간되었다. 예맥출판사는 북한 전통 건축물 조사·실측 보고서 발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 7월부터 9월에는 (사)한국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및 (사)한국옷칠문화연구원과 함께 덕수궁 석조전에서 제1회 남북전통공예교류전을 개최하였다.

남북한 언론교류는 방송위원회가 주관하는 교류사업 및 지상파 방

송사별 방북취재 등이 진행되었다. 방송위원회는 2004년 아테네올림픽 중계 지원에 이어 2005년 7월에서 8월에 개최된 동아시아축구대회에서도 전 경기장면을 북한에 중계, 앞으로도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중계 지원사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2005년 9월에는 방송위원회가 주관한 제2회 남북 방송인 토론회가 금강산에서 개최되어, 남북 방송계의 회합을 정례화하였다. 11월 역시 금강산에서 열린 방송영상물 소개모임에서 남한 방송사들은 북한 영상물 114편을 구매하였고, 북한은 남한 방송사들의 영상물 22편을 구매하였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북한에 방송중계차를 제공하는 등 방송기자재 지원 및 방송기술교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KBS는 역사극 「사육신」주문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사육신」은 2006년 1월 기준으로 50% 가량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KBS는 「사육신」제작과 관련하여 북한에 방송촬영 장비를 제공하고 촬영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MBC는 2005년 2월 개성공업지구 현황, 개성시내 설맞이 모습, 개성지구 역사유적 등을 취재하여 뉴스테스크 및 PD수첩에서 방영하였다. SBS는 2005년 8월 23일 평양 유경정주영체육관에서 평양 주민 7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광복 60년 특집 조용필 평양 2005」공연을 개최하였고, 이는 남한에도 생중계되었다. 그 밖에 월간 『민족21』은 통일신보 및 조선신보의 기사를 반입하여 게재하였고 (주)관도라TV는 북한 뉴스, 음악영상물 등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MINISTRY OF UNIFICATION



# IV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제도화

제2절 대북지원의 내실화 도모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제4절 북한인권 개선 노력

2005년 6·17 면담으로 1년간 중단된 금강산 상봉행사가 재개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화상상봉이 실시되고, 3년간 지연된 면회소가 8월 31일 착공됨으로써 이산가족 교류 확대와 제도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

# IV

---

##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

2005년 6·17 면담으로 1년간 중단된 금강산 상봉행사가 재개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화상상봉이 실시되고, 3년간 지연된 면회소가 8월 31일 착공됨으로써 이산가족 교류 확대와 제도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대북지원은 단순 긴급구호에서 벗어나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성 향상, 보건의료시스템 복구 등 개발구호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우리주도로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중이며, 2004년에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한 민간-정부 분담 체제를 구축하였다.

새터민 정착지원의 경우,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인도적 입장과 국제법적 원칙하에 지원한다는 기본원칙과 국내 입국 메뉴얼을 확립하고 내부적으로는 단순 보호중심에서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2005년에는 6·17 면담

이후 한 단계 성숙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한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본격 제기하였으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2006년 2월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제도화

남북한 분단상황이 반세기를 경과함에 따라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그간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노력해 왔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는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지역에서 설, 추석 명절과 6·15 남북공동선언일을 계기로 3차례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상봉 정례화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합의 등 교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2004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산가족교류를 위한 사업들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 하반기에 상봉행사가 재개되고 면회소 건설도 착공식을 개최한 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고령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상봉이 최초로 실시되는 등 이산가족교류 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외연확대의 성과도 거두었다.

### 1. 상봉방식의 다양화

가. 이산가족 상봉 |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 이산가족

이후 한 단계 성숙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북한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본격 제기하였으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2006년 2월안으로 적십자회담을 개최, 상호 관심을 갖는 인도주의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제도화

남북한 분단상황이 반세기를 경과함에 따라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그간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노력해 왔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는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지역에서 설, 추석 명절과 6·15 남북공동선언일을 계기로 3차례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상봉 정례화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합의 등 교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2004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산가족교류를 위한 사업들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나, 2005년 하반기에 상봉행사가 재개되고 면회소 건설도 착공식을 개최한 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고령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상봉이 최초로 실시되는 등 이산가족교류 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외연확대의 성과도 거두었다.

### 1. 상봉방식의 다양화

가. 이산가족 상봉 |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이후 2004년까지 10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여 9,977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회를 가졌다. 2000년 8월 1차 상봉부터 2001년 2월 3차 상봉까지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상봉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2002년 4차 상봉부터는 금강산에서 순차 상봉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 하반기부터 지연되어 오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2005년 6월 정동영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재개되어 2005년도에는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제12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2차례 이루어져 현재까지 12차례의 상봉행사를 통해 총 11,788명이 상봉기회를 가졌다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단위: 건)

연도별 구분	'85	'00	'01	'02	'03	'04	'05	총계
생사확인	65	792	744	261	963	681	962	4,468
서신교환		39	623	9	8			679
방남상봉	30	201	100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98	598	400	397	2,133

#### (1) 제11차 이산가족 상봉

2005년 6월에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8월말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한측 가족 98명과 동반가족 47명이 먼저 재북 가족 229명을 상봉하고,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북한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34명을 상봉하였다.

#### (2) 제12차 이산가족 상봉

2005년 9월에 개최된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12차 이산가

제12차 이산가족 상봉



족 상봉행사를 11월초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북측 가족 100명이 먼저 재남 가족 441명을 상봉하고,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측 이산가족 99명과 동반가족 44명이 재북가족 219명을 상봉하였다. 2005년에 실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이산가족 상봉 현황

구 분	11차 상봉	12차 상봉
일정	'05. 8. 26~8. 31	'05. 11. 5~11. 10
상봉횟수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송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송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참관	삼일포(금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일포(금강산)</li> <li>현대 문화회관 교예단 공연 관람(금강산)</li> </ul>
상봉 가족수	남측 145명이 재북가족 229명 상봉 * 남측 가족보호자 동반 47명 북측 100명이 재남가족 434명 상봉	남측 143명이 재북가족 219명 상봉 * 남측 가족보호자 동반 44명 북측 100명이 재남가족 441명 상봉
기타	방북단에 국군포로 가족 2명 포함	방북단에 국군포로 가족 1명 포함

### (3) 화상상봉

화상상봉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거동이 불편하여 상봉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고령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동영특사 방북시 논의되었다. 이후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광복 60주년을 계기로 화상상봉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8월 15일 남북 각 40가족이 화상으로 첫상봉을 하였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1차 화상상봉 이후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연내 2차례의 화상상봉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제2차 화상상봉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제3차 화상상봉은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었다. 이에 2005년도 한 해 총 3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남한측 100가족 380명이 재북가족 249명을 상봉하였으며 북한측 99가족 272명이 재남가족 422명을 상봉하였다. 또한 화상상봉 과정에서 전송장치를 이용한 사진교환과 함께 제2차 화상상봉부터는 최초로 가족 대 가족 상봉방식을 도입하는 등 상봉방식의 개선 효과도 이루었다.

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생사·주소확인 등 시급하고도 손쉬운 사안부터 추

진하면서, 나아가 서신교환과 상봉, 재결합으로 확대되어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은 이산가족 교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수가 10여만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 빠른 시일내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각종 회담과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2000년 개최된 제2차 적십자회담에서 시범적인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실시에 합의한 이후, 2001년도에 2차례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통해 2,267명, 1차례 서신교환사업을 통해 남북 각각 300명씩 600명이 서신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12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정에서 총 26,298명, 3차례의 화상상봉 과정에서 2,338명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2차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2,267명을 포함하면 남북 각각 31,048명이 생사를 확인하였다. 서신교환은 1차례 시범사업에서의 600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79건 등 총 679건이 이루어졌다.

**다.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면회소 착공식 일정 및 그동안 연기되어 왔던 측량 및 지질조사 실시가 합의됨에 따라 면회소 건설을 위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착공식은 제11차 상봉행사 기간중인 8월 31일 면회소 부지에서 남북 공동행사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공사진행은 부지 정리작업 및 지하기초공사를 완료하여 전체공정의 9%정도 진행중이다. 향후 건설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2007년 7월에는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면회소는 부지 1만 5천평에 건평 6천평, 지하 1층 지상12층 건물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착공식

동시 1천명 수용이 가능하다. 시설이 완공되면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수시로 상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 마련은 물론 이산가족 관련 남북간 상시 협의창구 역할도 기대된다.

라. 영상편지 제작 | 영상편지제작 사업은 당국간 상봉 등 제한된 교류 여건하에서 많은 이산1세대들이 혈육상봉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산가족 1세대의 생전 모습을 영상자료로 제작·관리하여 향후 여건이 마련되면 북측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분단의 역사적·교육적 기록으로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2005년도에 우선 4002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하였다.

**2. 민간차원의 교류 지속**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1988년 7·7선언 이후 조금씩 증가되어 왔다. 정부는 당국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보다 촉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산가족 1세대는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사확인 80만원, 상봉 180만원, 교류 지속경비 40만원 등 교류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비지원 회수도 종전의 1 회에서 최대 3회까지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노력으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시작된 이래 2005년 12월말 현재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7,600건으로 이중 20%인 3,598건이 제3국을 통해 생사가 확인되었으며, 1,535 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다. 1998년부터는 개별적인 방북상봉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05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26건이 성사되었다. 2005년 한해 동안에는 생사확인 276건, 서신교환 843건, 제3국 상봉 94건, 방북상봉 1건이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현황

연도별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총계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3,598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10,231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94	1,535
방북상봉									1	5	4	5	5	4	1	1	26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는 주로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 국내 민간주선단체, 언론매체, 동향인 등의 주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류의 중개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각 지역을 방문하여 이산가족 정책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절차에 대한 설

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5년에는 부산, 대전, 인천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다.

### 3.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노력

납북자는 크게 6·25전쟁시기 납북자와 전후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쟁시기인 6·25기간 중 납북자는 당시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여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 기간 중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실향사민 등록사업에는 7,034명이 등록하였다. 또한 휴전 이후 납북된 사람은 총 3,790명으로 이 중 3,305명(87%)이 귀환하였고, 2005년 12월 현재 미귀환자는 485명(어부가 434명으로 90% 차지)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군포로의 경우 국방부는 6·25전쟁 중 실종된 국군을 41,971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포로교환시 귀환한 8,726명과 유가족신고 및 관련자료에 의해 전사처리된 13,836명을 제외한 19,40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볼 때, 2005년말 현재 최소한 국군포로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중 59명이 탈북과정을 거쳐 귀환하였다.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와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는 30명에 이른다.

정부는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북한측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8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과 2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생사·주소확인사업을 강력히 제기 하였다.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를 집중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15차부터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

을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협의·해결” 해 나간다는 것에 합의함으로써,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의 실질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는 별도로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이들을 포함시켜 12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26가족 104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이 상봉을 하였고, 39명에 대한 생사를 확인하였다.

한편, 정부는 납북자가족모임·납북자가족협의회·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납북자 관련단체들과 정례적으로 2개월 단위로 순차적인 의견수렴 및 정부정책 설명 기회를 갖는 등 관련단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이 밖에도 납북자 문제는 북한측과 같이 풀어가야 하는 문제이나, 정부의 노력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우선 귀환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법제정을 대승적·인도적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 제2절 대북지원의 내실화 도모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도 지원대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95년 이후 지난 10년간의 식량·비료 등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부분적으로나마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2004년 용천재해 지원을 계기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관 상호보완 구도하에 북한의 자립·자활을 돕는 개발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05년에 정부는 식량난·경제난의 장기화로 영양부족 및 발육부진 상태가 심각한 북한 영유아(230만명 추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하였고 민간 차원에서 이를 시범 추진하였다.

2006년부터는 5개년 계획하에 정부·민간·국제기구의 역할 분담하에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2005년에는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보건의료 등 장기적 복구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5개 민관 합동사업을 새로이 발굴·시행해 오고 있다.

## 1. 정부차원의 지원

가. 직접 지원 | 정부는 비료·종자·농약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지원의 효과와 분배투명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1999년에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최초로 정부가 구입한 비료 및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여 구입한 4만톤 등 총 15만 5천만 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이후 매년 20~30만톤씩 2005년까지 총 190만5천톤 5,946억원 상당의 비료를 당국차원에서 지원하였다.

특히 2005년 비료지원은 2004년 조문과동 등을 이유로 단절되어 온 남북당국간 대화를 복원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의미가 크다. 정부는 비료지원을 매개로 2005년 5월 남북차관급 회담을 성사시켜 남북 당국간 회담 재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후 남북장관급회담 개최와 인적교류 확대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2005년 지원된 비료는 총 35만톤 1,206억원 상당으로 1차 20만톤을 5월 21일부터 6월 21일까지, 2차 15만톤을 6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경의선 육로와 해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대북지원 이래 처음으로 북한 선박과 인수요원이 수송에 참여, 선적기간 동안 남한 지역인 울산, 여수, 군산 각 항구에 체류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미발효상태인 「남북해운합의서」(2004년 5월 28일 남북한 합의, 2005년 8월 1일 발효)상의 항로대를 따라 운행함으로써 합의서를 시험 적용했

대북지원 현황

(단위 : 만달러)

구분	'95.6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계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7,045	8,375	8,702	11,512	12,388	85,982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513	6,494	5,117	7,061	14,108	8,866	51,343
계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3,539	13,492	15,763	25,620	21,254	137,325

다는 의의도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비료지원에 대해 북한은 남북 당국간 고위인사 접촉 및 적십자사 명의의 전통문 등을 통해 계기시마다 감사를 표명해 왔다.

비료 이외에도 정부는 북한의 평양 인근 '닭공장'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차량 및 약품 12억원 상당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였다. 또한 평안남도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서는 7월에 긴급구호 차원에서 수해구호물자 3천 세대분 1억9천만원 상당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5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995년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의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해 왔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WFP를 통해 매년 중국산 옥수수 10만톤씩 총 40만톤 888억원 상당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도 지원분은 2005년 3월 전달을 완료하였다. 2005년 8월에 북한이 국제기구의 긴급구호성 지원 종료를 요구함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지원이 보류된 상태이다. 향후 북한과 WFP 등 국제기구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방식과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말라리아 발병 확산을 심각히 우려하여 방제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2001년부터 매년 방제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2005년에도 말라리아 방제약품 및 장비, 모기장 등 약 8억5천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총 37억5천만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북한 관계자는 WHO 국제위크샵 등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의를 표명해 오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는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UNICEF를 통해 어린이 영양식 및 의약품 등에 6억원을, 2004년과 2005년에는 어린이 영양식과 의약품

### 2000년 이후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

기간	지원 규모	지원 내역
2000년	7,863만달러 (944억원)	- 비료 30만톤 직접지원
2001년	7,045만달러 (913억원)	- 내의 150만벌 직접지원(353만달러/46억원) - 비료 20만톤 직접지원(4,921만달러/638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25만달러/223억원) - WHO를 통해 말라리아방제 지원(46억원/6억원)
2002년	8,375만달러 (1,075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39만달러/234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59만달러/8억원) - 비료 30만톤 지원(6,577만달러/832억원)
2003년	8,702만달러 (1,041억원)	- 비료 30만톤 지원(6,698만달러/836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619만달러/191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66만달러/8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50만달러/6억원)
2004년	11,512만달러 (1,323억원)	- 비료 30만톤 지원(8,851만달러/1,028억원 상당) -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2,400만달러/264억원 상당)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67만달러/7.5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100만달러/12억원) - 용천재해 긴급구호 및 WHO 지원(94만달러/11.3억원)
2005년	12,388만달러 (1,239억원)	- 비료 35만톤 지원(12,064만달러/1,206억원 상당) -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 지원(81만달러/8.5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100만달러/10억원) - 수해 복구지원(19만달러/1.9억원)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지원(123만달러/12억원)

지원을 확대하여 각각 12억원, 10억원을 지원하였다.

**2. 민간차원의 지원** 1995년부터 시작된 초기의 민간 대북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997년 5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496만달러(39억7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1997년 3월 31일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및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제1차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지원도 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한 남북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7년 6월 남북적십자간 합의에 의해 구호물품이 지원되기 시작한 이래로 1998년 12월까지 총 433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이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해 지원되었다.

1999년 2월 10일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도 독자창구로서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10월 21일 대북지원사업자 요건 등이 명시된 「인도적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규정」이 제정되었다. 민간단체 독자창구는 1999년 10개 단체로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말 현재 54개 단체가 활발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대북지원사업자수가 2004년말 33개에서 2005년말 54개로 크게 증가되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규모는 6,008억원 상당으로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40억원(0.7%),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635억원(27.2%), 독자창구를 통해 4,333억원(72.1%) 규모를 각각 지원하였다. 2005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6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853억원 등 총 899억원 상당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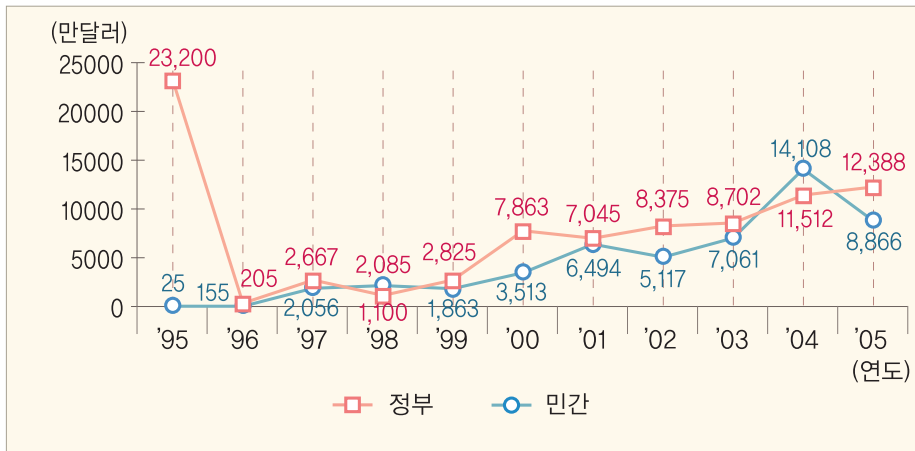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



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분야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7개 단체(7개 사업) 33억8천만원, 2001년 12개 단체(15개 사업) 38억4천만원, 2002년 14개 단체(18개 사업) 54억5천만원, 2003년 16개 단체(16개 사업) 75억3천만원, 2004년 23개 단체(25개 사업) 88억7천만원, 2005년 27개 단체(30개 사업)에 88억2천만원 등 5년간에 걸쳐 총 378억9천만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은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당국간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에서도 17개 민간단체가 농업용 비닐지원에 참여하여 정부 보조분 2,200만㎡ 상당을 포함, 총 6,000만㎡ 상당의 비닐을 북한의 수요에 맞추어 시의성 있게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대북지

정부·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



### 2000년 이후 민간차원 대복지원 내역

기간	규모	내역
2000년	3,513만달러 (42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적창구 : 16개 단체 113억2,992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비료, 한우 500두, 의약품 등</li> </ul> </li> <li>독자창구 : 13개 단체 307억3,87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li> </ul> </li> </ul>
2001년	6,494만달러 (84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적창구 : 28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량 14,175톤, 비닐 552톤, 내의 159만벌, 의약품 등</li> </ul> </li> <li>독자창구 : 19개 단체 558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li> </ul> </li> </ul>
2002년	5,117만달러 (64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적창구 : 9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내의 118만벌, 라면 39만개, 분유, 의약품, 의류 등</li> </ul> </li> <li>독자창구 : 25개 단체 55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li> </ul> </li> </ul>
2003년	7,061만달러 (84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적창구 : 7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필품, 밀가루, 농자재 등</li> </ul> </li> <li>독자창구 : 29개 단체 777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 구충제·영양제 등 의약품, 제약설비 및 원료의약품, 농기계 및 농자재, 유가공설비 및 축산용품, 건축용 자재·장비, 밀가루, 분유, 설탕, 의류, 학용품, 생활용품 등</li> </ul> </li> </ul>
2004년	14,108만달러 (1,66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적창구 : 44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가루, 분유, 발효기, 운동화, 연탄, 농업용 비닐, 의류, 의약품, 철근, 휠체어</li> </ul> </li> <li>독자창구 : 33개 단체 1,22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보일러, 학용품, 피복, 감귤, 놀이기구, 왕진가방, 타일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등</li> </ul> </li> </ul>
2005년	8,866만달러 (89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적창구 : 4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가루, 분유, 두유기계, 축구용품, 연탄, 농업용 비닐, 의류, 의약품, 학생용가방, 자전거, 화물트럭</li> </ul> </li> <li>독자창구 : 43개 단체 85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사료 및 가축, 보일러, 학용품, 피복, 감귤, 놀이기구, 생활용품, 시멘트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등</li> </ul> </li> </ul>
계	51,343만달러 (6,008억원)	

원으로 남북관계의 신뢰 및 모멘텀 유지에 크게 기여하였다.

모니터링 및 사업협의 등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처음으로 직항로를 통한 민간단체 기증자의 현장확인 형식의 방북 4차례 921명을 포함하여 1,715명, 2003년에는 1,320명, 2004년에는 총 1,197명이 방북하였다. 2005년에는 10차례 1,590명의 직항로 방북을 포함하여 총 3,995명이 방북, 남북한간의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하였다. 북한의 고려항공을 이용한 우리 민간단체의 대규모 방북도 2차례(254명)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3.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인도적 대북지원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  
의 협력계기가 된 사례는 2004년도의 북  
한 용천재해 복구 지원이다. 용천재해 지원과정에서 대북지원 민간단  
체인, 민·관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9월 1일 대북  
협력민간단체협의회 상임운영단체와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는 대북지원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이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상호 보유한 지원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책협의 기구이다. 2005년  
에는 본회의 3회, 운영위 2회 개최 등 정례적이고 실질적 토의 진행으  
로 민관 상호 보완구도 정착에 기여하였다. 협의회를 통해 보건의료  
등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분야 및 장기적 복구가 필요한 사업  
을 중심으로 5개 시범 민관 합동사업을 발굴·시행하였으며, 『대북지  
원 긴급구호 매뉴얼』 및 『대북지원 10년 백서』를 발간하였다.

### 5개 시범 합동사업

사업명	사업 내용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건설(황북 봉산군)</li> </ul>
축산사료 자급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의 영양불균형 해소를 위해 단백질 공급원인 가축사육에 필요한 사료공장 시설개선, 사료생산 자재 및 기술지원</li> </ul>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역병원, 지방병원, 종합병원 등 보건의료체계 단계별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고 의료기술과 의료장비 수리·관리 기술 지원</li> </ul>
모자보건·복지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과정 및 5세 이하 어린이 성장과정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한 영양사업(콩우유, 영양빵 지원), 의료·위생·교육사업 추진</li> </ul>
농업, 보건 용수 개발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지하수 개발을 통해 깨끗한 식수원을 개발하고 의료시설 및 협동농장 등에 필요한 보건·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자재 지원</li> </ul>

###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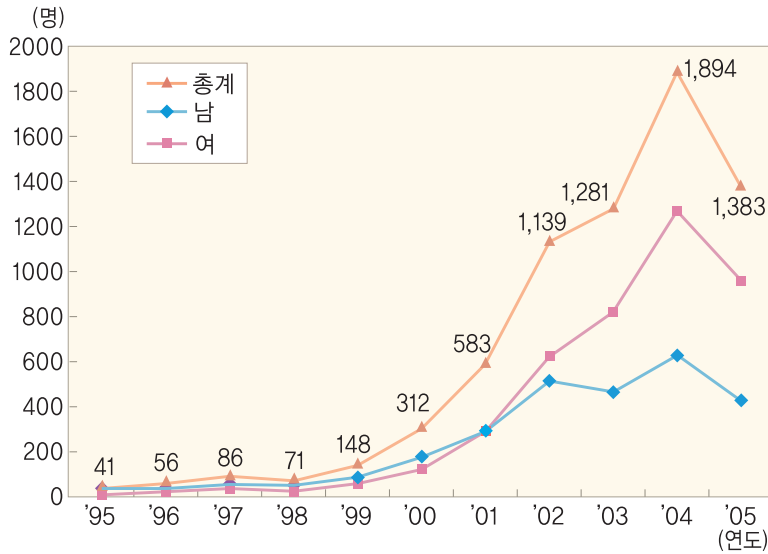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내 법령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하고 국내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체류국가에서의 체류여건이 개선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복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1. 국내입국 현황** 국내입국 새터민은 1990년대 초반에는 매년 10명 내외에 불과했으나,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02년부터는 매년 1천명을 초과하였고, 2004년에는 1,894명, 2005년에는 1,384명을 기록하였다. 입국인원 중 여성의 비율은 1995년 이전에는 7.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증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69.4%로 남성 입국인원 비율을 크게 상회하였다.

입국 추이

(단위 : 명)

구분	'89까지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계
남	564	80	35	43	56	53	90	180	294	514	468	625	422	3,424
여	43	6	6	13	30	18	58	132	289	625	813	1269	961	4,263
총계	607	86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7,687



**2. 정착지원 내용**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은 사회적응교육시설인 북한 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여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취적(就籍), 정착지원금, 주거알선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지원을 받게 된다.

**가. 사회적응교육** | 하나원에 입소한 새터민은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하여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교육받게 된다. 주된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 남북간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 원활한 취업을 위한 진로지도 및 직업기초능력 훈련 등이다. 또한 남한가정 체험, 역사 유적 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국민들과의 접촉 기회도 제공되고 있다.

2004년 10월부터는 교육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여, 취업 연계 교육, 사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 등을 강화하였다. 2005년 8월부터는 자동차운전교

육 등 직업기초능력 훈련과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새터민의 사회적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탈북과정 및 제3국에서의 은신 도피 생활에서 악화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나원 내에 '하나의원' 을 개설하여 현재 5명의 공중보건외과가 새터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한편, 하나원은 2001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 새터민을 위한 '하나들 학교' 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들학교' 는 청소년 새터민들이 남한의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특화된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 인근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통해 정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은 사회적응교육 과정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등 6개 민간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는 등 사회적응교육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하나원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연간 1,200명을 교육할 수 있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개소된 이후 2005년 12월까지 총 6,182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였다.

나. 정착기반 지원 |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마친 새터민들은 사회 각지로 배출된다. 정부는 사회로 진출하는 새터민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다. 2005년 현재 기본금은 1인세대 기준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노령자, 장애자 등 취약계층에게 최고 1,540만원까지 지급한다. 장려금은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립·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새터민에게 최고 1,5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지방 거주를 권장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방 거주자에게는 지방 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받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편입되도록 적극 주선하고 있다.

**다. 취업 지원** | 정부는 새터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부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새터민 취업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을 지원·알선해 주고 있다.

새터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새터민에게는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2005년도에 760여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또한,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반을 2년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2000년부터 도입되어 새터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05년도에는 새터민 439명을 고용하고 있는 316개 사업장에 13억6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4년도(218개 사업장 269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새터민의 자립·자활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라. 교육지원 및 학력·자격 인정** | 정부는 새터민의 능력개발을 위



한 교육지원도 꾸준히 강화하였다.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대학교에 편·입학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주고, 사립대학인 경우 정부와 학교가 각각 학비의 반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2005년도에는 총 475명의 대학생이 6억6천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북한에서 취득하였던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마. 거주지보호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 |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 거주지에서는 정부 이외에도 사회·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각종 생활상담 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다양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새터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정부와 민간단체의 접촉창구 역할 및 민간단체의 통합·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새터민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 정착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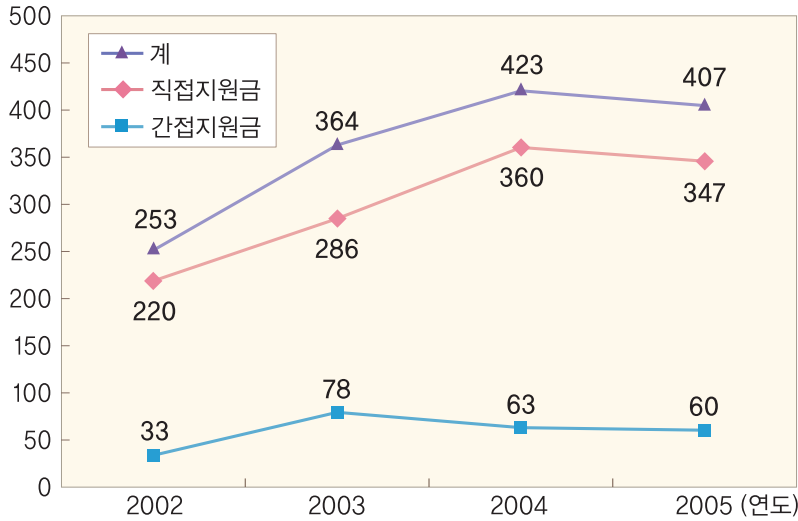
특히, 2005년부터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정착도우미제가 실시되고 있다. 정착도우미는 새터민의 거주지 편입 초기 지역 정보제공, 생활안내 및 상담, 복지관과의 연계 등 초기 정착생활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 연도별 정착지원예산 집행 규모

(단위 : 억원)

연도	직접지원금 (정착금 등)	간접지원금 (교육훈련 등)	계
2002	220	33	253
2003	286	78	364
2004	360	63	423
2005	347	60	407
계	1,213	234	1,447

(억원)



## 제4절 북한인권 개선 노력

북한의 인권상황은 북한 정보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우나,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기구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인권을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생각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문제 지원,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 전원 수용 및 정착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정치적 권리 증진을 위해서도 북한에 대해 공개적 압력을 가하기 보다는 북한 경제개방과 시장경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북한사회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180만 병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인권 개선에 관한 ‘공개적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제61차 UN인권위원회와 제60차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우리정부는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는 투표입장설명(EOV: Explanation of Vote)을 한 후 기권하였다. 또한 이 투표입장설명을 통해 북한당국에 대해서도 국제인권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함께 협약이행감시기구 및 UN인권위원

회 특별절차에의 협력 등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해서 '말보다는 실천'을 우선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 있다. 11월 3일 NSC 상임위를 통해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립하였다.

#### 북한인권 관련 정부입장

-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포괄적 개선에 기여한다는 입장임.
-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각국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접근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선택할 수 있다고 봄.
-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 정부는 한반도 현실 및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 우선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
  - 정부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
  - 북한당국이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기를 촉구함.

이 밖에 정부는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정리 등 정보자료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매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가 발간하고 있는 『북한인권백서』 및 『북한인권보고서 편람』을 지원하고, 국내 북한인권 관련 NGO의 워크숍 개최 및 자료 발간 등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 V

##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제1절 추진경과

제2절 경수로사업 중단

제3절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

대북 경수로사업은 1994년 미·북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발전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 대북 경수로사업 추진

대북 경수로사업은 1994년 미·북간에 체결된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경수로발전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1995년 KEDO와 북한 간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하는 등 준비단계를 거쳐, 1999년 12월에 KEDO와 한국전력공사 간에 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2001년 9월에는 본관 기초굴착공사를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 10월 북한 핵문제가 재발된 이후 미국은 북한의 제네바합의 위반을 이유로 경수로사업의 종료를 요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2003년 12월부터 사업이 2년간 중단되었다. 우리 정부는 사업재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국 등의 지속적인 사업종료 요구와 2005년 9월 19일의 6자회담 공동성명을 감안,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KEDO 경수로사업의 종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5년 11월에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에서는 경수로사업을 종료한다는 데

집행이사국간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종료에 따른 법적·재정적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종료를 공식 결정하기로 하였다.

## 제1절 추진경과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북간 협상의 결과, 북한 핵시설의 동결 및 해체와 200만 킬로와트 경수로 발전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북간의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가 1994년 10월 21일 서명·발효되었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5년 3월 한국, 미국,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고, 1995년 12월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KEDO와 북한간에는 협상을 통해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 의정서」, 「통신 의정서」, 「부지 의정서」, 「서비스 의정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등 경수로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KEDO는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착공식을 거행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경수로사업비 조달을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미화 46억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 46억달러 기준 32.2억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일본은 10억달러(1,165억엔) 상당을 엔화로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중유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데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집행이사국간 의견접근을 보았으며, 종료에 따른 법적·재정적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거친 후에 사업종료를 공식 결정하기로 하였다.

## 제1절 추진경과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야기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미·북간 협상의 결과, 북한 핵시설의 동결 및 해체와 200만 킬로와트 경수로 발전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북간의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가 1994년 10월 21일 서명·발효되었다. 「제네바합의」에 따라 1995년 3월 한국, 미국, 일본에 의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설립되고, 1995년 12월 KEDO와 북한간 「경수로공급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KEDO와 북한간에는 협상을 통해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 의정서», 「통신 의정서», 「부지 의정서», 「서비스 의정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등 경수로공사 착수에 필수적인 후속의정서와 각종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KEDO는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지구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착공식을 거행하고 부지준비공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경수로사업비 조달을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미화 46억달러(환율 1달러=1,100원, 물가상승률 연 2.1%)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하였다. 우리 정부는 실제공사비의 70%(예상사업비 46억달러 기준 32.2억달러, 3조 5,420억원)를 원화로, 일본은 10억달러(1,165억엔) 상당을 엔화로 기여하기로 하였으며, 미국은 중유비용과 KEDO의 여타 소요재원을 조달하는 데 노력하고 KEDO 집행이사국들의 기여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 조달에 있어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경수로사업의 재원이 마련됨에 따라 KEDO와 한국전력공사는 1999년 12월 15일 일괄도급방식으로 100만 킬로와트 경수로 2기를 시공토록 하는 주계약(Turn Key Contract)을 체결하였다. 2000년 2월 3일 주계약이 발효되고 북한이 2001년 9월 1일 건설허가를 발급함에 따라 본 공사의 최초 주요공정인 본관 기초 굴착공사를 2001년 9월 3일 착공하였다. 원자로 1호기 공사는 2002년 8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원자로건물 외벽공사 및 보조건물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호기도 기초굴착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공사현장의 부지 정지, 진입도로, 취·배수방파제, 물 양장, 용수 및 전력공급설비 등 기반시설공사와 함께 생활부지 내 근로자 숙소, 식당,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도 마련해 나갔다.

공사착공 이후 KEDO와 북한은 「훈련 의정서」와 「품질보장 및 보증 의정서」를 체결·발효시켜 2002년 10월 새로운 북핵문제가 대두되기까지 「경수로공급협정」이행을 위한 13개 의정서 중 8개 의정서를 체결·발효시켰다. 또한 KEDO와 북한은 1998년 이후 연간 수차례의 각종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객화선(주1회)·바지선 운항, 통신망 운용(16회선), 직항공로 개설·운용 등을 합의·시행하였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북한은 2000년 4월 북한근로자 200명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100명의 근로자를 철수시켰으며, KEDO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01년 3월부터 우즈베크 인력을 투입하였다. 현장공사 진행과 함께 2000년 11월 체결된 「훈련의정서」에 따라 북한측 발전소 운영요원 12명과 규제요원 25명의 훈련을 남한 시설에서 실시하고, 고위정책자 과정 19명의 우리측 시설 시찰도 시행하였다.

### 경수로사업 추진 일지

- 1994. 10. 21 「북·미 기본합의」(제네바 합의) 서명
- 1995. 1. 23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설치
- 1995. 3. 9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
- 1995. 12. 15 KEDO-북한간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
- 1997. 8. 19 부지 정지공사 착공
- 1999. 12. 15 KEDO-한국전력간 「주계약」(TKC) 서명
- 2001. 9. 3 본관기초굴착공사 착공
- 2002. 8. 3 원전 1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 2002. 10. 16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 대두
- 2003. 12. 1 KEDO 집행이사회 합의(2003. 11. 21)에 따라 1년간 사업 중단(suspension) 발효
- 2004. 11. 26 KEDO 집행이사회 사업중단 조치 1년 연장 결정·발표
- 2005. 9. 19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 2005. 11. 22 KEDO 집행이사회, 종료에 따른 법적 재정적 문제 해결후 사업의 공식 종료를 결정하기로 합의
- 2005. 11. 30 경수로사업 중단기간 만료
- 2006. 1. 8 금호 경수로부지 잔류인원 57명 전원 철수

## 제2절 경수로사업 중단

### 1. 사업중단 조치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문제로 북핵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추진되던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KEDO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02년 11월 14일 KEDO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에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완전 폐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며, 북한 핵문제 전개상황을 보아가면서 경수로사업 등 여타 KEDO 활동도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002년 10월 북핵문제 발생 이후 후속의정서 및 북한노동 인력 임금협상 등 북한과 진행되던 각종 협상이 중단되었으며, 발전소 완공 후 운영을 담당할 북한요원 훈련도 중단되었다. KEDO는 또한 2003년 2월 3일 비공식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여 북한 핵문제로 인해 경수로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기대하며 당분간 공사속도를 늦추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방침 하에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호기 원자로건물 최초 콘크리트 타설 및 발전소지역 내 부대건물 건설 연기, 원자로 격납용기 첩판, 철근 등 보조 기자재의 발주계약 연기 등 불요불급한 공사의 축소 및 순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2003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미국·중국·북한 간 3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 없었고, 2003년 8월 개최된 6자회담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집행이사국간에는 경수로사업 장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

성되었다. 이에 따라 KEDO 집행이사국들은 수차례 공식·비공식 집행이사회와 양자협의 등을 통해 ‘속도조절 하에서의 사업지속’, ‘사업의 일시중단(suspension)’, 또는 ‘사업의 완전종료(termination)’ 등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 결과, 2003년 11월 21일 KEDO집행이사회는 북한 핵 문제로 인해 경수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다시 2004년 11월 26일 KEDO 집행이사회는 경수로사업 중단조치를 2004년 12월 1일부터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 2. 사업 중단기간 중 보존·관리활동 시행

2003년 12월 1일부터 경수로사업의 일시중단이 발효

됨에 따라 경수로사업은 설계, 건설, 제작 등 각 분야의 모든 공정이 원칙적으로 중단되었고, 사업재개에 대비한 보존·관리 조치에 들어갔다. 공사현장에서는 1, 2호기 원자로건물 철근 및 철판 부식방지 조치, 공용설비의 굴착부위 침수 및 붕괴방지, 도방수로 범면 보호 등 기 완료된 시설물의 보호조치를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보존 및 관리 활동을 진행하였다. 제작중인 기자재는 품질보장원칙과 비용최소화 원칙에 따라 품목별로 보호·관리 조치를 취하였으며, 일부품목은 품질확보 및 작업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시점까지 공정을 완료한 후 보관조치를 취하였다.

부지현장과 제작중인 기자재의 안전한 관리·유지를 위해 부지현장 및 기자재 제작업체에 대한 사업진도 평가와 품질보증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24회)하였다. 1,500여명에 이르던 부지현장 상주인원도 2003년 12월에 우즈벡 인력이, 2004년 2월에는 북한측 인력 100명이 전원 철수하는 등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2005년 11월말까지 금호부지에는 KEDO 금호사무소 직원 6명을 포함하여 120여명의 인원이 체류



하면서 관리하였다.

한편 북한은 KEDO측의 사업 중단에 대한 불만으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공사관련 장비·차량 200여대에 대한 반출을 금지(2003.11월)하고, 2003년 12월에는 출입국절차 강화 등 중단기간 중 ‘잠정조치’ 시행 방침을 통보해 왔다. 이에 KEDO는 사업의 일시중단에 따른 보존·관리활동 및 인력과 장비 철수 등 중단기간중 KEDO와 북한간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KEDO 사무총장단의 방북, 협의 및 북한과 고위전문가회의와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북한이 제기한 ‘잠정조치’ 문제를 2004년 3월 「양해각서」체결로 마무리하였다.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북한측의 의정서 준수 및 체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KEDO 인원의 부지출입절차 일부 수정, 물양장(부지해안에 KEDO측이 설치한 부두시설) 사용절차 합의 등이었다. 이로써 중단기간중 공사현장 및 시설물에 대한 보존·관리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북한측의 장비반출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KEDO측은 수차례 협의에서 북한 조치의 부당성을 항의하고 조치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우리 정부도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주요 계기시 장비반출금지 조치의 부당성 및 향후 남북경협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면서 협조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손실보상 없이는 철회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KEDO와 협의하여 현장공사의 속도조절(slow down)로 인한 유휴 인력·장비 발생에 따른 참여업체의 피해에 대해 한전을 통해 2003년 12월과 2004년 7월 2차례에 걸쳐 총 64억 5천만원의 보상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한측의 반출금지에 따른 장비업체의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2004년 합동시공단에서 자체자금으로 건설중장비 41대에 대해 우선 보상(32억원)을 실시한 데 이어, 2005년 들어 KEDO 차원의 보상방안(선 한전 보상, 후 KEDO 보전)이

마련되어 한전이 자체자금으로 5차례에 걸쳐 총 238억원을 보상하였다.

1997년 8월 사업 착공이후 사업이 중단되기 전인 2003년 11월말까지 경수로사업은 시공 21.6%, 종합 설계 62.3%, 각종 기자재 제작·구매 43.2% 등 약 34.5%의 진척도를 보였다. 사업비는 집행이사국간 「재원분담 결의」에 따라 조달하여 2005년 12월말까지 미화 15억6천2백만 달러(한국 11억3천7백만 달러, 일본 4억7백만 달러, 유럽연합 1천8백만 달러)를 투입하였다.

### 제3절 경수로사업의 장래문제

2003년 11월, KEDO 집행이사국들은 경수로사업의 일시중단을 결정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진전 상황 등을 보아가며 경수로사업의 장래 문제를 협의·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일본의 경수로사업 종료 요구와 2005년의 9·19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 모색을 위해 KEDO 경수로사업의 종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여 KEDO 집행이사국들은 2005년 11월 21일~22일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경수로사업 종료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경수로사업을 종료한다는 데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다만, 공식적인 사업종료를 위해서는 종료와 관련된 법적 문제, 청산비용 분담 등 재정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본국 정부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정부는 경수로사업이 종료하더라도 투입된 비용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협상방안을 마련하여 KEDO 집행이사국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집행이사국들의 합의가 있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집행이사회를 개최, 사업종료를 공식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2005년 11월 KEDO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사업의 사실상 종료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과 8일 KEDO 대표단이 방북하여 부지인원의 철수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동 협의에서 KEDO 측은 북한측에 공식 결정은 없었으나 사실상 종료방향으로 협의중임을 통보하였으며, 북한측은 사업종료를 기정사실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 정부는 부지체류 인원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는 방침하에 KEDO 집행이사국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2006년 1월 8일 한겨레호 선박편으로 부지인원 57명에 대한 철수를 완료하였다.



# 통일부 정책고객과의 대화

MINISTRY OF UNIFICATION





# VI

## 통일정책의 지지기반 확충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제3절 통일교육의 내실화

제4절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 강화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개방 확대

제6절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업무 혁신

냉전의 산물인 남북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통합과 통일 미래를 향한 실천적 로드맵으로서 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곧 대북정책이다.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M i n i s t r y   o f   U n i f i c a t i o n



---

# VI

---

## 통일정책의 지지기반 확충

---

냉전의 산물인 남북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통합과 통일 미래를 향한 실천적 로드맵으로서 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곧 대북정책이다.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폭넓은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평화변영정책의 추진원칙으로 삼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대북정책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정책수립,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방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또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전개해 왔다. 이 장에서는 정부가 200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다양한 국민참여 확대방안을 비롯하여 흥

보·통일교육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 등 국내외 정책 지지기반 확충 노력을 다루고 있다.

##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1. 정책과정상 폭 넓은 의견수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국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열린 통일포럼」과 2004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고객과의 대화」는 장관과 실국장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대화채널이다.

2005년에는 장관 및 관계 실국장 등이 남북 경제·사회문화 교류 분야 관계자, 개성공단개발사업 관계자, 통일교육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총 200여회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정책 실행 수요 고객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산출하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고객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방북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비율 조정’ 등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통일고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고문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정책자문과 직능별 여론수렴활동 등을 통해 통일정책 수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6·15 5주년 민족대축전에 대한 평가, 북한 핵문제 대응전략, 남북간 교류협력, 이산가족

보·통일교육 및 국제사회와의 교류 등 국내외 정책 지지기반 확충 노력을 다루고 있다.

##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1. 정책과정상 폭 넓은 의견수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국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넓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2003년 3월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추진한 「열린 통일포럼」과 2004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고객과의 대화」는 장관과 실국장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대화채널이다.

2005년에는 장관 및 관계 실국장 등이 남북 경제·사회문화 교류 분야 관계자, 개성공단개발사업 관계자, 통일교육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총 200여회의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정책 실행 수요 고객들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산출하고,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고객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방북절차 간소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비율 조정’ 등 실질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통일고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고문회의는 대통령에 대한 정책자문과 직능별 여론수렴활동 등을 통해 통일정책 수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6·15 5주년 민족대축전에 대한 평가, 북한 핵문제 대응전략, 남북간 교류협력, 이산가족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건의하였다.

아울러 주요 대북·통일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 통일교육, 남북회담의 6개 분과위 총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총 22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 및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정책과정에 반영하고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5년에는 3회의 정기 여론조사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한 수시 사이버 여론조사도 실시하였다. 2005년 2월 금강산 체험연수에 참가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많은 참가자들이 연수 참가 전에 비해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북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밖에도 대통령 특사 방북, 남북장관급회담,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성과 등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파악,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2. 국민참여의 활성화** 정부는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통일고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마일리지 제도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홈페이지상의 ‘국민참여 마당’에 개설된 ‘전자공청회’, ‘통일정책 모니터링’, ‘정책제안’ 등 온라인 활동 및 ‘통일교육’,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이다.

2005년 8월 마일리지 시스템 개시 후 총 34,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홈페이지의 ‘자유토론방’, ‘정책제안’ 코너 등에 네티즌의 참여가 증대하고, 홈페이지 방문

횟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5년에는 우수 회원에게 대북 지원 쌀 인도 및 분배현장 민간인 대표 등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해 직접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반국민에게 정책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통일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100여명의 통일서포터즈들이 대북 쌀·비료지원, 이산가족 상봉행사, 통일문화페스티벌 등에 참가하여 행사 진행을 돕는 등 통일 업무 현장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한편 민간 전문가 및 NGO의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공동체 운영을 통해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원활한 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대북지원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정부간 협의체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는 대북지원 방향과 사업계획, 민관 협조 및 역할분담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대표적 정책공동체이다. 2005년에는 5개 민관 대북합동 사업 및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대북지원 정책에서 민관 협력모델로 정착되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포럼,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개성공단사업협의회,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등 정책공동체에 민간 전문가가 정책자문 및 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5년 한 해 동안 50여회 운영되었다.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는 정책분야에서 민관이 협력하고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통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 3. 고객중심의 정책평가

통일부는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통일정책 평가회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평가회의는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기 평가회의 4회,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 등을 통해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하였다.

정부는 2004년부터 남북경협 종사 기업인, 학자, 이산가족,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 대북정책의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들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주요 대북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이러한 「통일정책 모니터링」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고객의 목소리를 반영,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업무개선 및 사업부서 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당초 100명으로 시작했던 모니터링단의 규모를 분야별 대북정책 및 사업의 직접적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고객집단 709명과 일반국민 333명 등 총 1,042명으로 대폭 확대 구성하였으며, 총 4차례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한반도평화증진을 위한 노력 및 남북한 농업협력 추진, 개성공단 시범단지 본격가동 등 21개 연두업무 보고과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새로운 CI 제작, 남북출입사무소의 편의성, 집합식 통일교육의 효과 등 부서별 단위사업에 관한 평가를 각각 2회 실시하였다.

### 4. 민간 통일단체 활동 지원

1990년대 이후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5년에는 23개의 신규단체가 추가되어 12월 말 현재 통일부 허가 비영리법인은 총 163개이다. 활동 영역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연

구·조사,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 지원, 대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교육 등 전문화·세분화되어 감에 따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취약영역을 보완하고 민간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2005년에도 전년에 이어 많은 민간단체들이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6·15 통일대축전', '8·15 민족대축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남북 공동행사들은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만들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일조하였다.

정부는 또한 상장, 표창, 후원명칭 사용 등 각종 통일관련 대중행사를 지원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의식을 고취하였다. '남북청소년교류 편지쓰기 전국대회', '통일소년음악회', '통일문예제전'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일반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남북공동 사회문화교류 행사로 추진된 '남북평화통일미술축전', '남북공동기획 고구려 문화전' 등은 국민들이 순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남북화해의 장을 만들어 나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단체들의 통일정책 토론회, 지역순회 통일포럼 등을 지원하여 다양한 정책제언을 적극 수렴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기반을 확대하였다.

한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통일교육협의회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북한과 상설적인 대화창구를 갖고 여러 가지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였다.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는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교류 및 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사회적응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통일교육협의회는 회원단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였다.



##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통일홍보의 대상이자 수요자인 국민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고려하여 고객들의 특성과 눈높이에 맞는 홍보내용을 발굴하고, 아울러 홍보방법과 매체의 다각화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2005년에는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온라인게임인 카트라이더를 활용하였으며, 영문 뉴스레터를 꾸준히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의 다양화**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통일부는 국민의 높은 정보화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고객서비스(Publ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홈페이지, 전자공청회 등을 활용하여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가. 통일부 홈페이지 | 통일부의 대표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는 1996년 12월 개통한 이래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통해 정책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털사이트로 자리 잡아 왔다. 또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넓히고 긍정적인 해외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영문 홈페이지 콘텐츠도 강화해 왔다. 통일부가 운영하는 분야별 홈페이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통일부 운영 홈페이지 현황

사이트명	주소	주요내용
통일부	unikorea.go.kr	통일소식, 전자민원창구, 참여마당, 북한이해, 자료실, 통일부안내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소장자료검색, 북한영화소개, 북한실상설명회 안내, 자료실
남북회담사료	dialogue.unikorea.go.kr	남북회담사, 남북합의서, 사료 데이터베이스, 자료실, 정보검색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남북이산가족 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남북교류협력시스템	inter-korea.unikorea.go.kr	북한 및 남한방문, 북한주민접촉, 협력사업, 교역물품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사이버통일교육센터	uniedu.go.kr	온라인 통일강좌, 통일교실, 북한청소년백과, 자료실, 참여마당

**Cyber 통일교육센터**

홈 | 커뮤니티 | 메일링서비스 | **월간(Unizine)**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이트맵

통일교육원 | 온라인통일강좌 | 청소년통일배움터 | 자료실 | 참여마당 | **사이트내 바로가기**

들어보세요 | 자유게시판 | 정보자료교관 | 건의사항 | 커뮤니티 | 메일링서비스 | 단체행사홍보

**청소년 통일배움터**

- 통일교실
  - 초등학교 교실
  - 중학교 교실
  - 고등학교 교실
- 한마음학교
- 통일Q&A
- 북한청소년백과
- 가상북한체험
- 통일만화
- 통일게임
- 도전통일별
- 통일교육자료
- 속제도우미

홈 > 청소년통일배움터 > 통일교실 > 초등학교 교실

**통일교실**

**[통일교실] 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이름은 백두리, 한우리 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재미있는 수업 만들어 가도록 해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오른쪽의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교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

일자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시작
1일차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천년 새역사	1. 남북 분단의 과정 2. 분단 이후의 남북한	
2일차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1)	1. 북한사람들의 의, 식, 주생활	
3일차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2)	1. 북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 2. 북한의 교통수단 3.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4일차	통일을 열어 나가는 길	1. 통일의 의미	
5일차	신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	1. 통일을 준비하는 어린이의 자세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홈페이지 화면

나. 정책고객서비스(PCRM) 실시 | 정책고객서비스(PCRM)는 민간의 고객관리기법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도입, 일반국민·전문가를 대상으로 관심분야에 따라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의견을

### 2005년 주요 정책고객서비스 실시현황

자 료 명	시 기
독도문제 관련 한일관계 기조와 대응방향에 대한 NSC 상임위원회 성명문	3월
개성공단사업추진현황	4월
북한조류독감 피해지원 등 남북협력기금 사용	4월
통일부 금년에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4월
남북차관급회담 설명자료	5월
통일4행시 공모 안내	5월
6·15 통일대축전 참고자료	5월
우리측은 북측에 6·15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합의사항 준수 촉구	6월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의 의미와 성과	6월
정동영 대통령특사 방북 성과 및 의의	6월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과 해설자료	6월
통일문제 관련 여론조사	7월
“통일문화 페스티벌” 초대 자료	7월
중대제안(대북 직접 송전 계획) 관련 참고자료	7월
남북수산업협력실무협의회 제1차회의 합의서 및 결과 해설자료	7월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5차회의 결과 해설자료	8월
9개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8월
8·15 행사시 북측대표단의 현충원 참배관련 보도문 및 참고자료	8월
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9월
제4차 6자회담에 대한 사이버 여론조사	9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10월
통일교육원에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10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공동보도문	10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해설자료	12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12월
송구영신 「도전총일별」 퀴즈 이벤트 안내	12월

수렴·반영하는 쌍방향 직접홍보 서비스를 말한다. 2004년 2월 도입한 PCRMS시스템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 현재 총 39,356명이 통일부 고객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남북회담 및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해설 자료와 각종 정책자료 등을 뉴스레터, 정책속보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널리 활용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정책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였고 해외동포 및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학계, 언론계, 정계 주요 인사들에게도 신속하게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5년 6월부터 주간 단위로 펴내고 있는 영문 뉴스레터와 영문 정책 속보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선도적인 예로서, 국제화되고 있는 통일 문제와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모으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 전자공청회** |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개최되는 전자공청회는 특정 주제에 대해 네티즌들이 활발한 토론과 진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통일문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2000년 9월부터 2005년 말까지 총 16차례 개최하였으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 네티즌을 우수토론자로 선정 시상하고 있다. 2005년에는 「통일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주제로 2회의 공청회가 열렸고, 총 1,296명이 4,592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네티즌의 활발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청소년용 주제를 별도로 선정·추진한 결과 10대 청소년 최고 참여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인터넷 전자공청회는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 및 통일관련 주제에 대한 '네티즌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 2005년 인터넷 전자공청회 개최 현황

구분	개최기간	주제	의견제시건수	내용조회건수
제1차	6.17~6.30	새롭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북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1,143	9,863
제2차	10.18~10.31	통일부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 통일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	3,449	23,933

## 2. 홍보매체의 다각화

가. 홍보자료 발간·보급 | 2005년도에는 6·15 5주년과 부산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평화번영정책」 및 대북정책 추진성과를 국내외에 올바르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제작·보급하였다. 홍보자료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고려하고 세대별·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제작함으로써 남북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에는 총 6종의 홍보물을 제작하였는데 남북관계의 중요한 사진자료들을 모아 정리한 화보집 『제2의 6·15시대를 열며』는 국민들이 대북정책 추진현황을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예인 손예진씨를 기용하여 개성 현지에서 촬영하여 제작 당시부터 화제가 된 개성공단 홍보 영상물은 서울시내 극장 공익광고 방송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의 산실인 개성공단에 대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2005년 주요 홍보자료 발간 현황

자 료 명	발간부수(수량)	형 태
「평화와 번영의 실천」 영상물	1	영상자료
「평화와 번영의 실천」 리플렛	3,000	책자
「제2의 6·15시대를 열며」 화보집	3,000	책자
「APEC 계기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길」(영문)	3,000	리플렛
「통일홍보영상물-개성공단 편」 홍보물	1	영상자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홍보책자	3,000	홍보책자

나. 감성으로 다가 선 청소년 대상 홍보 | 통일부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실생활 속에서 통일문제에 친근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홍보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다. 2004년 마린블루스, 돌리, 마시마로 등 인기캐릭터가 등장한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웹 카툰을 제작하여 청소년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데 이어 2005년에는 유명 온라인게임인 카트라이더의 캐릭터 및 이미지를 활용하여 ‘돌이 아닌 하나로’ 등 남북간 교류협력을 주제로 한 통일홍보 애니메이션 2편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와 함께 카트라이더 게임을 이용하여 2005년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I LOVE UNIKOREA’를 캐치프레이즈로 온·오프라인 통일홍보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이벤트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에 노출되어 있는 ‘I LOVE UNIKOREA’, ‘통일사랑 나라사랑’ 등의 메시지를 전달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2005년 12월 4일에는 오프라인 이벤트로 ‘통일부와 함께하는 카트라이더 최강전’을 개최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게임을 즐기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강기도 받았다. 이는 통일문제에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에듀테인먼트 기법을 도입한 것으로 어렵게 여겨온 통일문제에 대해 감성적 접근을 시도한 새로운 정책홍보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 3. 언론매체 활용 홍보

대북정책 추진현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대북정책 추진 관련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기자단에게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보도자료는 통일부 등록 기자단에게 배포함은 물론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게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한 해 동안 157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또한 장·차관이 42회, 실·국장 및 홍보관리관이 216회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이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 및 방송출연 등을 통해 대북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주요 언론사는·해설위원, 비정부단체(NGO), 통일부 등록 기자들과 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내용과 관련동향을 상세히 설명

하였다.

통일부는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현황을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북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인 「국정브리핑」내에 「통일부 뉴스」(unikorea.news.go.kr)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9월에 개설된 이래 ‘정책속보’, ‘보도자료’, ‘포토뉴스’, ‘통일칼럼’, ‘기획연재’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북정책 추진성과를 알려왔다. 2005년에도 통일부뉴스를 통해 남북회담 개최 현황, 개성공단 개발현황,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현황, 대북 비료·식량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 등 주요 정책 추진현황과 성과에 대해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 제3절 통일교육의 내실화

정부는 통일교육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 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2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정부의 통일교육 활성화 임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통일미래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을 확고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가.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 정부는 통일교육을 보다 체계화·활성화 하기 위하여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법률안은 2004년 5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같은 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5년 1월 27일 공포(법률 제 7355호)되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5년 7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급 교육기관은 이를 반영토록 하였다. 둘째,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시 국회의장 추천 수를 6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통일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통일교육을 보다 체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지방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통일교육 시설의 부족 문제 등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나. 통일교육 기본방향 정립

### (1)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 및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2월 「2006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6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은 남북관계의 확대 발전에 따른 통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통일교육의 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고, 평화 공존 시대를 향한 통일교육 확대,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공간적 확산, 통일교육 기관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 (2) 「통일교육지침서」 개편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2000년부터 전문가와 학교·사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설정, 교육 지침서로 정립해 오고 있다. 「2006년도 통일교육지침서」도 2005년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최근 북한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북한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반용 통일교육지침서」는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환경의 변화를 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는 청소년들이 통일과 북한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개편하였다.

### (3)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운영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구성되었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국회의장 추천인사, 민간전문가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05년 8월 제4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3기에 비해 통일교육관련 민간단체 대표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2006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 「2006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2006년도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4) 통일교육발전워크숍 개최

정부는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기관의 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 또는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각 지역교육청과 함께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 및 도덕·사회과 교사를 초청하여 주제발표 및 집중토론을 하는 방식의 워크숍을 총 7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 2. 통일교육의 다양화

가. 초청교육 | 정부는 통일교육의 내실화, 정보화 시대에 맞춘 사이버 통일교육 확대, 교육과정 운영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2005년에는 총 26,420명을 초청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분야별로는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1,187명을 비롯하여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1,679명, 원격(온라인)통일교육 956

명,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 20,401명, 공직자 1,087명, 사회 각계 인사 1,110명 등이며, 이는 계획(18,610명)보다 41.9% 초과하여 실시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초청교육뿐 아니라 개성공단 남측근로자에 대한 현지 출장교육도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교육내용은 기본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분하여 ‘국제질서 변화와 통일 환경’, ‘남북한 통일방안과 평화번영정책’, ‘최근 북한 실상과 변화 전망’ 등을 기본과목으로 편성하고,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실태’, ‘남북교류협력과 경제공동체 건설 방안’, ‘민간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등 대상별로 특화된 전문과목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나. 순회교육** | 순회교육은 국내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 순회교육은 각 지역 여론주도층, 사회통일교육 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6·15 공동선언 5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 발전 현황을 설명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2005년도 하반기 통일교육원장을 중심으로 한 순회교육을 15회 실시(9개 시·도, 약 2,570명 참여)했다.

해외 순회교육은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의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통일문제의 국제적 지지기반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남미지역(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 5월)과 미주지역(미국, 7월)에서 재외동포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다. 사이버 통일교육** | 정부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

go.kr)를 구축하였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3,200여명으로 2005년 말에는 방문자수 450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국민 통일교육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5년도는 원격교육용 서버의 성능향상, 원격교육관리시스템(LMS) 개선, 온라인 강좌콘텐츠 신규개발 등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후속조치로서 2006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원격통일교육 직무연수'(60시간, 4학점) 장기과정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06년 5월부터 장기과정 원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첫해인 2004년은 수도권 지역 초·중등 교사를 중심으로 원격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2005년에는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등 권역별로 초·중등 교사 1,181명에게 원격교육을 확대 실시하였다. 2006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 총 13회에 걸쳐 원격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통일무관심을 해소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방식인 통일게임, 통일만화, 북한 청소년 백과, 한마음학교 등의 청소년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 2004년 9월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권장 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 등 네티즌들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위해 금강산체협소감문과 기념사진 공모, 통일 4행시, 통일퀴즈, 도전 통일벨 등 다양한 사이버 통일교육 이벤트를 개최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단문 메시지 등을 통일교육 고객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메일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통일칼럼, 통일교육 사례 등 통일교육에 유익한 콘텐츠로 꾸며진 웹매거진(Unizine) 시스템을 개발하여 매월 통일교육위원과 교사 등 15,000명을 대상으로 발송, 통일교육 고객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자료 등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유지하고 있다.

라. 통일문화페스티벌 개최 | 정부는 2005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광복60주년 기념 통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신바람나는 통일’, ‘마음으로 느끼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통일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나 휴가철을 맞은 직장인들이 가족 단위로 참여하였으며 총 관람객이 8,400여명에 이르렀다.

특히 학생들은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문제에 대해 접함으로써 통일에 대해 흥미롭게 느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북구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주로 주말 공연행사 등에 참여하여 가족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처럼 통일문화페스티벌은 청소년들에게는 통일교육의 긍정적 이미지를, 지역주민에게는 친숙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통일문화의 형성과 통일교육원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통일문화페스티벌  
개막공연

### 3. 통일교육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가. 학교통일교육 지원 | 정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이 될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정보·자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2001년에 구성된 「통일교육장학협의회」를 2004년도에는 전국의 시·군·구 교육청 소속 장학사들로 확대, 총 400명으로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현장의 다양한 교육방법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연2회 「통일교육소식지」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에 제공하였다.

아울러 학교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시범학교(초등학교 4, 중학교 12, 고등학교 7, 총 23개교)에 대해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고 통일교육원 초청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해 통일부가 주최하고, 시·도교육청 및 각 지역 통일관이 주관하는 「전국 학생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초·중·고 각각 운문 및 산문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총 288명의 부문별 입선자에게는 통일부장관상, 시·도교육감상, 통일교육원장상을 시상하였다.

또한 정부는 대학사회의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연구 진흥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994년에 설립된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88개교)를 중심으로 각 대학 산하 통일문제연구소간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문적 교류를 지원해 왔다. 대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및 대북관 정립과 대학내의 통일의식 확산을 위해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5년도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총 46편이 응모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선작을 선



정하였다.

나.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 정부는 2004년 12월 3일부터 2005년 2월 27일 기간 중 중·고교생과 교사 19,3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금강산 체험학습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는 중등학교 통일교과 담당교사와 중·고교생 등 17,000여명에 대해 금강산 체험연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 담당자들이 남북관계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현장학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중·고등학교 교사 등 15,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통일교육원의 사이버통일교육센터가 추진한 「도전 통일벨」 퀴즈 이벤트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과 통일교육시범학교 고등학생 2,000여명도 체험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온라인과 체험학습이 연계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 다. 사회통일교육 지원

### (1)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정부는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사회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22일 통일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으며, 동 협의회에는 2005년 연말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협회 등 88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도에도 국고보조금 4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회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도에는 주요 사업으로서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이 참여하는 통일교육 사례발표, 워크숍 개최 등 본부사업, 통일교육 연구소 사업,



여성·청소년·지역주민·시민 등 대상별 통일교육사업, 통일강좌, 통일포럼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 (2)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 지원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통일관련 교육프로그램, 시설 및 정보 등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5개 지역(춘천, 천안, 광주, 부산, 대구)을 중심으로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을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주체로 지정, 5개 센터별로 각 4천만원을 지원하였다. 5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총 41개 사업(176회)을 추진하였다.

### (3) 통일교육위원 활동 지원

정부는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5년 12월말 현재 통일교육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713명의 위원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는 남북관계 및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통일교육위원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713명 중 525명을 신규 위촉하였으며, 명칭도 ‘통일교육위원’으로 개칭하고 관리규정도 새롭게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들 위원의 교육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종 자료 제공 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대북지원 인도요원, 금강산 체험연수 등 총 332명에게 북한방문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베트남 등 구사회주의권 현장연수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교육위원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통일교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 연계체제도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다.

#### (4) 통일관 운영 지원

통일관은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관은 현재 부산, 광주, 인천, 청주, 대전, 제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자유총연맹,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전국 통일관에 있는 분야별 북한 안내시스템(터치스크린)에 대한 프로그램 교체 및 전시패널 7종 78개, 개성공단 생산물품 등 전시물품 5종 121개, 홍보안내 리플릿 20만부를 제작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북한위성 TV 수신기를 5개 통일관(부산, 인천, 광주, 경남, 제주)에 설치하였다. 2005년에는 총 330여만명의 국민이 통일관을 관람하였다.

라. 대상별로 특성화된 통일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정부는 다양한 통일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에 보급하고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통일교육관련 기본교재로서 『북한이해』와 『통일문제이해』, 통일교육총서는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등 3종, ‘통일문제강좌’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등 7종을 기획하여 발간하였다.

한편, 2005년에는 『한반도 어떻게 변하고 있나』 등 통일교육용 영상교재 총 3종을 제작하였다. 영상교재는 일반국민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중등과정 도덕 사회과 수업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이 밖에도 방북 예정자 교육용 교재로 활용 중인 『북한방문길라잡이』를 방북목적 및 대상별로 차별화하기 위해 우

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관광길라잡이』를 선보인다.

### 2005년도 통일교육교재 발간 현황

성 격	교 재 명	부 수	형 태	배포대상	
기본교재	통일문제이해	18,000	책	학교, 교육생,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 정부 기관 등	
	북한이해	18,000	책		
통일교육 총서	오늘의 마음으로 읽는 내일의 통일	1,000	책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1,000	책		
	북한경제 어디까지 왔나?	1,000	책		
통일문제 강좌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6,000	책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6,000	책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3,000	책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3,000	책		
	남북한의 역사인식 비교	1,000	책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1,000	책		
영상교재	남북한 IT 용어 비교	1,000	책		
	한반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3,000	비디오 · CD		소방방재청 등
	만화영화 「새」	3,000	비디오 · CD		각급 학교, 교육청
	평화와 번영의 길	90	비디오 · CD	현대아산 등	

## 제4절 국제협력 및 해외홍보 강화

### 1. 주요국과의 정책협약

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국가와 세 차례의 고위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05년 1월 27일부터 2월 3일에 걸쳐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하여 고위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가한 정동영 장관은 폐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전략을 밝히고 북한의 부산APEC 참여를 촉구하였다. 또한 하워드(John Howard) 호주 수상, 리치(James Leach) 미국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과 만나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북한 인권 문제 및 탈북자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정동영 장관은 다보스포럼 참석에 앞서 독일을 방문하여 쉴리(Otto Schily) 내무장관, 슈톨페(Manfred Schtolpe) 교통건설주택장관과 한·독 고위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코쉬크(Hartmut Koschyk) 연방의원,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ere) 전 동독 총리 등과 만나 한·독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현지 정부관계자, 학자 및 전문가들이 참가한 대북정책 홍보 심포지움의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한편 한·미 고위정책협의회차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한 정동영 장관은 체니(Dick Cheney) 부통령,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 졸릭(Robert B. Zoellick) 국무부 부장

관, 해들리(Stephen J. Hedley) 안보보좌관 등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의 면담내용 등 방미 직전에 이루어진 방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루가(Richard G. Lugar) 상원 외교위원장, 리치(James Leach)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등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미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워싱턴 방문에 앞서 뉴욕에서는 키신저(Henry A. Kissinger) 전 국무장관, 슈와브(George D. Schwab) 미 외교협회 회장 등 인사들과 면담하고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였다.

12월 1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하반기 한·미 고위정책협의회의에서 정동영 장관은 라이스 국무장관, 졸릭 국무부 부장관, 해들리 안보보좌관,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 머코우스키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하이글(Chuck Hagel) 상원의원, 리치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등을 만나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 북한 인권문제, 한미동맹 등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솔라즈(Stephen Solarz) 전 의원 등 유력인사들과 만나 6자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정동영 장관은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 연설에서 남북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평화를 이루고, 남북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화해와 평화가 필요하다는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제시하였다.

## 2. 통일주재관 운용

정부는 독일통일 직후인 1990년 12월 5일 독일주재 통일연구관을 파견한 후, 1996년 8월부터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일본·중국·독일 4개국에 통일주재관을 파견하고 있

다. 통일주재관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 외교 업무와 통일외교 업무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총력외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주재국에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 통일주재관은 주재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와 세미나 참가를 통해 대북정책 홍보에 주력하였다. 행정부, 의회, 언론,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내 여론주도층 인사들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홍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 확산을 도모하였다. 또한 주재국 정부 입장 파악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재국 대북정책 관련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 대북정책 수립에 반영하였다.

주재국 내 한반도문제에 관심 있는 다양한 정책고객에 대한 대북정책 홍보 및 의견수렴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일주재관이 주관하는 「한반도문제전문가회의」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한반도문제전문가회의」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등 현지에서 대북정책 관련 여론을 주도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네트워크로서 구성·운영되며, 분기 1회씩 정기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 주요 문제에 대한 정보교류, 정세평가 및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썬크탱크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전문가 네트워크는 주재국 정부관계자 및 외교안보 분야 학자 및 연구원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주재국에 대한 효과적인 대북정책 홍보를 위한 정책고객의 수요 파악 및 홍보 전략 수립과 관련한 자문단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통일주재관들은 현지에서의 민간급 대북접촉 및 방북을 지원하고 교포 및 현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방북절차·이산가족 상봉절차·대북투자절차 등을 수시로 상담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현지 상담창구 역할도 수행하였다.

**3. 국제 네트워크 강화** 주요 방한인사를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황과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지를 요청하는 노력도 전개하였다. 2005년에 통일부를 방문한 외국의 주요 고위 정부인사로는 라이스(Condoleezza Rice) 미국 국무장관, 다운너(Alexander Downer) 호주 외무장관 등이 있다. 정당, 의회와 주요 국제기구·연구기관 인사로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 에반스(Gareth Evans) 세계위기감시기구(ICG) 대표, EU 의회 대표단, 프랑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단, 리치(James Leach) 미국 하원 동아태 소위원장, 풀너(Edwin J. Feulner) 헤리티지재단 회장, 키신저(Henry A. Kissinger) 전 미국 국무장관, 페리(William Perry) 전 미국 국방장관, 슈와브(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사무총장, 펨펠(T. J. Pempel)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부르킹스 연구소 방문단 등이 있다.

또한 5월 남북차관급 회담 및 6·17 김정일위원장 면담, 제4차 6자회담 등 남북관계 관련 주요 회담이나 면담 개최 직후에는 미·일·중·러 등 주변 4국 및 EU 공관장을 대상으로 회담결과를 설명하고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계기별로는 주요 주한 외교사절을 면담하여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으로써 국제적 공감대 확산을 도모했다.

#### 4. 해외 정책홍보 확대

가.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 | 한반도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의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 평화 문제이기도 하다. 북핵문제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 확보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부는 2005년 '통일캐리반'이라는 이름 하에 주변4국 및 EU주요국의 정·관·학·언론계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여론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미국지역(4월 5일~10일, 뉴욕·워싱턴·로스앤젤레스 및 11월 26일~12월 4일, 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 일본지역(12월 19일~22일, 도쿄·니가타·나고야), 중국지역(4월 25일~29일, 장춘·북경·상해), 러시아지역(8월 27일~30일, 블라디보스톡·하산·우수리스크) 통일캐리반 실시를 통해 대북정책 순회설명회, 국제학술회의, 고위·실무 정책협의,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홍보사업을 패키지로 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지역과 국내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한 국제적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하였다.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평화협력원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협력 로드맵을 설명하였다.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중국 베이징(北京)대·푸단(復旦)대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내지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중국 베이징(北京)대학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는 평화번영정책의 기본 정신과 내용 및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명하였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한·중 국제심포지엄에서는 북한·중국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공동체에 대해 발표하였다.

통일부는 닛케이포럼(5월 25일~26일, 일본 동경), 한·중전략대화(7월 11일~13일, 중국 베이징), 한·러전략대화(10월 19일~24일, 러시아 모스크바),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 세미나(11월 10일, 미국 워싱턴), 북한문제와 남북관계 설명회(11월 21일~25일, 미국 워싱턴·뉴욕) 등 해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국제학술회의 등에 참가하여 정부



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한반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교환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다.

또한 통일부 장·차관을 비롯하여 주요 실무관계자들이 파이낸셜 타임즈, 일본 산케이신문 등 다양한 해외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이 밖에도 통일부는 다양한 영문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국제사회에 배포하였다. 5월에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Policy for Peace and Prosperity* CD 및 소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출품하였다. 또한 2005년도 통일백서 영문판 *White Paper on Korean Unification 2005*를 3,000부(전자책 1,000부 별도 제작) 발간하여 세계 170여개국 정부와 한반도문제 관련 국내외 전문가·연구소 및 주요대학 도서관, 해외 언론사, 해외주재 한국대사관, 주한 외국공관 등에 배포하였다.

한편, 2005년 6월 18일 주간 단위 영문 뉴스레터 발송을 개시하여 12월 말까지 27회를 발송했으며, 영문 정책 속보를 11회 발송하였다. 영문 뉴스레터는 남북관계 현황을 경제, 사회문화 등으로 구분하여 주요 진전 사항과 행사 등을 소개했으며, 또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시범 단지 가동과 본 단지 1단계 기업 입주 등 추진 현황을 홍보하였다. 특히 장관급회담 결과 등을 정책 속보로 보내어 현안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뉴스레터를 수신하는 해외 주요 인사들은 발송 초기에는 그 수가 380명이었으나 계속 확대되어 12월말 6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있어서도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의 학계, 언론계, 정계의 인사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영문 뉴스레터와 정책 속보를 통한 해외홍보는 정부 부처중 선도적인 것으로서, 국제화된 통

일문제와 남북교류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홍보 | 600만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한반도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남북간 화해와 협력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재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재외동포 사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재외동포 사회의 여론 형성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설명 활동을 전개하였다. 7월에는 「2005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50여개국 250명의 한인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정동영 장관이 ‘한반도 평화와 주변정세’라는 주제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봉조 차관은 10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재외동포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15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 토론회’에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포사회의 견해를 청취하였다.

또한 중국·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 신문·방송사 9개사에 「통일칼럼」을 정기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러시아연방 사할린 새고려신문사의 「무궁화 문학콩쿨」 등 동포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문화행사와 현지 대학 연구소의 한반도문제 관련 세미나를 지원하여 재외동포의 민족정체성 고양을 도모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사회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개방 확대

### 1. 북한 정보자료 제공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변화를 보여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같은 북한의 변화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변화전망을 예측하는 데 주력하였다.

2005년도에는 정치·외교·경제·사회·대남 등 전 분야에 걸쳐 880여건의 내부 보고서를 적시에 작성·공급하여 대북 정책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케 하였다.

한편, 계기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각종 회의 등을 수시 개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 북한에 대한 분석·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분야별 북한관련 정보자료를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정리한 「주간 북한동향」을 북한문제 연구기관 및 전문가 등 780여명의 정책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북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그동안의 책자 배포 방식을 보완하여 이메일 발송도 병행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간에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공개해 오고 있다.

국민들의 북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가급적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북한주민의 생활 및 의식변화 등에 중점을 둔 자료 제공을 위해 노력 하였다.

북한에서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간의 각 분야별 「북한 변화동향」을 종합 발간하여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실상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당·정·군 등 기관 단체들의 조직 및 인물들의

현황을 종합 정리한 『북한 기관 단체별 인명집』과 주요 인물에 대한 세부 활동사항을 정리한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를 발간,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에 제공하였다. 또한 북한의 연간 일정별 주요행사 및 공휴일과 1948년 이후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등을 수록하여 도표화한 『2006년도 북한주요행사에정표』도 발간·배포하였다. 최근 북한경제 실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의 북한경제 관련 동향 자료를 종합 정리하여 평가한 「2005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도 발간·배포하였다.

한편, 통일 및 북한문제에 관한 전문기관에 대한 자료 지원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북한연구 전문기관과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회의를 개최하여 정보자료 제공과 함께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하였다. 북한문제의 국제화 추세를 반영하고 국제적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등 관련국 정부기관 및 전문가, 연구소 등에 북한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정보 교류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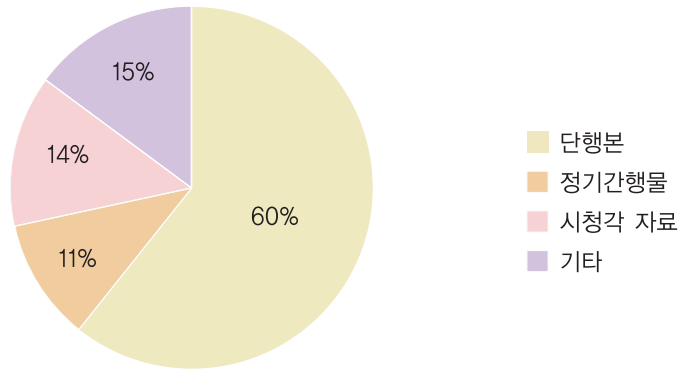
## 2. 북한 정보자료 개방 확대

통일부는 북한실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를 설립·운영해 오고 있다. 서울 광화문 우체국 건물 6층에 소재한 북한자료센터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고, 북한영화 상영 및 북한실상설명회 등을 통해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관련 도서자료 6만2천여 권, 정기간행물 1만여 권, 화일자료 3천여 건, 시청각자료 6천4백여 건, 통일부 발간물 3천7백여 건 등 총 8만6천여 건을 보유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북한 원전 자료 보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 북한 원전 자료 보유 현황

종 류	자료 건수
단행본	17,824
정기간행물	3,203
시청각 자료	3,990
기타	4,406
계	29,423



또한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단체 회원 및 새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설명회를 1989년 설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실상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2005년 한 해 34회를 개최하여 5,635명이 참가하였으며, 1989년 이후 2005년 12월말까지 총 369회의 북한실상 설명회가 개최되어 총 2만9천3백여 명이 참가하였다.

한편 북한의 예술영화, 아동영화 등 북한 영화 2,800여 편을 소장하고 있다.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기적으로 상영해오던 북한영화를 2000년부터는 인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의 5개 지방도시의 통일관으로 확대하여 상영하고 있다. 2005년

한 해 동안 북한영화는 총 489회 8만5천여 명이 관람하였고, 1990년 이후 현재까지 총 관람객은 4,045회 68여만 명에 이른다.

북한자료센터는 1998년부터 도서, 그림, 우표, 음반 등 북한 반입자료에 대한 심의를 총 260회 33,474건 하였으며, 1999년 12월에 통일부 소장 비이념성 북한자료 5천여 권을 일반자료로 공개하였다. 2003년에는 특수자료취급인가증 제도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수자료취급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북한자료의 이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대외적으로 2004년 국회도서관, 외교통상부, 통일연구원,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와 정보자료 교류협약 체결에 이어, 2005년도에는 연세대 통일연구원 및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정보교류 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협약 체결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감으로써 체결기관 간 북한자료 이용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 올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북한자료센터 서고를 전면 개가제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서고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북한자료 공개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1998년에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unibook.unikorea.go.kr)를 개설,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 13만 여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소장정보 및 원문을 제공, 이용자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0년에는 ‘북한영화 소개’ 코너를 신설, 북한영화의 줄거리와 동영상을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실’ 코너를 통해 북한교과서, 북한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북한실상 체험의 장’ 역할을 하고 있다.

1999년 10월 정부의 북한 TV 위성방송 시청 허용조치로 일반 국민들은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에서 북한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 프

로그램 편성표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TV의 시간대별 방송 내용을 알 수 있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결국 북한정보자료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정책으로 일반 국민들은 누구나 북한자료센터에서 영상자료를 포함한 모든 북한 원전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통일부와 정보교류 협약을 체결한 기관에 대해서는 북한자료의 대출과 복사까지도 대폭 허용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맞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수자료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북한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6절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업무 혁신

### 1. 혁신비전과 전략

가.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비전 | 통일부의 미래상을 담은 혁신비전은 2004년초에 4차례의 전직원 워크숍을 거쳐 설정되었다. 통일부가 당면하고 있거나 직면하게 될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굴한 뒤 혁신비전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통일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로는 조직환경과 조직내부 역량으로 나누어 입체적으로 진단했다. 첫째 국제 환경적 측면에서 한반도 문제가 점차 국제화되고, 남북관계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의 영역으로 확대·다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시야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둘째, 국내 환경적 측면으로는 전후 세대의 증가로 인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최근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북지원과 남북간 경제적 협력에 소극적인 여론들이 형성되어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통일부의 내부 역량측면에서 기존의 관행 위주의 업무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의 미래 설계를 위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정책품질을 높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변화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환경과 조직역량의 현주소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부가 지향해 나가야 할 혁신의 미래상으로 ‘국민과 함께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부’로 설정하였다. 이는 통일의 미래상은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극복과 함께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밝은 미래여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더불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밝은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통일부가 배양해나가겠다는 각오를 포함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혁신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2005년도의 구체적인 혁신목표로는 ‘열린 통일부’ ‘지식 통일부’ ‘일류 통일부’로 선정했다. ‘열린 통일부’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은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북정책의 입안과 추진 및 결과를 우리 국민은 물론 북한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여 합의와 공감에 기초한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지식 통일부’는 최근의 국제관계가 이념이라는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경제와 자원, 테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민족의 미래를 설계할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무의 전문성을 심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담고 있다. 가령,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비핵화 레짐(regime)에 관한 이해는 물론 핵물질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며, 남북간 경제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통행, 통관, 상사중재 등 경제분야의 전문지식도 구비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일류 통일부’는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함은 물론 대외적으로 주변국가와 공조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일부의 정책적 판단이 존중받는 일류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상황인식을 담고 있다.

나. 학습과 보상을 통한 참여형 혁신추진 전략 | 통일부의 비전과 혁신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혁신추진 체계 개편과 교육과 학습을 혁신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먼저, 기관장 중심의 혁신을 부서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혁신추진의 저변을 확대하였다. 이는 실국장들이 소속 직원들과 토론과 대화를 통해 각실

국의 특성에 맞는 혁신을 독려함으로써 혁신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구도하에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실국별 혁신보고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부서장이 혁신의 전면에 나서도록 하며, 또한 자체 혁신점검을 통해 실국별 혁신활동을 평가하고 우수실국은 보상을 함으로써 실국간 건전한 혁신경쟁을 유도하였다.

두 번째는 혁신교육과 학습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민간위탁교육과 공무원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직원들을 혁신의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 협력자로 바꾸어 나간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세 번째로는 혁신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을 적극 보상함으로써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 동기부여(positive incentive)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혁신활동을 평가하여 혁신 포인트를 부여하는 혁신마일리지제도를 운용하였다.

## 혁신목표와 전략 체계도

혁신비전	국민과 함께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부	
조직미션	남북간 신뢰증진과 경제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구축	
혁신목표	열린 통일부, 지식 통일부, 일류 통일부 구현	
혁신전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관장 중심에서 부서장 중심의 혁신추진체계 확산</li> <li>2. 교육과 학습을 통한 변화관리</li> <li>3. 혁신참여 유도를 위한 보상체계 시행</li> </ol>	
중점과제	고유과제	선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참여 통합기반 구축</li> <li>2. 통일, 외교, 안보부처 네트워크 강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성과계약제 도입</li> <li>2. 경력개발제도 도입</li> <li>3. 주요정책 발표 사전점검 시스템운영</li> <li>4. 온라인 홍보강화</li> </ol>
	기본과제	참여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 제고</li> <li>2. 민원제도 개선</li> <li>3.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li> <li>4.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운영</li> <li>5. 문서처리과정 전자화</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 중심의 지식관리 활성화</li> <li>2. 전문분야별 학습조직 운영</li> <li>3. 단계별 민원제도 개선 시스템 정착</li> </ol>

**2. 통일업무 혁신성과** 2005년에는 혁신과제와 혁신리더쉽, 혁신교육과 학습 분야에서 착실한 성과를 거양하여 정부혁신평가에서 다른 24개 부처와 함께 ‘변화노력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는 혁신 4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가. 혁신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참여 개선 | 고유과제(2개), 선도과제(4개) 및 기본과제(17개) 등 모두 23개의 혁신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 각 과제별 특성있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첫째, 고유과제로 「국민참여 통합기반 구축」 및 「통일, 외교, 안보 부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대북정책에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국



통일·외교·안보 부처  
고위급 워크숍

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대북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5년 8월에는 통일고객마일리지 시스템을 개통시켜 연말까지 약 3만4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국민들은 이러한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정책제안이나 참여활동을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마일리지 적립자에게는 금강산 관광, 대북인도요원 등의 활동기회를 부여했다.

또한 통일, 외교, 안보 부처간 교류와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총 7회에 걸친 합동워크숍에 7개 부처에서 연인원 650여명이 참석하여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교환과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실무자급 워크숍에서는 친선 체육경기를 통해 함께 땀을 흘리면서 부처의 벽을 넘는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어 통일, 외교, 안보 커뮤니티라는 동질감을 나눌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현안문제에 대한 부처별 '터널비전'을 극복하고 균형잡힌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둘째, 선도과제로는 18개 정부 공동과제 중에서 인사 및 정책홍보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인사 분야에서는 「직무성과과제

약제」와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과제로 선택하였다.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을 통해 향후 3~5년의 통일부 업무 추진방향에 입각한 조직의 미션과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개인의 성과목표를 도출하게 함으로써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성과계약을 통해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성과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력개발제도(CDP) 도입 준비를 통해 순환보직에 따르는 폭넓은 시야도 확보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배양할 수 있는 인사제도 도입 준비를 마쳤다.

한편 인권전문가, 대북에너지 전문가, 남북경제협력과 평화체제 및 법률 전문가 등 전문인력(8명)을 특별채용하여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승진인사 다면평가에 실무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행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정책홍보분야에서는 ‘주요정책 발표 사전 점검시스템’ 과 ‘온라인 홍보 강화’ 를 선택하여 추진하였다. 먼저, 국민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경제협활성화를 위한 기금제도 개선 등 14건에 대해 사전홍보협의를 거쳐 발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였다.

온라인 홍보는 특히 통일주역세대가 될 청소년층의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의 성과를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3차례의 전자공청회와 온라인 게임(카트라이더)에 통일 캐치프레이즈 광고판 설치, 사이버 통일 4행시 공모전 등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이밖에 기본과제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문서처리과정 전자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했다. 새터민, 이산가족 등 정책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제도 개선과 일선기관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통일부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또한 연공서열이 아닌 일한만큼 대우받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실적에 기반하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균형성과평가(BSC) 기본설계를 마쳤다. 2005년 동안 전자문서의 유통율이 99.3%에 이르는 등 종이와 사라지는 사무실 환경도 구현하였다.

통일부는 또한 업무중심의 지식관리, 전문분야별 학습조직 운영 등 직원들의 업무관련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과 환경조성에도 역점을 두었다. 이 결과 연간 약 3,000건의 지식자료가 지식관리망(KMS)에 등록되었고, 등록된 지식은 약 36,000여회 열람되어 등록 지식건당 12회의 활용율을 보였다. 또한 대북지원전략 연구반 등 약 30여개의 온/오프라인 연구커뮤니티가 구성되어 관심분야별 전문지식이 축적시켜 나갔다.

**나. 자율적 혁신추진 역량 강화** | 직원들의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고, 혁신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교육이 실시되어 혁신저변 확대와 일상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간부급, 실무급 등 다양한 교육에 직원들의 75%가 참석하여 일상적 혁신 추진의 공감대를 넓혔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특히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습동아리와 브라운백 런치 세미나 등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 대북지원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전문지식을 축적해나갔다.

각 실국별로도 자체 혁신추진팀을 구성하여 특성있는 혁신을 추진해나갔다. 다양한 가치와의 공존을 강조하는 ‘플레랑스 포럼’이나, 북한경제연구모임 등을 통해 남북통합에 대비하고, 남북경제협력에 대비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자체 혁신점검반을 구성하여 각 실국의 혁신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였다. 혁신점검반의 점검결과는 혁신보고대회시 보고하고, 우수 실국 소속 직원들에게는 혁신마일리를 부여했다. 직

원들의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혁신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 활동자에게는 포상금과 특별휴가를 실시하였다.

혁신추진에 대한 조직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혁신자문위원회도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혁신의 방식 등에 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그러나 일부 학습조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조직 구성원의 다양한 시각을 장차관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혁신기사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있었다.

다. 대화 잘하고 학습 잘 하는 조직문화 건설 | 분단의 벽을 넘어 민족의 통합을 주도하는 통일부의 직원들이 업무를 핑계로 과와 실국간 벽이 존재한다는 따가운 지적이 내부로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부서간, 직급간 ‘벽’을 허물고 소통의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직원들이 하던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한곳에 모여 담소를 하는 모임을 시작하였다. 이후 이 모임은 ‘수다회’로 불리며 꾸준히 개최되어 오면서 각종 시상식과 중요사항까지 발표하는 장소로 발전하게 되어 ‘대화 잘하는’ 통일부의 조직문화를 선도하였다. 또한 탄력근무제, 직원 친절운동, 부서장의 직원면담제도, 실국별 혁신워크숍 등을 통해 부서내 직급간, 부서간 의사소통이 장애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2005년 7월부터 주5일제 근무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통일부 직원들이 늘어난 여가를 독서를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통일부 권장도서 1,000권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이후 부내 독서 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 권장도서 독후감 경진대회도 개최하였다. 독후감 경진대회에는 직원은 물론 직원자녀들도 참가하여 독서를 매개로 온가족이 통일문제에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2005년 7월에는 교류협력국 직원들이 남북협력기금의 효율적 이용방안, 남북에너지 협력방안 등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자료를





브라운 백 런치 세미나에 초청된 고은 시인이 직원들과 토론하는 장면

모아 『업무지식화 발표자료』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밖에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의 일환으로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을 하는 브라운 백 세미나를 매월 1회씩 개최하였다.

한편, 통일부의 혁신과 대북정책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2005년 5월에 개최된 정부혁신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다. 박람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홍보하고자 리플릿 『평화와 번영의 실천』(국·영문판)을 제작·출품하였고, 통일부 부스를 마련하여 방문객들에게 직접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통일 행정 서비스 | 2005년 한해 동안 민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먼저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05.5.31)하여 남북교류에 따르는 법과 제도 및 절차를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고쳤다. 구체



적으로 남북간 통행절차를 간소화하여 비무장지대 남북관리구역 통행시간을 20분 단축하였다. 또한 남북간 물품의 반출입과 통관 및 검역절차를 개선하여 남북경협 기업의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시켰다. 남북협력기금의 대출제도와 손실보조제도를 개선하여 대북투자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민원·제도개선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고,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평가의 평가지표로 정책고객분야를 신설하는 등 민원 및 국민참여 관련 실적을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부록

2005년 남북관계 주요 일지



---

# 2005

---

## 남북관계 주요 일지

---

- 1. 13 북한, 남한에 비료 50만톤 지원 요청
- 1. 16 제3차 식량차관 분배현장 확인(송림)
- 1. 20 미국 제2기 부시정부 출범
- 1. 21 제3차 식량차관 분배현장 확인(청진)
- 1. 25~26 한전-북한 특구총국, 개성공단전력공급 실무협의
- 1. 31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남측준비위 발족
- 2. 8 2004년도 대북식량차관 쌀 40만톤 인도 완료
- 2. 10 북한 외무성 성명, '핵무기 보유, 6자회담 무기 중단' 선언
- 2. 10 외교통상부 대변인, '북의 핵무기 보유 불용' 입장 재천명
- 2. 11 KT, 북한 특구총국과 개성공단 통신협상(개성)
- 2. 11 국방부, 제3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제의
- 2. 19~21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 출범식(금강산)

- 2. 20 평양방송, 남북대화 중단 책임을 남한측에 전가
- 2. 22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 접견시 “6자회담 조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회담에 나갈 것이며, 미국이 믿을 만한 성의를 보이고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언급
- 2. 26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북핵 상황 협의(서울)
- 3. 18~21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동북아 순방
- 3. 27 북한 평양 하당 닭공장 등 2~3개 닭공장에서 조류독감 발생
- 3. 28 통일부, 북한 조류독감 관련 차관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
- 3. 29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남한측 지역으로 조류독감 확산방지 조치 요구, 관련정보 제공요청,약품·장비·기술지원 용의 등을 표명한 대북 전통문 발송
- 3. 29 빗딧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탈북자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에 다양한 보호·지원을 요청하는 인권보고서 발표
- 4. 19~23 KEDO-북한 회의(향산), 기존합의 효력 재확인
- 4. 19 한적 총재, 북한측에 ‘조류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한 약품 및 장비 전달 계획’
- 4. 19 한성렬 UN 주재 북한 차석대사, “북한은 영변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으며,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계획”(USA투데이)
- 4. 22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원 관련 남북실무접촉
- 4. 23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아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에서 회동, 남북 당국자회담 재개 필요성 공감
- 4. 25 금강산 임시도로 CIQ 개설·운영
- 4. 27~28 개성공단 본단지 전력공급 부속합의서 협의(개성)

- 5. 2~4 개성공단 시범단지 추가 전력공급
- 5. 3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 국무부가 「2004년 테러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명한 데 대해 공식 반박
- 5. 3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5. 16~19 남북차관급회담(개성)
- 5. 20 대북지원 비료 20만톤 전달 시작
- 5. 23~24 KEDO 집행이사회(뉴욕)
- 5. 24 6·15통일대축전 당국 대표단 파견 관련 1차 남북실무협의를(개성)
- 5. 26 미 국방부, 북한지역 미군유해발굴 공동작업 잠정 중단 발표
- 5. 27 6·15통일대축전 당국 대표단 파견 관련 2차 실무협의를(개성)
- 5. 27 개성공단 전력요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개성)
- 5. 28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납치피해자·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 의회 제출
- 5. 28 6·15통일대축전 당국 대표단 파견 관련 3차 실무협의를(개성)
- 6. 4~7 6·15 통일대축전 남북해외공동행사 남한측 준비위 백낙청 상임 대표 등 방북, 남한측 대표단규모 300명 잠정 합의
- 6. 6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 조셉 디트리니 미국 국무부 대북 협상대사 접촉(뉴욕)
- 6. 7 금강산관광 100만명 돌파 기념식 및 금강산 열린음악회 개최
- 6. 7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 담화 발표
- 6. 7~9 한완상 한적 총재, 북한 아태평화위 리종혁 위원장과 이산가족 상봉행사·면회소 조기 착공 등 의견 교환
- 6. 10 한미정상회담(워싱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 재확인

- 6. 14~17 6·15 통일대축전 참가 대표단 방북(민간 295명, 당국 34명)
- 6. 17 정동영 장관,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 6. 19 봄철 대북비료 20만톤 수송 완료
- 6. 20 한일 정상회담(서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 확인 및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 지속과 한·미·일 긴밀공조 합의
- 6. 20 한성렬 주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미국이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 of tyranny)’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 7월중 6자회담 복귀” 표명
- 6. 21~24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 6. 21~25 KEDO 실무협의를(향산)
- 6. 22 애덤 어럴리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 북한에 식량 5만톤 지원 결정 발표
- 6. 22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설립 발표
- 6. 24 한완상 한적 총재-장재언 북한적십자회 위원장, 남북 적십자간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 6. 29~7. 3 정동영 장관, 한·미고위급 정책협의차 방미
- 6. 29 대북 비료 추가지원분 15만톤 수송 시작
- 7. 3 중·러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발표
- 7. 5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안) 대북발송
- 7. 6 국회,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문’ 채택
- 7. 7~8 KEDO 집행이사회(뉴욕)

- 7. 9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차관보 회담 (북경)
- 7. 9~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서울)
- 7. 12 정동영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제안' 내용 발표
- 7. 12 한·EFTA간 FTA 협상 타결, 국내산 자재 투입비용 60% 이상인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등
- 7. 18~30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관련 측량 및 지질조사
- 7. 19 미국 프리덤하우스, 제1회 북한인권국제회의(워싱턴)
- 7. 20 제3차 장성급 군사회담 제3차 실무대표회담
- 7. 22 8·15당국행사 제1차 실무협의
- 7. 24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 접촉, 중대제안 등 관련 의견 교환(북경)
- 7. 25 대북 비료 추가지원분 15만톤 전달 완료
- 7. 25~27 제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개성)
- 7. 26 대북식량차관 차관계약서 합의(7.25) 및 육로 첫 수송 시작
- 7. 26~8. 7 제4차 6자회담 개최(북경) 및 의장성명 발표
- 7. 28~30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개성)
- 7. 29~30 8·15 민간행사 관련 제2차 실무접촉 개최(개성)
- 7. 30 이산가족면회소 측량 및 지질조사 종료
- 8. 4 2005동아시아연맹축구선수권대회 남북한경기(전주)
- 8. 8~10 제5차 남북해운실무접촉(문산)
- 8. 10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단독조사 결과 상호교환
- 8. 10 남북통신연락소(도라산 군 상황실~개성시) 개통
- 8. 12 남북장성급 회담 제4차 실무대표회담(관문점)



- 8. 14 8·15남북공동행사 북한측 대표단 방남 및 국립현충원 방문
- 8. 14~17 8·15 남북공동행사
- 8. 15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범실시
- 8. 18~20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회의(개성)
- 8. 23 국회의장 명의 대북서한, ‘한반도 평화실현과 6.15공동선언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결의문’ 전달
- 8. 23~25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 8. 24~27 남북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제1차 실무협의(평양)
- 8. 26~31 제11차 이산가족상봉(금강산)
- 8. 26 제1차 개성 시범관광 실시
- 8. 28 북한, 한미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 및 백악관 대북 인권특사 임명을 비난하며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을 2주 연기한다고 발표
- 8. 31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착공
- 9. 1~4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인천), 북한 선수단 참가
- 9. 12 개성공단 1차 5만평 입주기업(18개)선정·발표
- 9. 13~16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평양)
- 9. 13~19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개최, 6개항 공동성명 발표(북경)
- 9. 14 대북식량차관 제1차 분배현장 확인(개성, 고성)
- 9. 29~30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 10. 28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개소(개성)
- 10. 2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개성)
- 11. 1 2006년 아시아경기대회 및 2008년 북경올림픽 남북한 단일팀 구성 합의
- 11. 5~10 제12차 이산가족상봉행사(금강산)

- 11. 9~11 제5차 6자회담(북경)
- 11. 11~18 국제적십자사연맹 총회(서울), 북한대표단 8명 참가
- 11. 17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 채택
- 11. 17 한미 정상회담(경주), '한미 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09.19 공동성명' 에서 제시된 조치들의 이행약속 재확인)
- 11. 18~19 APEC 정상회의(부산)
- 11. 21~22 KEDO 집행이사회(뉴욕), 경수로 건설사업 종료에 합의
- 11. 22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발굴 및 봉환 남북실무접촉(개성)
- 11. 23~2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급 실무접촉(개성)
- 11. 24~25 제2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남북한 각 40가족)
- 12. 8~9 제3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남북한 각 40가족)
- 12. 8~10 북한인권 국제대회(서울)
- 12. 13~16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제주도)
- 12. 28 문산전화국~개성전화국~개성공단 간 통신개통으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간 상업용 통신망 연결



## 2006 통일백서

---

인쇄일 | 2006년 3월 25일

발행일 | 2006년 3월 30일

발행처 | 통일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정부종합청사

전 화 | 02)2100-5741 팩스 | 02)2100-5749

편집 · 인쇄 | 다해미디어 02) 722-7123